

2016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of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국회예산정책처 소개

설립 근거 및 목적 「국회법」 제22조의2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3년 10월에 설립된 입법부의 재정전문 의정지원기관입니다.

직무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정활동의 주체인 국회의원을 지원하고자 재정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견지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2.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3.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4. 국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

5.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등

업무추진 기본방향

비전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최고의 재정전문기관

미션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

· 통찰력 있는 재정분석과 법안비용추계

· 신뢰성 있는 재정·경제 전망과 조세분석

· 객관적인 재정사업 평가

직무수행 원칙

전문성

중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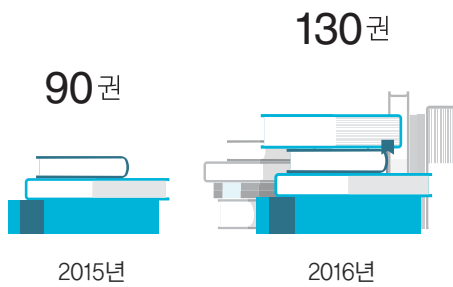
독립성

신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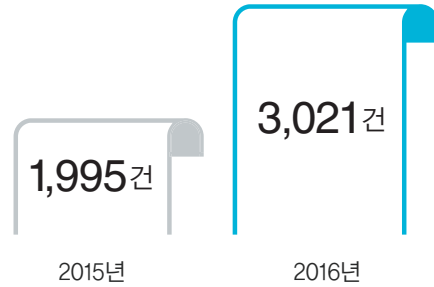
한눈에 보는 2016년 주요성과



분석보고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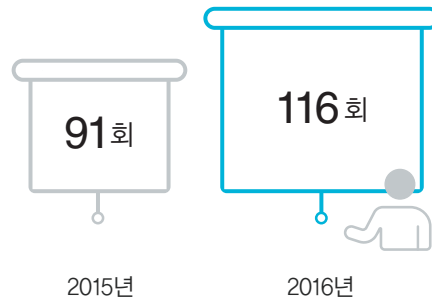
법안비용추계 및 세수추계



국회의원 요구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회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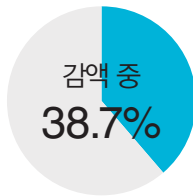


세미나·포럼·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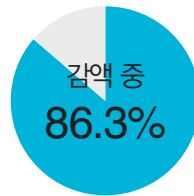
NABO 보고서를 활용한 2016년 예·결산 국회심사

2017년도 예산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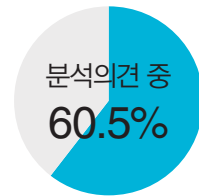
국회 의결 감액 5,7조원 중
2,2조원(142건) 반영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국회 의결 감액 4,654억원 중
4,018억원(10건) 반영

2015회계연도 결산 분석



분석의견 646건 중 391건
정부에 대한 국회 시정요구사항 반영

2017년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 8위 진입

한경비즈니스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 경제·산업 부문 역량 조사
(2017. 1. 17.)

2016년		2017년	
1	국회예산정책처	1	한국개발연구원
2		2	삼성경제연구소
3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4	한국금융연구원
5		5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6		6	산업연구원
7		7	LG경제연구원
8		8	국회예산정책처 ↑ 5
9		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0		10	자본시장연구원
11			
12			
13			

사진으로 보는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도 국회예산정책처 시무식



1월 4일, 국회의정관 105호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국회예산정책처 시무식을 거행하였다.

2016년도 국회의장 신년업무보고



1월 15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소속기관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2016년도 신년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NABO 국방재정정책 포럼



3월 29일, 국회 의원식당 별실에서 NABO 국방재정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제5회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수상



4월 22일,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개최된 제5회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정책대상을 수상하였다. 한국정책학회는 정책대상 선정 이유로 국회의원들의 법안비용추계 요청이 2015년 1,994건으로 전년 대비 357%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예산정책처가 한정된 인력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정확한 국세수입 추계(2015년도 적중률 99.9%)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점을 들었다.

사진으로 보는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미국 의회예산처와 MOU 체결



5월 17일, 국회예산정책처는 미국 워싱턴 D.C. 소재 미국 의회예산처(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 처장 Keith Hall)에서 양 기관 간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양해각서는 두 기관 간의 공통관심사항인 예산분석, 중장기 경제·재정전망, 법률안 비용추계 등 핵심직무에 대한 공동연구와 정보교류, 공동 학술대회 개최, 직원 간 상호교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20대 국회 초선의원 대상 예·결산 심사방법 설명회



6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3소회의실에서 제20대 국회 초선의원 대상 예·결산 심사방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제20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정세균 국회의장 당선인사



심재철 국회부의장 당선인사



박주선 국회부의장 당선인사



6월 9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장 취임 후 첫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장에게 부여된 막중한 소임에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제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며 향후 포부를 밝혔다.

사진으로 보는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

정세균 국회의장 업무보고



6월 30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소속기관으로부터 취임 후 첫 공식업무보고를 받았다.

정세균 국회의장 NABO 방문



7월 20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하여 처 간부진들과 간담회 시간을 가진 후, 직원들을 격려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3주년 기념식



10월 19일, 국회의정관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이은철 국회도서관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등 국회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3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국회예산정책처-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업무협약식

2016년도 제2차 예산정책자문위원회



11월 10일, 국회 사랑재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국회예산정책처-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업무협약식」을 거행하였다.



12월 16일, 2016년도 제2차 예산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원장)를 개최하였다.

사진으로 보는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



김준기 처장 개회사



정세균 국회의장 격려사



김현미 예결위원장 축사

10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2017년도 예산안 개요”를 주제로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2017년도 예산안 분석”을 주제로 조용복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의 발제에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과 김태일 고려대 교수, 최병호 부산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 –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



7월 14일, 제20대국회 개원을 기념하여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개원한 제20대국회가 주요 현안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국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 – 인구·복지·재정: 넥스트 챌린지



7월 19일, 제20대국회 개원을 기념하여,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핵심이슈로 떠오른 인구·복지·재정이라는 3가지 상호의존적 변수들이 던지는 도전적 상황을 재조명하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범국가적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인구·복지·재정: 넥스트 챌린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사진으로 보는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

「저출산 위기, 길을 찾다」 세미나



10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출산의 위기와 이를 해결할 정책대안에 대한 모색을 위해 「저출산 위기,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조세정책토론회 - 201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10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6년 세법개정안」을 주제로 조세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제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의 정책방향이 대내외 경제환경과 재정여건 변화에 부응하는지 평가하고, 개정내용의 타당성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기획되었다.

「NABO-UNEP FI」 국제공동 세미나



11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후환경규제와 산업·금융의 변화'라는 주제로 「NABO-UNEP FI」 국제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홍기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Eric Usher 대표(UNEP FI)가 '기후·환경·규제와 금융'에 대해, Anthony Serhan 전략본부장(Morningstar)이 '기후·환경·규제와 산업'에 대해, 고기석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이 '기후·금융·산업: 책임과 법'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용주 환경산업기술원 원장, Omar Selim CEO(Arabesque Partners),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기후환경규제와 산업·금융의 변화에 대한 주요 논점과 개선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사진으로 보는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

대외협력



쿠웨이트 KSP 정책실무자연수단 NABO 방문

2월 16일, 칼레드 마흐디(Khaled Mahdi) 기획개발최고위원회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쿠웨이트 KSP 정책실무자연수단 2인이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하여, 국회예산정책처 기능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이후 사업평가국의 국가사업평가업무에 대해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러시아 연방재무부 대표단 NABO 방문

2월 26일, 세르게이 프리호드코(Sergey Prikhodko) 러시아 연방 재무부 집행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대표단 10인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방문하여 처장을 예방하였다. 대표단은 예산수립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예산편성 및 결산과 관련하여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제8회 「OECD 회원국 의회예산기관 및 독립재정기관 회의」 참석



4월 11~12일 양일간 김광욱 예산분석실장을 단장으로 한 국회예산정책처 대표단이 프랑스의 OECD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제8회 OECD 회원국 의회예산처 및 독립재정기관 회의(The 8th Meeting of OECD Parliamentary Budget Officials and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호주 등 30여개국의 OECD 회원국 대표단과 IMF,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대표단은 회의를 통해 글로벌 금융·거시경제 위험과 독립재정기관의 역할, 기업 법인세 분석 및 중기재정 관리체계에 대하여 각국 대표단과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독립재정기관에 대한 평가 세션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사례에 대해 소개하였다.

대외협력



헝가리 국가경제부 대표단 방문

4월 11일, 리타 헤베이(Rita Hevei) 국가경제부 행정사무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헝가리 대표단 5인이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하여 조세지출을 활용한 투자 촉진,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 균형 발전과 조세지출평가제도에 대해 토론하였다.



아프리카 카메룬 대표단 방문

6월 23일, 저스틴 론 킨제카(Justin Lon Kindzeka) 조세국 조세 감사관 등 카메룬 대표단 13인이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하였다. 방문단은 국가예산제도에 대해 양국 간 비교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KDI 국제회의의 대표단 방문

7월 8일, KDI 국제회의에 참석한 벤 그래함(Ben Graham) 아시아 개발은행 선임평가전문관 등 32인이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얀마 의회 대표단 방문

11월 14일, Zaw Min(짜 민) 미얀마 상원의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일행 15인이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하였다. 방문단은 국회예산정책처 조직 및 기능에 대해 소개받고,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국회 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해 상호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으로 보는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

교육 및 특강



4월 15일, 최인철 서울대학교 교수를 초빙하여 '행복한 삶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핵심역량강화특강을 실시하였다.



9월 1일, 최재천 국립생태원장을 초빙하여 '21세기 통섭형 인재'라는 주제로 핵심역량강화특강을 실시하였다.



12월 8일, 김재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12월 14일, 문형철 (前)양궁 국가대표 총감독을 초빙하여 '32년간 세계정상을 지켜온 대한민국 양궁으로부터 배우는 가치'를 주제로 핵심역량강화특강을 실시하였다.

2016년 직원 연찬회



3월 22~23일, 경기도 수원에서 2016년 상반기 직원 연찬회를 실시하였다.

제68주년 국회체육대회



5월 27일, 국회개원 제68주년을 맞이하여 국회운동장에서 국회 전직원이 참여한 국회체육대회가 열렸다. 배구를 비롯하여 계주, 피구 등 다양한 종목에서 열띤 경기가 펼쳐졌다.

차 례

I. 연구·분석 업무 / 1

1. 정기 분석보고서	3
✖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6	3
✖ 대한민국 재정 2016	4
✖ 2016 경제·재정수첩	5
✖ 결산분석시리즈 I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5
✖ 결산분석시리즈 II 201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	6
✖ 결산분석시리즈 III 2015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 분석	7
✖ 결산분석시리즈 IV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8
✖ 결산분석시리즈 V 2015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9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10
✖ 예산안분석시리즈 I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11
✖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17년도 예산안 거시·총량 분석	12
✖ 예산안분석시리즈 III 2017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13
✖ 예산안분석시리즈 IV 2017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14
✖ 2016년 수정 경제전망	15
✖ 2015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16
✖ 2016~206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17
✖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 2017년 및 중기 경제전망	18
✖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I 2016년 세법개정안 분석	19
✖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II 2016~2020년 국세수입 전망	20
✖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V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 분석	21
✖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V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22
✖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VI 2017년 세입예산안 분석 종합	23
✖ NABO 경제동향 & 이슈(제39호)	24

※ NABO 경제동향 & 이슈(제40호)	26
※ NABO 경제동향 & 이슈(제41호)	27
※ NABO 경제동향 & 이슈(제42호)	29
※ NABO 경제동향 & 이슈(제43호)	31
※ NABO 경제동향 & 이슈(제44호)	32
※ NABO 경제동향 & 이슈(제45호)	34
※ NABO 경제동향 & 이슈(제46호)	36
※ NABO 경제동향 & 이슈(제47호)	37
※ NABO 경제동향 & 이슈(제48호)	38
※ NABO 경제동향 & 이슈(제49호)	39
※ NABO 경제동향 & 이슈(제50호)	40
※ 2015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I [총괄·성과관리]	41
※ 2015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II [다부처/경제·산업/사회·행정]	42
※ 2015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43
※ 2016년도 국가주요사업 집행점검·평가	44
※ 2016 공공기관 이슈브리프	45
※ 2017년 공공기관 정부지원사업 평가	46

2. 정책·현안 보고서 47

※ 경제현안분석 제90호 일본의 장기침체기 특성과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	47
※ 경제현안분석 제91호 아동 관련 복지분야의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지원 현황 및 시사점	48
※ 경제현안분석 제92호 주택가격 변화가 가계부채와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	49
※ 사업평가 16-01 교통 SOC 공공기관 투자사업의 재무성 평가: 고속도로,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50
※ 사업평가 16-02 기초연금제도 평가	51
※ 사업평가 16-03 지역산업경쟁력강화사업평가	52
※ 사업평가 16-04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 평가	53
※ 사업평가 16-05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평가	54

※ 사업평가 16-06 주택담보대출정책 평가	55
※ 사업평가 16-07 기초연구지원 R&D사업 평가	56
※ 사업평가 16-0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평가	57
※ 사업평가 16-09 아동복지사업 평가 - 요보호아동 보호·자립지원 및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58
※ 사업평가 16-10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제도 평가	59
※ 사업평가 16-11 농식품 수출지원 사업 평가	60
※ 사업평가 16-12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	61
※ 사업평가 16-13 공공기관 출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62
※ 사업평가 16-14 공적 연기금 책임투자 평가	63
※ 사업평가 16-15 Post-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 및 해외배출권 확보 방안 분석	64
※ 사업평가 16-16 일학습병행제 성과 평가	65
※ 사업평가 16-17 경찰인력 증원 및 운용 평가	66
※ 사업평가 16-18 노인일자리 평가	67
※ 사업평가 16-19 공공기관 요금체계 평가	68
※ 사업평가 16-20 사회기반시설 투자정책 평가	69
※ 사업평가 16-21 공공 기후금융 정책 평가	70
※ 사업평가 16-22 국방 전력지원체계 조달사업 평가	71
※ 사업평가 16-23 농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 평가	72
※ 사업평가 16-24 미래성장동력 정책 평가	73
※ 사업평가 16-25 시설물 안전관리 평가	74
※ 사업평가 16-26 저출산 대책 평가 I [총괄]	75
※ 사업평가 16-27 저출산 대책 평가 II [정책 우선순위]	76
※ 사업평가 16-28 저출산 대책 평가 III [정책환경]	77
※ 사업평가 16-29 저출산 대책 평가 IV [일자리]	78
※ 사업평가 16-30 저출산 대책 평가 V [가족양육]	79
※ 사업평가 16-31 저출산 대책 평가 VI [교육]	80
※ 사업평가현안분석 제58호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현안과 개선과제 ...	81

※ 사업평가현안분석 제59호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현황 및 개선과제	
- 수송 및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82
※ 사업평가현안분석 제60호 지방교육재정 운용 분석	
- 학생수 감소를 중심으로	83
※ 사업평가현안분석 제61호 공공갈등 관리현황 분석	
- 국회의 갈등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84

3. 특별·연구·기획 보고서

※ [제20대 국회 개원] 대한민국 재정 2016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6	85
※ [제20대 국회 개원]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법률 개선과제	86
※ [제20대 국회 개원] 주요국의 재정제도	87
※ [제20대 국회 개원] 재정사업평가와 사례	88
※ [제20대 국회 개원]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조세개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국제조세, 조세지출, 통계편	89
※ 제19대 국회 세법개정안: 주요내용과 쟁점/목록 및 요약	90
※ 조세특례평가 방법 연구	91
※ 재정지출의 분야별 경제적 효과분석 모형 연구	92

II. 국회의 위원회 및 국회의원 요구사항의 조사·분석 업무 / 93

1. 일반 조사분석 요구 및 회답	95
가. 2016년 처리 현황	95
나. 최근 5년간 추이	95
다. 신청 및 회답 절차	96

2. 법안비용추계 현황	98
가. 법안비용추계 개관	98
나. 법안비용추계 의뢰 및 회답 현황	98
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 비중	100
라. 관련 보고서 발간	101
3. 세입관련 법률안 세수변화 추계	102
가. 세입관련 법률안 세수변화 추계 현황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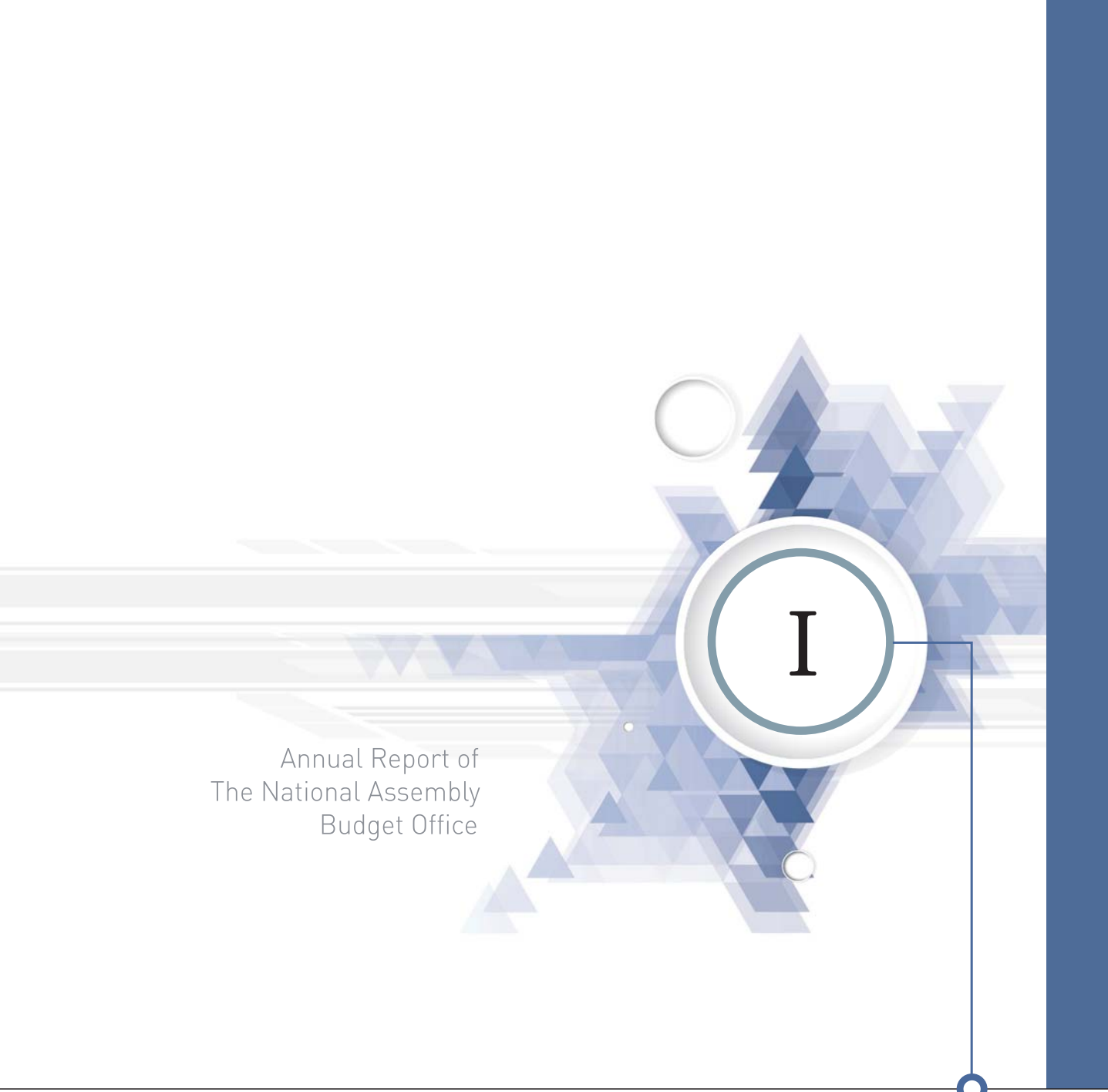
III. 주요 사업 및 활동 / 105

1.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지원	107
가.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	107
나. 제20대국회 초선의원 대상 설명회 현황	111
다. 국회의원 대면보고 현황	111
2. 정책 토론회 개최	113
가.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 -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	113
나.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 - 인구·재정·복지: 넥스트 챌린지	115
다. ‘저출산 위기, 길을 찾다’ 콜로키움	118
라. 조세정책토론회: 「201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120
3. NABO-UNEP FI 국제공동 세미나: 기후환경규제와 산업·금융의 변화 ·	123
4. 전문가 간담회 및 포럼 개최 현황	128
가. 전문가 간담회 현황	128
나. 포럼 현황	133
5. 정보화 사업	135
6. 대외협력	140
가. 국제교류	140
나. 제8회 OECD 회원국 의회예산기관 및 독립재정기관 회의	142

7.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144
8.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발간	146
9. 교육훈련	148
10. 직원연구모임	150
11. 연구용역	151
12. 2016년도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153

IV. 부록 / 155

1. 조직 및 예산	157
가. 조 직	157
나. 인력충원	159
다. 인사 및 상훈	161
라. 예 산	165
2. 연 혁	166
3. 관계 법규 및 제·개정 현황	167
가. 국회법	167
나. 국회예산정책처법	167
다.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170
라. 법규 제·개정 현황	177
4. 언론보도 현황 및 보도자료 배포 통계	180
5. 발간물 총 목록	181
가. 정기보고서	181
나. 정책·현안 보고서	184
다. 특별·연구·기획 보고서	185
라. 정기간행물	186



Annual Report of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연구 · 분석 업무

1. 정기 분석보고서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6

- 발간일 : 2016년 2월 5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 ISBN : 978-89-6073-879-9 93350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6」은 2016년 재정의 개요 및 특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확정예산에 대한 정보를 국민과 국회의원에게 가장 먼저 전달하기 위해 2016년 2월 발간하였다.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사될 때에는 국민적 관심이 국회와 예산안에 집중되지만,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 관심이 크게 줄어들고 확정예산에 대한 설명 역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국가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국민과 더불어 예산 심의·확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가 확정한 2016년 예산의 총량과 주요내용, 자원배분의 특징, 국회 심의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록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6」을 발간하였다.

이 책의 특징은 그림과 도표 형태로 재정개요 및 2016년 예산을 설명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복잡한 국가재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각 부처별 주요 사업의 예산규모, 사업내용과 대상 등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재정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각종 재정 현안 관련 질의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6」은 제1장 재정총량, 제2장 재정건전성, 제3장 예산과 기금, 제4장 예산안 국회심의, 제5장 상임위원회별 재정 현황 등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대한민국 재정 2016

- 발간일 : 2016년 3월 14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 ISBN : 978-89-6073-881-2 93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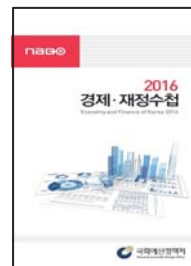
국회가 심의·확정한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의 총수입은 391.2조원, 총지출은 386.4조원, 관리재정수지는 36.9조원 적자이다. 국가채무는 644.9조원으로 2015년 대비 49.8조원이 증가하여 GDP 대비 4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가 2001년 121.8조원에서 연평균 11.8%의 증가율로 늘어나고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가채무 관리와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 정부의 재정운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는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대한민국 재정」, 「경제·재정수첩」 등을 발간하여 주요 재정제도와 현안, 그리고 다양한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민국 재정 2016」은 지난 2015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6년도 확정 예산에 대한 국회 차원의 해설서이다. 본 책은 제1부에서 우리나라 재정 체계 및 주요 재정제도를 정리하고, 제2부에서 2016년도 예산·기금의 주요 내용과 국회 심사내역을 다루고 있다. 제3부에서는 16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처의 재정 현황과 재정사업을 분석·정리하고, 주요 재정·경제통계를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대한민국 재정 2016」에서는 「대한민국 재정 2015」와는 달리 주요 재정제도를 재정과정별로 설명하면서 세입예산 부수법안 지정제도 등을 추가하였고, 부처의 재정사업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2016 경제·재정수첩

- 발간일 : 2016년 3월 31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 ISBN : 978-89-6073-884-3 93350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결산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통계를 수록한 「경제·재정수첩」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복잡한 경제·사회 현상의 이해와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로서, 「2016 경제·재정수첩」은 신뢰할 수 있는 재정·경제 통계를 법안 및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 발간하였다.

「2016 경제·재정수첩」은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경제통계」에는 GDP, 고용, 물가 등 거시경제 통계를, 제2부 「재정통계」에는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과 관련된 통계를 수록하였으며, 제3부 「위원회별 통계」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의 재정 규모와 주요 제도·사업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결산분석시리즈 I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발간일 : 2016년 7월 8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 ISBN : 978-89-6073-923-9 93350



국회예산정책처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을 발간하였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결산 심사가 각 위원회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고서

작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본 보고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원회별 ‘주요 현안분석’을 통해 거시·통합적 분석과 정책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둘째, 분석관 전체 심의회, 외부 감수 등을 통해 분석 주제 선정의 타당성과 중립성을 강화하였다.

셋째, 보고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여러 검증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강화하였다.

본 보고서는 15개 상임위원회 소관의 51개 부처 사업 중 487개 주제(세부주제 기준 646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는데,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평가단을 통해 기금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중기가용자산평가 결과의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해야하며, 자산운용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한 하위 기금에 대해

서는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산업통상자원부는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제도를 폐지하고 저소득층 연탄 가구에 대해 직접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석탄 차액보전금과 탄광근로자의 자녀학자금에 대한 지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토교통부는 대형건설업체 위주의 뉴스테이 사업자 선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공급촉진기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결산분석시리즈 II

201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 발간일 : 2016년 7월 11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 ISBN : 978-89-6073-924-6 93350



「2014회계연도 결산」 의결 시 국회가 시정요구한 1,821건 중 직전 2년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에 대해 시정요구하였으나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여 반복 시정요구한 건수는 200건(11%)이고, 이 중 62건은 3년간 연속으로 시정요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복적으로 시정요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정부가 기존 시정요구에 대해 조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정부는 반복 시정요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14회계연도 결산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2016년 4월 말 기준으로 정부가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건수는 188건(10.3%)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조치완료로 보고한 사항 중 시정요구 38건은 국회의

시정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는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반영되어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하는 등 조치결과 보고의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16년 4월 말 기준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1,215건) 중 29건과 「201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1,541건) 중 69건이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년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보고하고 있으나,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결산분석시리즈 III

2015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 분석

- 발간일 : 2016년 7월 11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 ISBN : 978-89-6073-925-3 93350



「2015회계연도 거시·총량 분석」은 2015년도 결산 및 재정운용 전반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국회의 거시·총량적인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보고서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산 현황 및 평가 부분에는 경제살리기 등 정부 중점 투자과제에 대한 분석과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2015년도 주요 분야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분석을 수록하였다.

중점 분석 부분은 예산의 이·전용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국회감액사업의 증액집행,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 추가경정예산사업 등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다.

1. 각 부처의 주요 사업 중 2015년 집행률이 70% 미만이고, 2012~2015년 4년 평균 집행률이 70% 미만인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을 분석하였다.

2. 2015회계연도에 발생한 예산의 이용·전용, 기

금운용계획 변경이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요건과 한계를 준수했는지 살펴보았다.

3. 2015년 예산안 심사에서 부처별로 국회가 감액한 사업을 감액취지에 맞지 않게 정부가 증액하여 집행한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4. 2015회계연도 신규 재정사업의 결산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5. 2015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현황, 집행실적, 문제점 및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6. 수시배정사업의 결산현황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7. 각 부처의 2015회계연도 예비비 편성·집행과정에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편성 및 목적 외 사용 등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결산분석시리즈 IV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 발간일 : 2016년 7월 14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 ISBN : 978-89-6073-927-7 93350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성인지적 관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되었다.

특히, 동 보고서는 정부 결산서 부속서류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42개 중앙관서, 343개 사업, 26조 4,348억원 지출규모의 성인지 예산 운영실적에 관한 성인지 결산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성평등 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한 재정운용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국가 성평등 목표 - 기관별 성평등 목표 - 성인지 대상사업 - 성과목표간 연계성이 미흡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성인지 대상사업 성과관리가 부실하며, 성과목표 및 성평등 효과 분석도 미흡하다.

따라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국가 성평등 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한 재정운용방안의 제시가 필요하고, 성인지 결산서에 최소 3년 이상의 성과목표 달성

여부 제시가 요구되며,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상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전담기관인 여성가족부의 역할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2015년 성과목표 달성률은 70.9%로 전년 68.8% 대비 조금의 개선이 있지만 2012년 71.1%, 2013년 73%보다는 저조하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성인지 대상사업의 적절성, 수혜자 확대효과, 사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규명하여 성과목표 달성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2010년 성인지 결산심사 시부터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및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으나 성인지 결산의 환류기능이 취약하여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체계의 적합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산분석시리즈 V

2015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 발간일 : 2016년 7월 11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 ISBN : 978-89-6073-926-0 93350



국회예산정책처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5회계연도 결산분석 시리즈를 종합적으로 요약·정리한 「2015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을 발간하였다.

제1부 거시·총량 분석 등에서는 「2015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 분석」, 「2014회계연도 결산 국회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에서 다뤘던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하였다.

특히 거시·총량 분석에서는 2015회계연도 결산 현황 및 평가, 신규 재정사업, 수시배정사업, 예산의 이용·전용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 국회 감액사업, 예비비 집행 현황,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대한 분석 등 2015년 재정운용 결과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와 재정운용상 문제점의 핵심 내용을 수록하였다.

제2부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의 내용을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짧은 시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총 15개 위원회 소관의 48개 부처, 487개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위원회별 결산 분석시 '주요 현안 분석'을 제시하여 거시·통합적 분석과 정책개선과제를 제시하였으며, 보고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부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내·외부 심의를 강화하여 객관성을 높였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 발간일 : 2016년 7월 29일
- 발간부서 : 국회예산정책처
- ISBN : 978-89-6073-933-8 93350



정부는 2016년 7월 26일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총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는 정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이라는 추경의 목적과 ‘시급히 편성되어 연내 집행됨으로써 정책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하는’ 추경의 성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별사업이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정부가 제시한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별사업이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시급성이 부족하거나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사업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추경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둘째, 하반기 국제수입을 전망함으로써 세입경정의 효과를 분석하고, 추경편성에 따른 거시경제효과 및 재정건전성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정부는 2016년 초과세입 규모를 9.8조원으로 전망하여 이를 전액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으나,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 하반기 초과세수 규모는 12.5조원으로 정부안보다 2.7조원 높은 수준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정부가 기대하는 고용창출효과 및 경제성장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추경집행의 적시성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예상 초과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여 연중 직접적인 국가채무 증가가 유발되지는 않았으나, 추경 편성으로 인해 초과세수를 차년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였다.

셋째, 추경의 주요 정책목표별로 재정사업을 분석함으로써 추경의 주요 내용 및 심의 시 논의 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기존에 수행하던 개별 세부사업별 문제점 분석과 더불어, 구조조정 지원·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지역경제 활성화·지방재정 보강 등 추경의 주요 정책목표별 재정사업을 분석하여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추경의 주요 내용 및 심의 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을 집약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회 심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발간일 : 2016년 10월 17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 ISBN : 978-89-6073-951-2 93350



국회예산정책처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발간하였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결산 심사가 각 위원회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고서 작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본 보고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안 개요’에서는 2017년도 부처별 예산 현황과 신규로 반영된 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을 제시한 후 부처별로 2017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에 대해 설명하였다.

둘째, ‘주요 현안 분석’을 통해 해당 부처의 주요 사업과 현안에 대해 거시·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예산편성의 방향과 정책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개별 사업 분석’에서는 개별 사업별로 현황과 문제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 후, 편성된 예산안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는 15개 상임위원회 소관의 52개 부처 사업 중 485개 주제(세부주제 기준 549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특히,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3차례에 걸친 심의회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의 검토와 감수도 거쳤으며, 정부 부처와 업무협의를 통해 사실관계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객관성과 전문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였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17년도 예산안 거시·총량 분석

- 발간일 : 2016년 10월 24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 ISBN : 978-89-6073-963-5 93350



「2017년도 예산안 거시·총량 분석」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재정총량 및 재정운용 전반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국회의 거시·총량적인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보고서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년도 예산안 개요 및 총평」에서는 2017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2017년 경제전망·재정운용 기조·재정건전성·분야별 재정운용 현황·5대 중점투자과제별 예산안 현황을 분석하는 등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분석의견을 실었다.

2017년도 예산안은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의 면밀한 예산안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나,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지출구조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주요 재정현안 분석」에서는 청년일자리 사업, 저출산·고령화 대책, 가계부채와 주택경기 활성화, 지방이전재원, R&D 예산 등 2017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주요 재정현안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위 주제들은 경기활성화·미래성장동력 창출·사회안전망 구축 등 2017년 재정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별도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재정운용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유형별 분석」에서는 신규 재정사업, 주요 증액사업,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유사·중복 사업, 결산 시정요구사항·국고보조사업 평가·법령 및 지침과 예산안의 연계, 기금유형별 주요 현안 등을 분석하였다. 2017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8대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부처별·세부사업 위주의 분석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안에 대한 거시·총량 심의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II

2017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 발간일 : 2016년 10월 24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 ISBN : 978-89-6073-964-2 93350



「2017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은 2017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성인지적 관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되었다.

특히, 동 보고서는 정부 예산서 첨부서류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42개 중앙관서, 351개 사업, 29조 4,563억원 지출규모의 성인지 예산 운영계획에 관한 성인지 예산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업대상자, 수혜자, 성과목표 등의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업과 성인지적 접근이 부실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있어 전문성이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작성기관 및 담당자의 인식 및 성인지적 접근의 전문성 제고와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17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고용격차 해소를 위해 포함된 114개 사업 중 전문인력 양성사업(30개 사업)은 교육이수 후 해당 전문분야 진출에 있어서 성별격차를 파악하기 어려운 성과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교육이수 후 해당 전문분야에 실제 고용된 남녀 인력간 성별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 제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기관별 「2017년도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되어 기관별 특성을 감안한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인지 예산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관별 특성에 맞는 대상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개발하여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V

2017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 발간일 : 2016년 10월 24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 ISBN : 978-89-6073-965-9 93350



국회예산정책처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도 예산안분석 시리즈를 종합적으로 요약·정리한 「2017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을 발간하였다.

제1부 거시·총량 분석에서는 「2017년도 예산안 거시·총량 분석」에서 다뤘던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하였다.

거시·총량 분석에서는 2017년도 예산안 총평, 주요 재정현안 분석 및 유형별 분석이 수록되어 있다. 예산안 총평에서는 재정총량·분야별 자원배분 및 5대 중점 투자과제별 예산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주요 재정현안 분석에서는 청년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대책, 가계부채, 지방이전재원 및 R&D 예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형별 분석에서는 신규·집행부진·유사중복 사업 등에 대한 분석을 수록하였다.

제2부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의 내용을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짧은 시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총 15개 상임위원회 소관의 52개 부처, 485개 주제(세부주제 기준 549개)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번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기존 세부사업 중심의 예산안 분석을 바탕으로, 부처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시도하였다. 그리고 실질적인 예산절감을 위한 분석근거를 명시하였으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증액사유가 있는 사업들도 보고서에 적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성·투명성·중립성 강화를 위해 내부 심의회, 외부 자문위원의 심의를 거쳤으며, 보고서에 정부부처의 입장도 함께 소개하였다.

2016년 수정 경제전망

- 발간일 : 2016년 5월 30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과
- ISBN : 978-89-6073-888-1 93350



2016년 우리경제는 장기간의 수출부진과 내수회복 지연으로 전반적인 경기활력이 저하되면서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는 건설투자가 건설한 증가세를 보이겠으나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는 부진할 전망이며, 대외수출은 세계경기회복세 약화로 전 세계 수입수요가 단기간 내에 확대되기 어려운 여건으로 상당기간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경상 GDP성장률은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큰 폭(1.0%p)으로 둔화되는 데 주로 기인해 전년보다 낮은 3.7%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는 소비성향 하락,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주거비 상승으로 지출가능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된 2.1%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질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개별소비세 재인하, 할인행사 정례화 등이 소비심리 개선에 도움을 주어 민간소비의 둔화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토목투자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건물투자의 호조세가 유지되면서 전년대비 3.7% 증가할 전망이나, 설비투자는 수출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경기개선세가 약화되면서 증가세가 크게 위축되어 전년대비 0.7%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통관기준 수출은 세계경제의 성장과 교역량 둔화, 유가하락과 과잉공급 등으로 전년대비 5.6% 감소한 4,974억달러, 수입은 7.4% 감소한 4,041억달러, 무역수지는 934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가 예상되나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흑자기조가 유지되며 2016년 1,039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중 취업자 수 증가폭은 취약한 경기상황과 여성·중고령층의 고용확대 노력약화로 전년대비 소폭 둔화된 31만명(전년대비 1.2%), 실업률은 3.7%를 기록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국내경기둔화로 인한 수요부족 및 국제유가 하락의 지속으로 연평균 1.2%의 낮은 상승률을 보일 전망이며, 국고채수익률(3년 만기)은 실물경기둔화와 낮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저금리기조가 올해에도 유지되면서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1.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통화정책 결정, 국내 외국인자금유출입 및 국가신인도 등 주요 변수의 향방에 따라 등락하며 연간으로는 전년보다 54원 상승한 1,185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2015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 발간일 : 2016년 7월 6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세수추계 1·2과
- ISBN : 978-89-6073-911-6 93350



2015년 우리경제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부진 등으로 전년의 3.3%보다 낮아진 2.6% 성장에 그쳤다. 경기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국세수입은 자산시장의 호조 등으로 2014년 이후부터 개선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15회계연도 총수입은 371.8조원으로, 2014년 대비 15.4조원(4.3%) 증가하였으며, 추경예산(377.7조원) 대비로는 5.8조원(1.6%) 부족하였다. 국세수입은 217.9조원으로, 자산시장 호조 등으로 2014년(205.5조원) 대비 12.4조원(6.0%) 증가하였고 추경예산 215.7조원을 2.2조원(1.0%) 초과하였다. 한편 국세외수입은 153.9조원으로 이자율 하락 등으로 2014년(150.9조원) 대비 3.0조원(2.0%) 증가에 그쳤으며, 추경예산(161.9조원) 대비 8.0조원(-5.0%) 부족수납을 기록했다.

2015년 국세수입의 주요 증가요인은 자산시장 호조세, 담뱃값 인상 등 세법개정 효과, 징세행정 강화 등이다.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의 호조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각각 47.3%(+3.8조원), 49.6%(+1.5조원)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담뱃값 인상(+2.2조원)과 2014년 「소득세법」 개정(+1.0조원, 종합소득세)효과도 국세수입 증가에 기여하였다. 국세청의 사전안내신고제도 등 징세행정 강화는 신고세수실적 증가로 이어졌다.

향후의 재정운용은 최근의 국세수입 실적 개선이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2015년 이후 국세수입 증가세는 실물경제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자산가격 상승에 의해 견인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일시적 재정수입 증가를 구조적 재정수입의 증가로 오인하고 재정운용 시 구조적 재정적자 확대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 등 선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대내외 충격에 대비한 재정건전성 유지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세외수입이 예산대비 부족수납된 주요 원인은 저금리 기조, 부동산 및 주식 매각차질 등이다. 재산수입(-2.4조원)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1.3조원)의 부족수납액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투자여건 악화에 주로 기인하며, 관유물매각대(-1.2조원)와 차입금및여유자금 회수(-0.4조원)는 부동산과 주식 매각차질 등으로 부족 수납되었다.

향후 국세외수입 예산 편성시 정부는 저금리 지속, 저성장 등 경제환경 변화로 인한 재산수입 및 사회보장기여금 증가세의 둔화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례적으로 세입부진이 지속되는 항목은 최근의 수납실적 추이 및 오차율을 반영하여 예산 과대편성 관행을 개선하거나, 자체수입 확대 및 회계·기금간 전출입 거래 단순화를 통해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6~206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 발간일 : 2016년 8월 12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과
- ISBN : 978-89-6073-936-9 93350



본 보고서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및 재정관련 제도의 변화요인을 반영하여 미래의 재정모습을 그려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였다. 이런 점에서 본 장기 재정전망은 2012년의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과 2014년의 「2014~2060년 장기 재정전망」 이후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 및 세법개정, 복지제도 등으로 인해 우리의 미래 재정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전망하였다. 본 장기 재정전망은 현행 세입구조 및 세출 관련 법률이 2060년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의 기준선 전망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에 따른 정책 시나리오 분석으로 구성된다.

통계청의 2011년 인구전망을 전제로 우리 경제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자본투입이 감소하면서 2016년 2.5% 수준의 실질성장률이 2060년에 0.8%로 낮아지고 경상성장률도 2016년 3.7%에서 2060년에 2.3%로 하락하여 이른바 저성장 시대가 예상된다. 기준선 전망 결과, 복지지출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총지출(4.4%)이 잠재성장률 둔화에 따른 총수입(3.3%)보다 빨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악화(2016년 -2.3% → 2060년 -7.7%) 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는 증가(2016년 39.5% → 2060년 151.8%)되는 등 미래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의 재정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인구고령화에 따른 잠재적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 시나리오 분석 결과, 정부의 고용률 제고대책에 따라 고용률이 OECD 평균 수준(65.4%)으로 증가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이 제고될 때 2060년 국가채무는 151.8%(기준선 전망)에서 140.0%로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의 재정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고용증가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따른 세입 기반이 확대되더라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매년 증가하는 복지지출 수준에 따라 조세부담률을 인상(2060년 17.9% → 22.6%)할 때 2060년 국가채무는 96.8%,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량지출을 절감(GDP 대비 12.5% → 10.7%)할 때 2060년 국가채무는 80.5%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재정수지준칙(수입과 지출의 균형 유지, 수지=0), 독일의 채무제한준칙(수지적자 0.35% 이내), EU의 안정성장협약(SGP) 준칙(수지적자 3% 이내)을 적용할 때 2060년 국가채무는 각각 20.6%, 29.2%, 93.6%로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구고령화에 따른 미래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세입 확충이나 세출 절감 등 정책적 노력과 우리 재정상황에 맞는 의무적인 재정준칙의 도입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

2017년 및 중기 경제전망

- 발간일 : 2016년 9월 19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과
- ISBN : 978-89-6073-944-4 93350



2017년 우리 경제는 해외경기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겠으나, 민간소비 약화 등 내수부진으로 2.7% 성장할 전망이다. 수출(물량기준)은 세계경제성장을 제고, 세계교역량 증가 등 대외경제여건의 개선으로 2.2% 증가하고, 설비투자는 장기간의 수출부진 탈출과 대외적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3.0%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반해 민간소비는 저성장과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소비심리가 둔화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부담, 저축성향 증가 등 구조적인 문제들로 2016년(2.3%예상)보다 낮은 2.2% 증가할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주택수급불균형과 정부의 주택공급관리 등으로 주택투자가 둔화되고 토목투자도 감소하면서 2016년(6.8%예상)보다 큰 폭으로 둔화된 2.1% 증가할 전망이다. 2017년 경제성장률에 대한 내수의 기여도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둔화로 전년보다 축소된 2.5%p, 순수출의 기여도는 수출증가로 확대되며 0.2%p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7년 명목GDP성장률은 2016년(4.0%예상)보다 낮은 3.9%로 전망되며 이는 주로 유가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는 데 기인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015년 27,214달러에서 2018년 31,744달러로 3만달러 대에 진입하고 2020년

에는 34,600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경상수지는 상품수입 증가와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전년보다 흑자폭은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대규모 흑자(900억달러 내외)는 유지될 전망이다. 고용은 일자리 중심의 정책운용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경기회복세와 여성·중고령층, 일부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확대 등의 한계로 취업자 수 증가세가 30여만명에 그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유가상승과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연간 1.6% 상승할 전망이다. 2017년 국고채금리(3년만기)는 국내 물가여건, 미국 금리인상 등을 감안할 때 2016년(연평균 1.4%예상)보다 높은 1.7%로 상승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2017년 연평균 1,110원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5년(2016~2020년) 동안 중기 경제전망의 경우, 실질GDP성장률은 인구구조변화, 자본투입 증가율 둔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과 세계경제성장 둔화의 영향으로 연평균 2.9% 내외 성장할 전망이다. 동 기간 중 잠재성장률은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가 이전보다 소폭 상승하나, 자본과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하락함에 따라 3%대 초반에서 2%대 후반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I

2016년 세법개정안 분석

- 발간일 : 2016년 10월 12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 ISBN : 978-89-6073-948-2 93350



정부가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은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 구현에 중점을 두고, 경제활력 제고·민생안정·공평과세·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본 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의 정책효과와 함께 세수효과 등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현 경제상황 등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되었지만, 조세의 재원조달 기능 약화가 예상되는 등 개정방향에 비추어 소극적 개편에 머물러 주목할 만한 내용이 없고 조세지출 정비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된다.

우선 세법개정안의 전년대비 세수효과가 연간 0.3조원(정부추계치)으로 과거 2011~2015년 정부 세법 개정안의 세수효과 평균치인 1.66조원에 크게 미치지 못해 조세의 재원조달 기능 약화가 예상된다. 경기회복의 둔화와 사회관련 부분의 지출증가로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조세의 정책적 기능과 재원조달 기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 잦은 세법개정과 개편은 예측가능성을 훼손하여 경제활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올해 개정안의 기본방향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그 규모와 세수효과가 작을 뿐만 아니라 주목할 만한 개정안 내용 없이 대부분 기존제도에 적용범위를 조정하거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등 구조적인 개편보다 소극적 개정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조세지출 정비방향에 역행하는 문제도 지적하였다. 현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정책에 의해 조세지출(비과세·감면) 축소라는 조세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최근 3년간 비과세·감면 항목을 축소 또는 조정하여 왔으며, 조세지출의 사전평가 및 성과관리제도 등을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그러나 올해 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항목이 확대와 민생안정 부분의 일몰연장 등으로 조세지출 확대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는 행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매년 반복적이고 연례적인 세법개정이 아닌 중장기적 조세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세제개편의 논의가 필요하며, 논의의 방향은 안정적 조세수입 확보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공평한 조세부담과 더불어 조세정책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II

2016~2020년 국세수입 전망

- 발간일 : 2016년 10월 13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세수추계1과
- ISBN : 978-89-6073-949-9 93350



최근 우리경제는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출부진도 지속되면서 낮은 성장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미약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국세수입은 2015년 이후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국세수입은 237.0조원으로 2015년대비 19.1조원(+8.8%) 증가하고, 추경예산(232.7조원)을 4.3조원 초과할 전망이다. 자산시장 호조세 지속 등으로 소득세의 견조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수가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16.9%의 높은 증가율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NABO는 2017년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3.0% 증가한 244.2조원으로, 정부 국세수입 예산안(241.8조원)에 비해서 2.5조원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자산시장 호조세의 약화가 예상되고 2016년의 높은 증가율에 대한 반락으로 증가추세는 다소 둔화(8.8% → 3.0%)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의 견조한 증가흐름과 2016년 기업영업실적 호조로 소득세수(+2.8조원)와 법인세수(+0.3조원)가 행정부 전망치를 상회할 전망이다.

2016~2020년간 국세수입 증가율은 중기적으로

자산시장 호조세 약화위험 등을 감안할 때 정부안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수호조를 견인하고 있는 자산시장 효과가 금리인상 가능성, 가계부채 부실위험과 주택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인해 중기적으로 약화될 경우 국세수입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NABO는 2016~2020년 국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을 정부안(4.5%)에 비해 낮은 3.9%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정당국은 향후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최근의 세수실적 개선이 경기적 요인보다는 자산시장 호조 등 일시적 요인으로 추세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금리인상 본격화 등으로 자산시장 호조세가 약화될 경우 세수여건이 빠르게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가 확산될 위험과 대외적으로는 중국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에 대비하여 재정건전성 유지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V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 분석

- 발간일 : 2016년 10월 24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세수추계2과
- ISBN : 978-89-6073-950-5 93350



본 보고서는 행정부의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하고, 예산 관점의 조세지출 관리와 평가제도 시행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규모는 2016년 36.5조원에서 2017년 37.0조원으로 증가하고, 중·저소득자 비중(44.3% → 45.2%)과 함께 고소득자 비중(21.8% → 22.1%)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저소득자와 중소기업 중심의 조세지출 증가는 경기회복세 부진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증가 등을 반영한 것이나, 고소득자 수혜 증가 등 형평성 측면의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고령층 등 일부계층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중·저소득자로 분류되어 고소득자 수혜정도가 과소 반영 될 수 있으므로, 수혜계층 분류의 개선과 해당 조세지출 항목이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부가 전망한 2016년 조세지출 정비효과 960억원(2017~2021년)은 과거 2012~2015년 행정부 발표 평균 정비효과 1조 1,893억원의 1/10 수준에 불과하고, 조세지출에 확대된 개정안 등을 포함할 경우 총 2,454억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외 조세지출예산서상 분류체계를 정책지원 분

야로 재정비하여 해당 분야의 조세지출 현황 파악 및 “제도군 평가”를 통한 종합적 제도설계가 필요하고, 일몰규정 없는 조세지출 규모가 2017년 기준 전체 감면액의 59.2%로 크고 운영기간 또한 장기로 나타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일몰규정 도입을 지적하였다. 또한 감면세액 사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 수립 및 사후관리 실적 집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관리 또한 국세의 조세지출예산서 수준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행정부는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이 되는 신규 도입안 2건과 2016년말 일몰도래 항목 6건을 포함한 총 8건의 조세특례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신규안 미반영 및 6건 일몰연장(‘특례 소득세율 인상’ 등 축소 3건, ‘대상 추가’의 확대 1건, 단순연장 2건)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였으나, 정책 타당성이나 효과성이 적은 경우도 일몰연장이 권고되는 등 소극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부문별 평가결과가 서로 상이한 경우 이를 종합하는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수립하고, 평가 결과 타당성이나 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비과세·감면을 폐지하는 정비 원칙을 준수하는 등 심층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V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 발간일 : 2016년 10월 25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과
- ISBN : 978-89-6073-966-6 93350



본 보고서는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재정총량과 재정기조, 분야별 자원배분 및 국가채무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재정과제와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였다.

2017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운용기조는 이전에 비해 확장적인 기조를 보이지 않으며 2017년 상반기 조기집행을 실시하는 경우 하반기에 재정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재정의 상·하반기 균형적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우리나라의 OECD 기준 국가채무는 GDP 대비 44.8%로 OECD 평균(115.5%)보다 낮은 수준이나, 소득수준, 인구고령화, 국가채무의 증가속도 등을 고려하면 적극적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2017년 예산안의 성장률 제고효과는 전년 대비 0.13%p로 2016년 예산안의 성장률 제고효과(0.18%p)보다 다소 낮게 추정되며 취업자수증가율 제고효과는 0.19%p가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의 경기둔화는 구조적 요인일 수 있으므로 과거 재정지출에 따른 성장 제고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재정지출을 통해 성장잠재력 하락을 방지함으로써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재정운용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대내외 경기부진과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면서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저성장 기조 하에 재정지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정책목표와 우선순위를 고려한 분야 및 부분 단위의 거시적 평가를 통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축소시키고 전략적 자원배분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증가하는 복지자원 등 지출자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사회적 구조변화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행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내용을 포함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채무준칙 및 재정수지준칙의 상한 설정과 PAYGO 제도의 국회 도입 선결과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와 함께 본 보고서는 중장기 재정제도 개선방향으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한 재정운용, 재정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등을 제시 하였다.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VI

2017년 세입예산안 분석 종합

- 발간일 : 2016년 10월 31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 ISBN : 978-89-6073-968-0 93350



매년 행정부는 국회에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제 전망, 총수입 전망, 세법개정안 분석, 중기 재정총량 분석 등으로 구성되는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시리즈 5권을 통해 세입예산안을 분석하고, 「예산안분석보고서」 시리즈 13권을 통해 세출예산안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는 각 보고서가 심사참고자료로서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단권화된 종합편을 함께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2017년 세입예산안 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시리즈를 종합한 것이다.

세입예산안 편성을 위해서는 경제전망을 토대로 재정수입의 주요 재원인 국세 및 국세외수입 규모가 추정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세수 규모는 조세지출을 포함한 세법개정 등 조세정책을 통해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세입예산안 편성의 전제가 되는 경제를 전망하고,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및 조세지출 예

산을 분석하여 총수입을 예측하는 것은 정부 예산안의 세입 부분을 심사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3.0%이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향후 5년간 연평균 2.9%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세출은 사회분야 지출 증가 등으로 연평균 3.0%가 증가하여 2020년 448.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세수호조에 따라 올해와 내년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중기 재정건전성은 행정부 계획보다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지금은 중장기적 경제·재정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재정정책 및 세제개편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금년 세법개정안은 세수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의 구조적인 개편보다 소극적 개정에 그치고 있고, 오히려 조세지출을 확대하여 비과세·감면 축소라는 정부정책방향과도 역행하고 있다.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39호)

- 발간일 : 2016년 1월 29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 발간등록번호 : 31-9700376-001366-07



I. 경제동향

국내 경제는 해외수요의 감소세가 심화되었지만 내수증가세가 이어지며 완만한 경기상승세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는 부문별로 차이가 있거나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에 힘입어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설비투자는 저조한 제조업 평균가동률 등으로 회복세가 꺾이는 양상을 보였다. 대외거래는 신흥국 경기둔화로 수출이 감소하고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수입도 감소하였으나, 수출에 비해 수입 감소폭이 커 경상수지는 흑자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공공·개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신규취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취업자수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12월 소비자물가는 유가하락으로 석유류 가격하락이 지속되었으나, 서비스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전년동월대비 1.3% 상승하였다. 12월 중 국고채(3년) 금리는 전월과 비슷한 월평균 1.72%, 원/달러 환율은 위안/달러 환율이 큰 폭 상승한데 따른 영향으로 전월대비 20원 오른 월평균 1,172원을 나타냈다.

II. 2016년도 예산안 심사과정 및 확정 예산 주요내용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총수입은 391.5조원으로 2015

년도 본예산 대비 9.1조원(2.4%), 추경예산 대비 13.8조원(3.7%) 증가하였으며, 총지출은 386.7조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1.3조원(3.0%), 추경예산 대비 2.0조원(0.5%) 증가한 수준이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2015.10.19.~2015.11.19.)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2015.10.26.~2015.11.20.)를 거쳐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12월 3일에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예산안의 결에 앞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으며, 각각 표결을 거쳐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본회의 수정안의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802억원 증액되고 3,242억원 감액되어, 총 2,440억원이 순감된 391.2조원이다.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3조 5,219억원 증액되고 3조 8,281억원 감액되어, 총 3,062억원 순감된 386.4조원으로 확정되었다. 국회 심사에 따른 총수입·총지출 감액폭은 2015년 본예산 심사시(총수입 0.4조원 감소, 총지출 0.6조원 감소)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6년도 확정예산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분야는 총 10개 분야이다. 증액규모 기준으로 보건·복지·고용(0.5조원), SOC(0.4조원), R&D(0.2조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0.2조원) 순으로 증가폭이 높게 나타난다. 정부안 대비 감액된 분야는 2개 분야로, 일반·지방행정(-1.4조원), 국방(-0.2조원) 순이다.

III. 핀테크 산업관련 정책 방향과 향후 과제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합성한 단어로 IT기술을 이용하여 금융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업을 의미하는데,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란 더 낮은 비용과 보다 향상된 편의성 등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효용수준을 높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핀테크 시장의 투자금액은 9억 3천만달러(2008년)에서 29억 7천만달러(2013년)로 최근 5년간 3배 이상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국은 핀테크 산업관련 정책 방향을 마련하여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주요국과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관련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영국정부는 지난 5년간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규모가 3배 이상 성장함에 따라 ‘핀테크 산업 종합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세계금융 혁신 중심지로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ICT기업들이 지급결제시장 및 모바일 뱅킹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자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금서비스업면허제(Money Service Business)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플랫폼사업자들이 결제시장을 넘어 금융부분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은 비금융업자의 제도권 진입을 적극 추진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의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과 인터넷 전문은행(2016년 도입예정)의 도입은 주요국의 경험

을 감안할 때, 고용창출 및 신성장동력 제공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에 비해 초기 단계에 있지만 ICT기술강국인 우리나라의 핀테크 산업이 향후 해외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핀테크 클러스터 확대 등 핀테크 산업과 ICT산업 간의 상호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핀테크는 다른 산업의 전후방효과가 커 그 효과가 금융을 넘어 전산업으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간 지급결제인프라 연계가 보다 확대되고 상호의존성도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간 지급거래 정보의 호환성을 제고시켜 지급결제의 글로벌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킹방지 등 금융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보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보안가이드라인(인터넷 뱅킹관련)을 수립하여 국내 핀테크 산업의 정보보안 능력이 글로벌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IV. 2015년 1~11월 국세수입 실적

2015년 11월 누적 세수실적은 206.2조원으로 전년 동기(189.4조원)에 비해 16.8조원(+8.9%) 증가하였다. 금년 국세수입은 부동산·주식 거래 증가, 담뱃값 인상 및 징세행정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의 부진('14년 1.8%)에서 반등하고 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총 세수 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며, 이 외에 법인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등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40호)

- 발간일 : 2016년 2월 16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 발간등록번호 : 31-9700376-001366-07



I. 경제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부진이 심화되고 경기심리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내수회복세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출은 중국 경제성장 둔화와 신흥국 경기침체,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대외경제여건이 더욱 악화되며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내수는 건설투자가 증가하였으나, 소비증가세가 둔화되고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등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담배값 인상효과가 사라지고 국제유가 하락이 지속됨에 따라 3개월만에 1%를 하회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자금이탈과 위안화 약세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국고채(3년) 금리는 경기부진과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II. 2016년 한국경제 리스크 요인 점검

2016년 한국경제는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성장을 둔화, 유가하락, 신흥국 경기침체, 주요국의 엇갈린 통화정책 등의 리스크 요인이 국내 수출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대내적으로는 내수를 중심으로 한 회복이 예상되나, 높은 수준의 가계·기업 부채가 민간 소비와 투자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2016년 한국경제는 대내외 위험요인을 면

밀히 점검·관리하여 단기적으로는 통화·재정정책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경기안정화를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관된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III. 2015년 국세수입 평가와 시사점

2015년 국세수입은 217.9조원으로, 추경예산(215.7조원)을 2.2조원 상회하였으나, 본예산(221.1조원)에 비해서는 3.2조원 낮다. 자산시장 호조, 담배값 인상, 징세행정 강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회복 지연(경제성장률 +2.6%)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6.0%의 증가를 실현하였다. 2015년 국세수입 실적 개선은 자산시장 호조, 제도 개정 등 상당부분이 일시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만큼 향후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2015년 국세수입에 대한 NABO 전망치는 217.8조원('14.10월), 217.7조원('15.10월)으로, 오차율은 0%대이다.

IV. 국내 석유류 가격 결정 체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최근 국제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류 가격의 하락폭이 제한적인 것은 국내 석유류의 판매가격 대비 원유도입가 비중이 낮고 유가변화에 직접 연동하지 않는 종량세 비중이 높는데 기인하고 있다. 또한 환율이 상승하여 원유가 하락효과가 상

쇄되고, 원유도입가 하락분의 일부가 정제·유통 마진으로 흡수된 것으로 분석된다.

유류세 체계를 증가세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저유가에 따른 긍정적 파급효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계의 실질구매

력 및 기업 수익개선이 내수 및 투자 확대에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향후 유류세 체계의 변경은 유류세제가 경기에 미치는 효과뿐만 아니라 재정수입과 에너지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41호)

- 발간일 : 2016년 3월 7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 발간등록번호 : 31-9700376-001366-07



I. 경제 및 주요 정책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마저 둔화되는 등 경기회복 모멘텀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출은 작년 1월 이후 역대 최장인 14개월 연속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소비심리도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그동안의 완만한 회복세가 제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투자부문은 건설투자가 건축부문 호조로 전월대비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설비투자는 운송장비류와 기계류 모두 부진하며 감소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장 둔화에 대응하여 1/4분기 21조원(재정 6조원, 정책금융 15.5조원 등) 이상의 집행을 확대하는 경기부양대책을 2월 발표하였다. 국내경제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아니할 경우 하반기 이후 재정여력 축소로 경기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과잉공급 업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수·합병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금

융자원을 규정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2월 공포되었다.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제도가 경영권 방어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II. 2015년 경제성장의 특징

2015년 우리경제는 대외경제여건이 악화되어 수출이 감소하고, 메르스 사태의 충격으로 내수가 둔화됨에 따라 2.6% 성장하여 2011년 이후의 저성장 기조를 이어나갔다. 국제유가하락에 따라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국내총소득이 크게 개선되었고, 수출액보다 큰 폭으로 수입액이 감소하여 무역수지가 개선되었으며, 0.7% 물가상승률의 저물가가 나타났다. 한편, 금리 인하와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영향으로 주택을 중심으로 투자가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경제의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저하되는 순수출의 경제성장률기여도와 낮은 내수 비중을 고려하여 내수부문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단기적 경기양보다는 중·장기적 경제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III. 국내 자동차세 부과기준 변경 논의와 해외사례

현행 보유분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으나, 최근 배기량은 적지만 값은 비싼 고가차량에 대한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등 조세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세의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자동차세를 차량 가액 기준으로 부과할 경우,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해소될 수 있으나, 배기량을 낮추고 성능을 높여 가격이 오른 친환경 차량에 대한 소비·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 OECD 및 EU의 40개 국가들은 자동차 보유 및 사용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으로 주로 중량(25개 국가) 및 CO2 배출량(16개 국가)을 활용하고 있으며, 배기량을 부과기준으로 사용하는 나라도 11개국이다.

현행 자동차세는 일반 부동산과 달리 재산적 성격과 환경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므로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환경세적 기능강화를 위해 유류세 체계를 포함하여 자동차세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IV. 법안비용추계제도 변화의 성과와 과제

지난 2014년 3월 의원발의 법안 및 위원회 제안 법안의 비용추계서 작성 주체를 국회예산정책처로 일원화하고 위원회 수정안·대안에 대해서도 비용

추계서 첨부을 의무화하도록 「국회법」이 개정(2015년 3월 19일 시행)되었다.

1973년부터 도입된 법안비용추계제도는 그동안 법안 심사 시 재정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추계서의 낮은 신뢰도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로 비용추계 작성주체가 일원화된 이후에는 비용추계서 전체 회답 건수의 급증뿐만 아니라 위원회 제안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 건수 증가, 미첨부 3호 사유서 비중 감소, 비용추계서 회답 소요 일 단축, 비용추계 조직 확대 등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향후 변화된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법안 심사 시 비용추계서의 활용도 제고와 추계역량 강화 및 대외협력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V. 최근 국내외 전력수급 현황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2010년초 전력공급부족에 따른 수급 불안을 겪었으나, 2015년의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하하였으며 2017년에는 설비예비율이 26.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전력공급의 과잉과 부족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력수요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되 설비예비율의 단기목표와 장기목표에 차이를 두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2%의 목표 설비예비율을 향후 15년동안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수요오차에 대응할 시간이 있는 장기의 경우 목표수요오차율 7%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동계전력피크가 줄어들면 필요 발전설비규모가 줄어들어 전력공급비용을 낮출 수 있으므로 하계보다 15% 낮은 동계 전력요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42호)

- 발간일 : 2016년 4월 18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 발간등록번호 : 31-9700376-001366-07



I. 경제 및 주요 정책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율이 축소되고 2월 광공업생산이 휴대폰 신제품 출시에 크게 기인하여 전월대비 큰 폭(3.3%)으로 증가하였으며, 3월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심리지표가 반등하여 일부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설비투자 감소세, 대외경제여건 등으로 볼 때 전반적인 경기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2016년 1~2월 세수실적은 작년말 부동산 거래 증가, 임금총액 증가 및 수출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11.0조원 증가한 42.7조원으로 나타났다.

II. 청년 고용률이 높은 국가의 특징과 시사점

2000년 이후 청년과 중·장년 연령층의 고용률·실업률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노동 저활용 지표가 공식실업률의 3배에 달하며, 청년층 고용률·실업률이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으로서 우리나라 청년층의 노동 저활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고용지표가 양호한 국가들 중 독일어권 국가는 이원적 교육시스템을 통한 교육과 직업훈련 통합이, 북유럽 국가는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영어권 국가는 높은 노동이동성을 통한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 강조가 특징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문화

적, 경제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 고용 상황 악화를 초래한 주된 원인의 해소에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III. 최근 청년고용대책 동향 및 시사점

최근 3년간 정부에서는 8차례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하였고 4조원이 넘는 예산을 청년일자리사업에 투입하였다. 예산정책처에서는 사업주 위주의 고용보조금 지급방식이 근로조건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고, 최근 정부에서도 구직자 중심 지원방식을 도입하려는 구상이 있었다.

구직자 중심 보조금은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존재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비용을 낮추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의 '일 경험' 사업들은 목적이 불분명하고 부처별로 산재하여 있으므로 관련 사업을 목표 집단별로 재구성하여 체감도와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IV.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기획재정부는 3월 29일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발표하였다. 동 지침에서는 경제역동성 확산,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재정운용방식 개선의 3가지를 2017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번 지침의

특징은 강도 높은 재량지출 구조조정 실시, 고용영향지체평가 도입 등 일자리사업 관리 강화, 보조사업 진입·퇴출제 도입, 누리과정 등과 관련하여 지방재정운용의 책임성 강화, 참여·공개에 기반한 재정운용 등으로 요약된다. 재정운용 참여·공개 확대를 위하여 한국재정정보원이 설립될 예정인바, 향후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d-Brain 공개를 확대하여 국회의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V. 중국의 향후 경제정책방향과 주요 내용

—2016년 양회(兩會)를 중심으로

중국의 양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통칭으로 매년 3월에 개최되며, 그 해의 경제정책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양회는 올해의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① 안정적 성장 유지 ② 공급측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 동력 강화로 설정하고, 향후 5년 기간(2016~2020년) 중 전면적 '샤오강(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실현을 위한 성장전략을 제시하였다. 중국 양회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내외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여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

VI. OECD BEPS 프로젝트 진행경과 및 시사점

2012년 OECD는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를 차

단하기 위하여 총 5개 분야, 15개 실행계획으로 구성된 BEPS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2016년 1월 G20회의에서 실행안이 승인되었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다국적 기업 등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을 의미한다. BEPS 프로젝트 실행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질적 기여에 따라 계열사 소득을 분배하는 등의 이전가격세제 강화, 과도한 비용공제를 제한하는 이자비용 등 공제제한, 조세회피 의심행위를 사전에 보고하는 강제적 보고제도 도입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VII. 최근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 동향 및 시사점

재정준칙(Fiscal Rules)은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적 재정지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체적 재정운용 목표로서, 재정규율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이 도입·운영 중인 재정제도이다. 스웨덴은 1997년 이후 도입한 재정준칙을 준수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였고, 독일은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재정준칙을 강화하였다. 반면, 영국과 일본은 명시적 재정준칙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재정준칙을 부활했지만 재정수지 개선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먼저 재정준칙을 항구준칙으로 설계하여 법제화할 필요가 있고, 법제화한 재정준칙을 엄격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43호)

- 발간일 : 2016년 5월 23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 발간등록번호 : 31-9700376-001366-07



I. 경제 및 주요 정책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힘입어 소매판매액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건설투자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증가하는 등 내수부진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조업일수 감소, 선박수출 지연과 세계 경기부진 때문에 수출 감소폭이 확대되었고, 낮은 제조업평균가동률을 보여 경제 전반의 활력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개혁과 재정준칙 도입을 논의하였으나, 스웨덴 등 해외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항구적 형태의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I. 소비자물가지수와 체감물가의 괴리 원인 및 보완 방향

2013년 이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연평균 1.1%에 머문데 비해 체감물가 상승률은 2.7%로서 두 배 이상 높아 정책실효도를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괴리의 원인은 물가 체감의 심리적 특성, 제품의 질적 변화, 소비자물가지수의 대표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수와 체감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층별로 물가지수를 작성하고, 가격 변동이 빈번한 전월세 및 보건복지서비스의 가격조사를 강화하며, 품질 변화 측정을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회 주도로 물가지수의 오차 수준을 검토한 미국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III. 인구절벽에 대응한 고용정책의 방향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와 노동투입이 감소하는 인구절벽을 겪을 예정이다. 주요국은 인구절벽에 대응하여 적극적·전략적 고용정책을 통해 노동력 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유럽과 일본에 비해 노령고용률이 매우 높은 반면, 여성과 청년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률을 제고하고 노동력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데 주력하면 노동투입의 증가에 따른 잠재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V. 세입여건과 조세행정의 관계

세입여건과 조세행정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 세입여건에 따라 세무조사 강도, 환급시점, 납세유예 수준 등 조세행정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당국이 재정운용상 편의를 위하여 세입여건에 따라 징세강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관행은 재정의 경기안정화기능 저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형평성 저하, 국가 소송 패소의 증가 등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재량적 징세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징세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V. 2016년 지방재정 현황과 정책과제

2016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지는 적자규모가 전년 대비 3.4조원 증가한 14.5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최근 긴급재정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지방투자사업 심사관리를 강화하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지방재정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긴급재정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순세계잉여금의 회계처리 및 재정공시를 개선하며, 비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VI. 기초연금 자원분담의 지역 간 형평성 평가

노후생활안정과 노인빈곤 해소를 위하여 도입된 기초연금의 재원은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다. 그런데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자주도에 따른 자원분담률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부 지역의 자원분담률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에 대한 국고의 차등배분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차등배분의 기준변수를 노인인구 비율에서 전년도 수급자 수로 바꿀 필요가 있고, 향후에는 기초연금과 같은 의무지출 복지사업을 설계하기 전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44호)

- 발간일 : 2016년 6월 24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 발간등록번호 : 31-9700376-001366-07



I. 경제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2015년 1월 이후 17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였고, 전산업생산은 광공업과 건설업 생산이 줄어들며 감소하였으며, 4월 중 소매판매 역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의 악화, 전월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수출 감소와 생산 활동 부진으로 제조업평균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컸던 2009년 3월 이래 가장 낮았으며 향후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제조업과 취약근로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제조업의 취업자 수 증가폭 둔화, 자영업자 및 일용근로자의 고용감소세 등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

II. 「2015회계연도 결산」 개요 및 주요 논점

2015년 국내경제는 2014년에 비해 성장률이 둔화되었고, 메르스 등으로 인한 경제 위축과 세수여건 악화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수입, 총지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과 국가채무 모두 증가하였다. 2015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수 실적 점검, 집행실적 분석, 사업의 성과 점검, 집행 효율

성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 밖에도 예산의 이·전용, 예비비 등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관련 법규의 준수 여부 점검, 결산을 통해 도출된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III. 최근 세수 호조 원인과 금년 세입 전망

최근 내수 둔화와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2016년 1~4월 세수는 96.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시현하였다.

세수 진도비는 전년 동기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2016년 1~4월 세수는 2015년 법인소득 및 부동산 거래 증가에 대한 세금 징수 시차, 부가가치세·관세 환급 감소 등 요인과 임금 및 임금근로자 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 꾸준한 호조를 보였다. 향후 1~4월 세수 증가, 소득세수의 증가세, 법인세 징수시차 등을 고려할 때, 2016년 세수 증가율이 예산 증가율 3.3%를 상회할 전망이다. 하지만, 반기 구조조정이 본격화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 등 하방위험도 존재한다.

IV. GDP통계의 한계와 보완과제

GDP가 최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여러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기준이 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GDP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경제규모 파악에는 적합했으나 서비스업 비중이 큰 오늘날에는 다양한 한계점을 드러냈다. 또한 GDP가 증가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와 별개로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환경·사회적 요인을 반영한 새로운 후생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수준뿐 아니라 국민의 후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GDP 보조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V. 최근 기본소득 논의 동향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일정금액을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의 선별적 지원 제도를 보완하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도입안은 2013년 국민발안을 통해 국민투표에 회부되었으나 지난 6월 5일 부결되었으며, 핀란드 등에서도 주 단위로 정책 예비실험을 추진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비록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나 재원마련 등 현실적 과제도 존재하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연구와 분석자료 축적 등 향후 논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VI. 미국 의회예산처(CBO)의 법안비용 추계와 향후 과제

국회예산정책처는 5월 17일 미국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와 MOU를 체결하였다. CBO는 재정수반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실시하여 미국 의회를 지원하며 공식 법안비용추계와 비공식 비용추계, 주요 법안에 한해 동태추계를 실시한다. CBO의 재정소요점검은 법률안의 상임위원회별 또는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것으로, CBO가 유일하게 재정소요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향후 국회예산정책처의 과제로는 CBO수준의 추계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와 법안 심사과정에서 비용추계서의 활용도 제고방안 등이 필요하며 CBO와 장·단기로 연구인력 및 직원을 상호 파견하여 교육훈련을 진행하거나 CBO의 전문가들을 초청, 특정 주제로 NABO-CBO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VII.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 문제점과 개선과제

정부는 2013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4.1대책)을 시작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은 침체된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으나, 2010년대 초반에 주택시장이 침체된 지역은 수도권으로 한정되어왔다. 국내 주택가격은 1990년과 비교하여 2015년에 명목가격

기준으로 1.9배 상승하였지만,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0.6배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주요 국가들과는 상반된다. 주택가격 변동은 '사회 전체'의 후생 변화와 무관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과 국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45호)

- 발간일 : 2016년 7월 25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 발간등록번호 : 31-9700376-001366-07



I. 경제동향

최근 국내경제는 생산과 일부 내수 지표가 호전되는 등 경기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 산업부문에서 생산이 증가하고, 민간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건설투자도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설비투자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부진을 지속하였다.

수출은 최근 1년간 최소 감소율을 보이는 등 수출 부진이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브렉시트·구조조정 등 불확실성 확대와 가계 및 기업의 심리위축이 경기회복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II. 브렉시트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브렉시트가 국내 경제에 미칠 단기충격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국내외 금융시장은 브렉시트 직후 변동성이 높아졌다가 이후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향후 브렉시트 진행 과정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금융불안이 반복될 가능성은 높다. 따라서 브렉시트 과정에서 금융불안이 수시로 나타날 위험성에 대비하고 경제체질 강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III. 최근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추이 및 시사점

최근 10년간 추가경정예산은 태풍과 메르스 등 재해 대책을 위하여 2006년과 2015년에, 경기대책을 위하여 2008년, 2009년 및 2013년에 편성되었다. 2016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상의 편성 요건에 맞는지 여부,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가경정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예산의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IV. 2016년 정부배당수입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16년 정부 배당수입은 한국전력을 제외하면 전년보다 6.3% 증가한 8,643억원 수준(한국전력 포함 1조 2,245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재원확보와 정부출자금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배당성향 목표치(28%)를 제시하였으나, 2016년 배당성향(21.7%)은 이에 미달하였다. 정부배당대상기관의 배당성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당가능이익의 산정대상 및 법정적립 등을 규정하는 근거 법률을 보완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V.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특성 분석과 보완방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26개 회원국 중 14위로 나타났으나, 최저임금 미만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13.7%로 OECD 회원국

중 3위로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취약근로계층이 주로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으므로, 영세자영업자와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시·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VI. 일본의 긴급고용대책과 시사점

일본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고용 충격에 대응하여 고용보험사업 및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추가적으로 직접 고용 등 긴급고용대책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보다 고용보험 보장 범위가 넓고, 해고 시 재취직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등 기업의 고용안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긴급고용대책을 추진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46호)

- 발간일 : 2016년 8월 30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 발간등록번호 : 31-9700376-001366-07



I. 경제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민간소비가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에 힘입어 개선세가 이어지고 건설투자 호조도 지속되고 있으나, 수출부진 장기화로 광공업생산이 저조하고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로 전환되는 등 고용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II. 최근 지역 고용동향

최근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면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여건이 악화되었다. 구조조정에 따른 효과가 현실화되면서 울산·경남 지역의 제조업·남성 근로자 고용이 악화되었고, 대구·전북 등 지역에서는 청년실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III. 법인세 실효세율의 측정방식과 현황

기업의 실질적 조세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소득기준, 과표기준, 외납세액 포함 과표기준 및 외납세액·지방세 포함 과표기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가능하다. 현재 분석주체와 목적에 적합한 법인세 실효세율 측정방식이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IV. 기업 지원 R&D 예산의 현황과 과제

국가 R&D 사업에 따른 기업의 특허 성과는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발생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R&D 사업의 경우 지원 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하였다. 조선·화학·기계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 R&D 지원 대상 중 오래된 기업의 영업손실이 증가하고 있어 산업 구조조정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V. 파리 협정 이후 국제동향 및 비준 대비 점검사항

2020년 이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 관한 파리 협정 이후, 국제사회는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 R&D 투자 및 기후금융 투자 확대 등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노력을 추진 중이다. 국제사회에서 파리협정의 조기 비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향후 기후변화 이슈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비준 추진이 필요하다.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47호)

- 발간일 : 2016년 9월 30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 발간등록번호 : 31-9700376-001366-07



I. 경제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건설투자 호조를 제외하면,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활력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I. 2017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 및 분석 방향

정부는 총수입 414.5조원, 총지출 400.7조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적절한 경제성장률 추정에 기반한 세수추계가 이루어 졌는지, 분야별 자원배분 규모가 적절한지, 채무준칙·수지준칙·Pay-go 제도 도입이 타당한지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III. 근로소득세 면세자 증가배경과 개선 방안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3년까지 감소추세

였으나, 2014년에는 2013년 「소득세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의 증가는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한편 사회구성원의 납세의식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제제도 전반의 조정 등을 통한 적극적 시정이 필요하다.

IV. 영아보육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현재 정부는 영아(0~2)에 대하여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를, 미이용시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어린이집 수요-공급 불균형과 가정양육수당이 직접양육을 유도하는 충분한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집의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단가를 높이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48호)

- 발간일 : 2016년 10월 31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 발간등록번호 : 31-9700376-001366-07



I. 경제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 생산, 고용 등 경제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이며 파업, 구조조정,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경기회복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는 상황이다.

II. 최근 내수경기의 특징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수출부진에 따라 내수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2016년 상반기 내수는 건물투자가 견인하였고, 민간의 소비 및 설비투자는 부진하였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이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높은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기업구조조정, 청탁금지법 시행 등이 내수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III. 주요국 통화정책과 글로벌유동성 현황 및 시사점

주요국의 계속된 확장적 통화정책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경제 회복세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양적완화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저금리 정책은 가계부채 증가 및 통화정책 여지 축소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IV. 국민연금 크레딧 예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국민연금 크레딧이란 출산, 군복무 및 실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각종 크레딧에 대한 낮은 국고부담률 및 사후 국고지원방식 때문에 현재 및 미래세대 연금가입자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므로, 국고부담률을 상향하고 사전적립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V. 농업인의 소득안정 정책과 입법동향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직접지불금 제도, 수급관리 제도 및 수입안정 제도 등을 실시하였으나, 농업을 통한 소득은 정체된 상태이다.

제20대국회에서는 농업 경영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불금·공공비축제 등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을 심사하였다. 앞으로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WTO 농업협정에 따른 감축대상보조와 국가 재정 부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49호)

- 발간일 : 2016년 11월 30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 발간등록번호 : 31-9700376-001366-07



I. 경제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내수 회복을 견인해 오던 건설투자자와 소비가 둔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경기하방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II. 미국 신행정부 출범이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 신행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단기에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제고할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미국 및 세계 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금융불안과 수출 등 실물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전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III. 「청탁금지법」 도입 이후 카드사용 실적 분석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10월 전년동월 대비 카드사용 총량이 증가하는 등 당초 우려했던 소비 위축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법률의 직접 영향을 받는 화훼, 농축산업 등 일부 업종의 카드승인 실적이 둔화된 것을 확인하였다. 동 법의 입법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낮추고 단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IV. 「재정건전화법안」의 주요 내용과 검토 사항

정부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전략위원회 설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재정준칙 및 페이고 제도를 도입하는 「재정건전화법안」을 제출하였다. 우리나라의 재정·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더 엄격한 수준의 재정준칙을 설계하고, 재정준칙의 실효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며, 「국가재정법」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페이고 도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V. 주택시장 동향 및 정상화 방안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문제는 아파트 공급량 대비 가구수 증가량 확대, 소형 가구의 주거 수준 상향에 대한 대응 미흡 및 수도권외의 낮은 자가거주율로 진단된다.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금융규제보다는 주택공급의 탄력성을 높여 주택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자가거주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VI.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과 입법동향

최근 늘어나는 자연재난·사회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응하여 제20대국회에서는 안전관련 규제 강화와 예산 지원, 피해보상 및 지원 확대 등을 위하여 11월 현재 327건의 법률안이 제안되었다. 국가 재정을 고려한 재난 피해보상 및 지원 기준과 국고 보조율 설정이 필요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며, 사후조치보다는 선제적 대응능력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50호)

- 발간일 : 2016년 12월 23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 발간등록번호 : 31-9700376-001366-07



I. 경제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 되는 가운데 산업생산과 설비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II. 「2017년도 예산」 심사과정 및 주요 내용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 가 심의·확정한 결과 총수입은 0.3조원(0.6%) 순감하여 414.3조원, 총지출은 0.2조원(0.4%) 순감하여 400.5조원이 되었다. 분야별로는 교육(1.0조원)과 SOC(0.4조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지방행정(-0.6조원), 보건·복지·고용(-0.5조원), 문화·체육·관광(-0.2조원)이 감액되었다.

III. 세계무역환경 변화요인 분석과 시사점

세계무역환경은 세계적 저성장 국면, 글로벌가치사슬의 성숙 단계 진입, 디지털경제 확산, 서비스 무역 확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변화를 겪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세계 교역의 실질GDP 장기탄력성이 크게 하락하고 교역증가율 둔화의 상당부분이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 수출업체의 다각화와 중소기업·서비스업 국제경쟁력 제고, 보호무역주의 대응 등이 필요하다.

IV. 레이거노믹스의 특징과 트럼프정책에 대한 시사점

레이거노믹스는 경제의 공급측면을 중시하였으며, 조세감면과 긴축통화 정책이 특징이었다.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인프라 중심의 재정지출 확대와 중상주의적 보호 무역 정책은 새로운 방향이다. 트럼프정책과 미 연준의 계획에 따르면 단기적 미국 경제회복이 가시화와 물가·금리 정상화가 기대되나, 보호무역주의로 인하여 대외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전망이다.

V.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집행경과와 과제

과잉공급 업종의 정상기업에 대한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시행 후 현재(12.19)까지 철강·석유화학 등 6개 업종 10개 기업에 대한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이루어졌다. 향후 과제는 첫째, 사업재편 지원의 효과성 평가와 시장경쟁 제한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둘째, 속기록 작성·공개, 공표항목 확대 및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적용기준 마련 등을 통한 사업재편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강화, 셋째, 공정거래위원회 및 고용노동부의 역할 강화와 건설업 등 타 부처 소관 업종의 사업재편을 위한 부처간 협력 등이다.

VI. 에너지복지사업 형평성 제고 방안

정부는 저소득층 에너지복지를 위해 2017년 에너지바우처사업을 통해 7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사업은 에너지복지 지원대상 간 형평

성 및 에너지원 전환 성과 미흡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에너지복지사업의 에너지원별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통일 등 저소득층 에너지원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

2015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I

[총괄 · 성과관리]

- 발간일 : 2016년 7월 4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 ISBN : 978-89-6073-908-6 93350



「2015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정부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토대로 국가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국회의 결산 심의·의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은 총괄과 성과관리제도로 구성하였는데, 우선 총괄에서는 중점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재정사업의 평가 방향 및 특징 등을 소개하였다. 본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은 현 정부 국정과제를 대상으로 국민의 정책 체감도 측면에 중점을 두고 평가한 점이다. 정부업무평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족도 조사 등은 현실에서의 정책체감도와 괴리가 있는 바,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국민체감도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를 강화하기 위하여 단순히 문제점을 동어반복하거나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지양하고, 정책 현장에서 수용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성과관리제도와 관련해서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통합재정사업평가), 재정사업심층평가, 사회보협성기금운용평가 및 기금존치평가, 부담금운용평가, 국고보조사업운용평가 등에 대한 메타(상위) 평가를 실시하여 정부의 성과관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성과관리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통합재정사업평가를 분석한 결과, 메타평가 가중치 배분 기준 및 평가제도 통합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세출구조조정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개선된 통합재정사업평가 제도에 대한 법령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2015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II

[다부처/경제·산업/사회·행정]

- 발간일 : 2016년 7월 4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 ISBN : 978-89-6073-909-3 93350



「2015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II」는 평가대상 주요 재정사업을 ‘다부처’, ‘경제·산업’, ‘사회·행정’ 분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다. 다부처분야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재발방지 사업 평가’ 등 5개 사업을, 경제·산업분야는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평가’ 등 4개 사업을, 사회·행정분야는 ‘국가장학금사업 평가’ 등 5개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젊은 여성층이 증가하고 있는 입국자의 특성에 맞추어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 등 시정요구 22건, 예비타당성제도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관청의 동의 없이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총사업비를 증액시킬 수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 등 법령개정 4건,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내역사업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유사한 내역사업끼리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 등 성과관리 9건, 지방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방하천 제방정비율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여 하천피해액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제안 등 예산편성 방향 관련 3건 등 총 38건의 입법 및 정책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특히, 이번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는 정부가 설정한 특정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도나 만족도 조사 등 국민체감도 반영지표와 현실에서의 국민체감도가 괴리가 있는 경우 그 원인을 검토하고 ‘국민체감형 성과지표’를 통해 개선방안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기초연금지원사업의 경우 ‘노인가구의 소득과 지출 변화’ 및 ‘노인빈곤율’ 등 객관적 지표와 ‘삶의 질 개선 여부’ 등 주관적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고, 문화가 있는 날 사업과 관련하여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집단의 불만족 원인 등을 측정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2015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 발간일 : 2016년 7월 5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 집필 : 유규영 · 변재연 · 전수연 · 이예슬 · 나유성 사업평가관
- ISBN : 978-89-6073-910-9 93350



공공기관은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 이외에 위탁 및 독점 수입, 자체수입 등 다양한 수입을 기반으로 법령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의 결산 심사는 정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전체 사업에 대한 결산 심사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결산 심사 및 국정 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공공기관 재무안전성에 대한 분석을 담아 「2015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16년 6월 현재 323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2015년 말 기준 505조원으로 2014년 말 520조원에 비해 15조원 감소하였으며 부채비율 역시 201%에서 183%로 하락하여 전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최근 BIS 비율 하락, 부실여신비율 상승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었으며 여신대상기업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 부재 등 문제점이 드러나 일부 부문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경우, 임금피크제 대상인원에 대한 직무개발 및 별도정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직무개발 지원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전력공기업의 경우 발전원가보다 정산단가가 크게 높아, 정산과 관련한 전기요금 정보를 공개하고 표준 발전원가를 통해 발전시간 경쟁을 유도하는 정부승인차액계약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안되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친수구역사업, 발전 및 단지사업 등 부채해소대책은 구체성이 미흡하므로 보다 실현가능성이 높은 부채해소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적적립금 규모과다,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주)SR의 운영 효율성 제고, 한국관광공사 관광단지 매각 촉진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다.

2016년도 국가주요사업 집행점검·평가

- 발간일 : 2016년 9월 9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 ISBN : 978-89-6073-942-0 93350



2016년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47조 3천억원 많은 637조 8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고 실물경제 측면에서 자국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주의 흐름에 따라 세계교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국내적으로는 세수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재정사업은 추진하는 등 세출증가를 통한 재정확장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이 중요한 시점이다.

금번 9월 정기국회는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 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와 일자리, 미래성장동력 창출, 국방·안전과 관련한 정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재정소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관련 재정사업의 구조 및 규모를 조정할 뿐 아니라 정책·사업 전반에 대한 효과성·효율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가재정 및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총 234조원 규모의 주요 재정사업과 정책과제 82개를 분석 평가하여 2016년도 국가주요사업 집행점검·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국정감사 및 예결산 심사 등에서 사업심사의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정책대안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으며, 쟁점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함과 동시에 개선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82개 쟁점과제는 국가주요사업 중 국민편익 증감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국가재정 및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거대이슈에서부터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주요 정책현안 등을 포함하며, 경제, 산업, 사회 행정사업분야 등 총 4개 분야별로 구분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제하고, 5대 유형별로 분류하여, 국민편익 및 국가재정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 분석대상 사업의 쟁점과 개선과제를 요약하여 별도로 수록하였다.

2016 공공기관 이슈브리프

- 발간일 : 2016년 9월 19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 집필 : 모주영 · 변재연 · 전수연 · 안옥진 · 나유성 사업평가관
- ISBN : 978-89-6073-945-1 93350



본 보고서의 발간 목적은 공공기관 주요 현안 및 주요 공공기관의 재무·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공공기관 홈페이지, 감사원 홈페이지 등에 외부 지적사항이 산발적으로 공시되고 있으나,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상임위 및 국정감사에 활용될 수 있는 주요 쟁점 및 최근 수년간의 변화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해 제공하였다.

공공기관 기능조정,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공공기관 부채 등 최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기관 제도·정책 관련 주요 이슈를 다루었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관하여는 정책금융 분야 기능 조정의 조속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과 기능조정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있어서는 공공기관 유형분류기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경영평가 대상기관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과 경영평가

단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경영평가단 임기제 등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공공기관 부채는 2014년 말에 비해 2015년말 14.4조원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본 보고서는 다른 한편으로 상임위원회별 주요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다. 16개 상임위원회 중 공공기관이 없거나 공공기관에 대한 주요 쟁점이 없는 6개 위원회를 제외한 10개 위원회의 39개 공공기관을 선정하였다. 5년간 재무현황, 국회 및 감사원 지적사항, 쟁점 사업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유의미한 정보를 취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대표적으로, 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조선해운업 등 특정 산업 및 대기업에 여신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한국마사회의 경우 장외발매소의 높은 매출비중과 지역사회와의 갈등, 모바일 기반 베팅시스템의 매출액 증가가 주요 현안으로 제시되었다. 한국전력공사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을 언급하였다.

2017년 공공기관 정부지원사업 평가

- 발간일 : 2016년 10월 28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 집필 : 모주영 · 변재연 · 전수연 · 안옥진 · 나유성 사업평가관
- ISBN : 978-89-6073-967-3 93350



2016년 10월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321개 기관에 대한 2017년도 정부지원 예산안은 52.1조원으로 정부 총지출 예산안 400.7조원의 13.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지만 국가적으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등이 있다. 한정된 국가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정부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는 수지차 보전기관의 예산편성 실태, 공공기관 정부배당의 적정성,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공기업 예산제도 및 공공기관 예비타

당성조사 운영실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하여 중점 평가하였다. 또한 국토개발, 사회·문화, 농림수산물, 교통·에너지 등 주요 분야별로 개별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의 적정성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수지차 보전기관에 대한 지정기준이 불명확하고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선정기준을 체계화하고 보전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특정기업에 대한 여신이 집중되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부실 여신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자본 확충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점도 제시하였다. 또한 국토개발, 사회·문화, 농림수산물, 교통·에너지 등 주요 분야의 각 공공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정부지원사업은 사업의 계획이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시하였다.

2. 정책 · 현안 보고서

경제현안분석 제90호

일본의 장기침체기 특성과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

- 발간일 : 2016년 4월 28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과
- 집필 : 김윤기 거시경제분석과장, 유승선 · 황종률 경제분석관,
오현희 경제분석관보
- ISBN : 978-89-6073-885-0 93350



일본경제는 1980년대 후반 형성된 버블이 붕괴되면서 1990년대 초반 이후로 저성장 · 저물가 · 저고용으로 특징되는 장기침체기에 진입하였다. 일본 금융당국은 버블 붕괴 이전 적절한 정책대응 실패, 버블 붕괴 이후 불황에 대처한 소극적 금융완화정책으로 경기침체 장기화의 빌미를 제공하였으며,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버블붕괴 후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기조를 줄곧 유지했으나 그 효과는 일시적인 경기회복에 그쳤다. 구조개혁 측면에서 생산성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구조개혁 대신 정책금리 인하, 공공투자 확대 등 총수요를 부양하여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데 집중한 결과 국가채무 누적으로 재정여력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정부는 과감한 통화정책(제1화살)과 확장적 재정정책(제2화살)의 경기부양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구조개혁 없는 경기부양정책이나 공급부문 개선 없는 수요확대정책은 그 효과가 한정적 · 일시적이라는 인식하에 신성장전략인 일본재흥전략(제3화살)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재정적자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아베 정부는 2015년 6월 30일 재정개혁을 위한 3가지 추진 방안(디플레이션 탈출 · 경제 재생, 세출개혁, 세입 개혁)을 발표하였으나, 현재 재정개혁정책으로는 2020년 재정흑자 목표달성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경제가 처한 환경에서 일본의 장기침체 과정과 특성, 경제정책 대응실패 경험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교훈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통화당국의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적절한 처방이 중요하며,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의 하향 고착화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단기적 경기부양 차원의 재량적 재정지출확대를 지양하고 인구구조변화, 사회보장 지출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이중구조와 격차 해소, 고용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아베정부의 구조개혁을 통

해 중장기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구체적 추진과제인 국가전략특구 지정, 제조업경쟁력 강화 노력 등 신성장전략의 주요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외교역 측면에서, 일본의 TPP타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익극대화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TPP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정부는 산업 내 및 산업 간 활발한 사업재편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정부도 산업구조조정을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펼치는 등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경제현안분석 제91호

아동 관련 복지분야의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지원 현황 및 시사점

- 발간일 : 2016년 6월 24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 집필 : 채은동 경제분석관
- ISBN : 978-89-6073-907-9 93350



한 나라의 재정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재정지출만을 고려하고 있는데,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해주는 조세지출 또한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조세지출을 포함하여 재정지출 현황 및 복지제도 문제점을 살펴보고 근로장려금과 아동 관련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소득계층별 복지수혜금액을 실증분석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중앙정부의 2016년 재정지출(정부예산기준) 규모는 386.4조원이며, 여기에 조세지출 35.3조원을 포함할 경우 전체 지출규모는 421.7조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모두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왔고, 전체 지출 규모 또한 123조원으로 상당한 수준이었다. 반면에 복지재정은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이 각각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어렵고 제도설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동 관련 복지제도의 경우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모두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수요자인 가구 입장에서 복지혜택이 어느 정도 귀속되는지 계량화가 어려워 정부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근로장려금과 아동 관련 복지제도(자녀장려금, 자녀세액공제, 가정양육수당, 보육료지원)의 소득계층별 수혜금액을 분석한 결과,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모두 지원받는 가구는 주로 영유아 양육가구로 그 규모는 174만가구로 추정되었다. 동 가구의 아동 관련 평균수혜금액은 연 528만원으로, 평균민간소득 4,547만원의 11.6% 수준이었다. 다만, 영유아 양육 지원이라는 동일한 정책목표에 대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이 모두 지원되는 항목의 경우에 대해서는 재정지출로 지원이 가능하면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조세지출로 관리되어 세출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경우, 현행대로 제도를 운영하되 회계처리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미국·영국과 같이 근로장려금 중

세금감면분은 조세지출로 관리하고 현금지급분은 지출로 처리하여 보다 정확한 복지규모의 집계が可能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현안분석 제92호

주택가격 변화가 가계부채와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 발간일 : 2016년 11월 28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과
- 집필 : 현영진 경제분석관
- ISBN : 978-89-6073-972-7 93350



본 보고서의 목적은 가계부채 부실에 영향을 주는 외부 경제충격이 발생했을 때 국내 금융기관의 안정성 여부를 분석하는 가계부채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테스트의 대상은 가계부채(주택담보대출)이며 리스크 요인은 가계부채 부실에 영향을 주는 주택가격 하락이 해당된다. 주택가격 하락은 부동산 담보가치를 하락시켜 가계의 자산을 감소시키고 따라서 부채상환능력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부채상환능력은 DSR(Debt Service Ratio, 처분가능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주택가격 하락과 관련된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국내 경제 전반에 걸친 주택가격 하락과 둘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눈 차별적 주택가격 하락의 경우가 그것이다.

위 방법론과 시나리오 하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주택가격 20% 하락시 고위험유형 ① 가구들이 유발시킬 최대 금융권 손실액은 20조 8천 억원이며, 고위험유형 ②의 손실액은 15조 2천억원, 고위험유형 ③의 손실액은 28조 8천억원으로 추산되

었다. 고위험유형별 금융손실액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국내 금융권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고위험 유형별로 각각 -1.4%p, -1.0%p, -2.0%p씩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대 금융손실액(28조 8천 억원)을 가정한 상황에서 은행그룹에 대한 BIS 비율 변화를 계산한 결과, 시중은행의 경우 -1.9%p, 지방은행은 -2.0%p, 특수은행은 -2.0%p씩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가격 하락과 복수기업집단이 동시에 부실하는 복합충격이 존재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국내 금융권 전체의 BIS 비율은 1등급 기준인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은행그룹 중 특수은행의 BIS 비율은 9.6%로 1등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택가격 20% 하락이라는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다른 조건이 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부실로 인한 국내 금융권의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기업부채 부실문제가 주택가격 하락과 동반되어 발생할 경우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다.

사업평가 16-01

교통 SOC 공공기관 투자사업의 재무성 평가: 고속도로,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 발간일 : 2016년 1월 20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 집필 : 나유성 사업평가관
- ISBN : 978-89-6073-878-2 93350



정부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교통 SOC분야에서의 투자재원을 다변화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정부-공공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해 공공기관 투자를 보다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14년 말 기준으로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채규모는 각각 26조 4,622억원, 17조 8,609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2013년 말에 정부의 부채 중점관리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부채증가의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과 향후 투자예정인 사업들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보고서는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

시설공단의 부채 현황, 완공 후 운영 중인 사업에 대한 투자비 회수 현황, 현재 건설 중인 사업의 수익성, 교통투자평가제도의 운영현황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완공 후 운영 중인 사업은 수요예측오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비 회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향후 건설예정인 투자사업의 경우 대부분 수익성이 저조해 향후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도로·철도를 건설할 때 과거 사업의 수익성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무성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교통 공공기관의 투자여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통수요 예측 재검증 방안 마련 및 교통투자사업 정보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하였다.

사업평가 16-02

기초연금제도 평가

- 발간일 : 2016년 4월 29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 집필 : 탁현우 사업평가관
- ISBN : 978-89-6073-86-7 93350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한 기초연금 도입이 소득분위별로 노인가구의 소득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별)를 활용하여 살펴보는 한편, 기초연금 재원(7조 8,600억원, '16년 국고기준)의 지역 간 분담실태를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초연금 도입 후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증감에 대한 분석결과, 식료품과 보건의료 항목은 대부분 소득분위에서 증가한 반면, 가정용품과 오락문화 등 여가와 생활편의물품은 높은 소득분위에서 증가추이가 나타나고 있어 긍정적인 효과로 평가된다.

다만, 노인가구 소득 3분위 이하 평균 기초연금 수급액이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기초연금 수급의 소득역진성은 일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의 기초연금 미수급 문제로 진

단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포함할지 여부와 범위에 따라 다양한 대안을 검토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 수급액을 전부 포함하는 현행방식 이외에,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거나 일부만 포함시키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취지, 재정건전성, 자활의 유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초연금 재원분담의 지역 간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재원배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고의 차등보조 기준에 대한 재설계의 필요성과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사업평가 16-03

지역산업경쟁력강화사업평가

- 발간일 : 2016년 5월 3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 집필 : 허가형 사업평가관
- ISBN : 978-89-6073-887-4 93350



1990년대 말부터 정부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역 산업정책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테크노파크와 지역특화센터가 지역기술거점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은 특화산업이 성장하고 고용이 증가하는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사업은 완료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은 지원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여 본고는 대표적인 지역사업인 지역산업경쟁력강화사업을 평가하였다.

지역산업정책의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여부를 검토한 결과 지역산업정책은 균형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으며 지역별 특화산업이 성장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비수도권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감소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산업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역성장의 요인을 국가성장효과와 산업구조효과, 지역

효과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주요 산업의 성장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지역별로 기존 산업기반의 유무에 따라 차별화된 산업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지역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이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주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재정지원 이후 영업이익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기업의 수익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지역기술거점기관의 수익구조를 검토한 결과 중앙 및 지자체 정부의 수탁사업비가 연간 수익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여 향후 신규 지역기술거점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관 운영비와 사업비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산업정책은 지역별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며 지역산업 육성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R&D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별 기업 D/B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기술거점기관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역할 재정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사업평가 16-04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 평가

- 발간일 : 2016년 5월 31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 집필 : 유규영 사업평가관
- ISBN : 978-89-6073-895-9 93350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경영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경영평가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기존에는 각 공공기관의 공적인 역할이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한정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으나, 2014년도부터는 기타공공기관도 경영평가 대상으로 포함시켜 각 주무부처가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3개의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도 교육부 주관하에 실시되었다.

국립대병원은 일반 민간병원에서 쉽게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에 대한 진료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의료부문에서 가지는 공공적 역할이 매우 큰 공공기관이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가 자칫 수익성 위주의 평가가 될 경우 국립대병원이 가진 공공성이 축소될 것이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 반면에 경영평가를 통해서 공공기관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방안경영과 경영비효율을 해소함으로써 국립대병원이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국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는 국립대병원 이 가진 공공적 기능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되며, 동시에 경영효율성도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가 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4년도 경영평가 결과 등을 제도도입 및 준비 단계, 수행 단계, 결과환류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의 주요쟁점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의 기준 등을 담은 평가 편람을 보다 빠른 시점에 확정하고,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정책적 제안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변별력과 타당성을 갖춘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현장 중심의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평가 자체의 실효성을 위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도입하고, 유인체계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도 제시되었다.

사업평가 16-05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평가

- 발간일 : 2016년 6월 7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 집필 : 변재연 사업평가관
- ISBN : 978-89-6073-905-5 93350



정부는 2005년부터 수도권 집중해소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자립형 혁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혁신도시 기반조성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당초 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전을 완료한 기관이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이를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이전공공기관 등 이전 관련 주체별 이행실적,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한 사업효과와 영향,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다음단계 목표인 산학연 클러스터 추진 실태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교육·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이 미흡하여 공공기관 직원 이

주율과 가족동반 이주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재 채용은 증가추세에 있지만, 채용목표제와 같은 우선채용제도 도입촉진 및 공공기관-대학간 교육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한편, 지방이전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출장증가 등 행정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활용폭이 낮은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행정부·입법부 등과 함께 불요불급한 출장을 최소화하려는 기관 상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 협력사업 시행 및 공공기관 협력업체의 동반이전 등 관련 주체간에도 연계·협력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제시되었다.

사업평가 16-06

주택담보대출정책 평가

- 발간일 : 2016년 6월 1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 집필 : 안태훈 사업평가관
- ISBN : 978-89-6073-893-0 93350



최근 주택가격 하락을 걱정하여 주택 과잉공급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주택 공급 과잉 논란이 발생하면서, 주택 과잉공급에 의해 유발되는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가계부채 부실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택 가격 하락과 가계부채 증가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부실의 잠재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에 대해 ‘비거치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구입대출에 적용되는 ‘비거치 분할상환’ 방식이 주택매매시장을 침체시킨다는 지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택매매가 감소함에 따라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재정을 투입하여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주택 과잉공급 가능성 및 가계부채 실태 등을 살펴보고, 주택구입대출에 대한 일률적인 ‘비거치 분할상환’ 적용이 주택구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집단대출을 포함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가계부채부실을 유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가계부채 연체 및 부실채권은 규모만 달라질 뿐 상시 발생한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잠재적 위험 해소를 위해 비거치 분할상환이라는 원칙을 도입하기보다 금융기관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대출 리스크를 판단·심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금융시장에서 다양한 조건의 합리적인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택공급 과잉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부는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도록 주택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주거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수요에 부합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주택가격 변동은 항시 발생하며, ‘사회 전체’의 후생 변화와 무관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과 국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사업평가 16-07

기초연구지원 R&D사업 평가

- 발간일 : 2016년 6월 2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 집필 : 임길환 사업평가관
- ISBN : 978-89-6073-904-8 93350



기초연구는 미래에 광범위하게 응용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연구활동으로서 국내외적으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장기간의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정부R&D투자 중 기초연구 투자 비중을 2017년까지 40%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확대되는 추세이나,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수요와 공급간 불균형을 지적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정부 기초연구 정책목표의 적정성, 기초연구지원 정책추진체계의 연계성, 기초연구 관련 자원배분의 전략성 및 기초연구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분석·평가하고, 효과적인 기초연구지원 R&D사업의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평가 결과, 첫째,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비중 중심의 정책목표 설정이 기초연구 정책목적을 실현하는데 다소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구 투자비

중 산정 시 대상사업을 제한하고 있어 전체 정부R&D 투자 대비 기초연구 비중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구 투자비중 산정방식이 기초연구 투자 규모를 확대해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의 기초연구 정책목표를 구체적인 실행목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초연구 정책추진체계는 상위 정책과 R&D 자원배분의 연계가 미흡하고 투자의 전략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의 정책대상 사업과 정부R&D 투자방향의 자원배분 대상 사업이 불일치하여 정책간 연계가 미흡하고, 종합계획의 투자전략과제 중 약 30%의 사업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기초연구정책과 예산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R&D관련 타 법정계획과 상호 중복되는 기초연구지원 R&D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 중심형 기초연구사업의 경우, 획일적인 지원방식을 탈피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업구조 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평가 16-0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평가

- 발간일 : 2016년 6월 14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 집필 : 김상우 사업평가관
- ISBN : 978-89-6073-906-2 93350



본 보고서는 “한국의료패널조사”와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이 건강보험의 효과성과 질환 및 계층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평가 결과, 선택진료비 축소 등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은 보장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정 항목을 급여화하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대책은 다른 비급여가 증가하는 풍선효과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효과가 미흡하고, 기타 중증질환 및 만성질환과의 형평성에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대표적인 취약계층 대책인 본인부담 상한제 단계 세분화는 비급여를 제외한 법정본인부담금에 국한된 것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의료비 과부담을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그 밖에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 투자 규모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재정사업을 건강보험 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의

경우 차상위계층의 부담 증가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고, 본인부담이 50~80%인 선택급여 도입, 분만 전후 상급병실 입원료 50% 지원 사업 등은 저소득층의 이용 촉진 효과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의료비 지출 절감 효과가 커서 의료서비스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비급여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를 전제로 의학적 비급여까지 단계적으로 포함하는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풍선효과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어려운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포괄수가제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부담—저보장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보장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부담능력 비례 원칙에 부합하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계층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평가 16-09

아동복지사업 평가

- 요보호아동 보호 · 자립지원 및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 발간일 : 2016년 7월 15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 집필 : 이채정 사업평가관보
- ISBN : 978-89-6073-929-1 93350



정부는 아동의 미래준비, 건강관리, 안전관리 등을 포괄하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15~’19)」을 확정·발표하고, 아동정책의 대상을 요보호아동 중심에서 아동 전체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존 아동복지사업을 평가하여, 아동복지정책을 효율적·효과적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10여 차례의 실태조사, 일선 담당자 및 전문가 면담, 관련 통계자료에 대한 실증분석 등을 토대로 아동복지서비스지원체계의 적정성, 아동복지시설 운영방식의 타당성,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의 적절성, 방과후돌봄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아동복지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 결과, ‘요보호아동 보호 및 자립지원’의 경우 일부 시도는 2010~2014년 동안 아동복지시설의 수용여력이 부족한 해가 있어 안정적인 시설보호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퇴

소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액수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정책효과의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역별 아동복지시설 분포 및 수용여력 격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아동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이양사업인 요보호아동 관련 사업의 일부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관련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수요예측, 실태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역별 서비스의 질적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방과후돌봄서비스’는 일부 시도 및 시군구는 수요 대비 공급이 많거나 적은 것으로 분석되어, 예산 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운영, 예산 배분 등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시군구 돌봄운영협의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업평가 16-10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제도 평가

- 발간일 : 2016년 7월 15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 집필 : 오덕근 사업평가관보
- ISBN : 978-89-6073-928-4 93350



동 보고서는 외국인투자의 파급효과, 경제특구 성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유치 성과 등 관련 쟁점에 대한 심층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 및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2015년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2005년에 대비하여 분석한 결과, 생산 및 취업유발효과는 각각 0.32%p, 0.30%p 증가한 반면, 부가가치유발효과는 0.04%p 감소하여 외국인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특구 기능 분석에서는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투기업을 비입주 외투기업에 비해 수익성이 평균적으로 1.2~1.3%p 높으나, 전체 외투기업의 수익성은 2011년을 기준으로 이후의 모든 기간에서 수익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특구 중 경제자유구역 성과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경제자유구역 누적 FDI 유치액은 56억달러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누적 FDI유치액의 5.0% 수준에 불과하여 제도 도입시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누적 FDI 유치액 중

72%인 40억 달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집중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유치 사례로서 글로벌테마파크 사업을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은 투자규모가 크고, 자금회수 기간도 길며, 영업수익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간 이해관계가 상이하여 공공부문의 지원 및 참여에 관한 협의가 미진함에 따라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FDI 정책은 규모 확대라는 양적 목표보다 우리나라 미래 산업구조 전략과 연계된 첨단기술산업 유치에 중점을 두는 질적 목표로 외국인투자유치정책목표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경제특구는 과잉·중복지정되어 전반적 유치성고가 미흡하므로, 차별화된 입지여건 제공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기능 형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클러스터 효과 제고를 위해, 외국인자본에게만 배타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투자인센티브 및 규제특례의 차별적 요소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사업평가 16-11

농식품 수출지원 사업 평가

- 발간일 : 2016년 7월 27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 집필 : 정용제 사업평가관
- ISBN : 978-89-6073-932-1 93350



농식품 수출지원 사업은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 무역 불균형,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 집행률 저조, 비관세장벽의 심화가 지속되고 있어 해당 사업의 집행효율성을 분석·평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농식품 수출지원 사업의 문제점은 첫째,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 집행률이 2014년도에 63.4%, 2015년도에 39.4%로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 기준의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 융자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최근 5년간(2011~2015년) 대출액 대비 수출액 연평균증가율이 농업경영체가 비농업인에 비해 낮아서 수출성고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현지화지원 사업의 경우, 홍보 부족, 중국 식품안전법 대처문제, 중국의 지역별·성(省)별 비관세장벽 대처문제, 아세안(ASEAN)국가의 현지화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수출농식품 홍보사업의 경우,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이 K-Food Fair 개최지원 사업보다 최근 2년간(2014~2015) 예산대비 수출상당실적 효과가 높으며, 온라인 모바일 마케팅 지원 사업에서 외국의 온라인몰 전자상거래 수출통계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기준을 검토하여 집행률 저조의 요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둘째,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지만 수출성고가 낮은 중소기업 농업경영체의 수출지원을 위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을 연계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셋째, 현지화지원 사업의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수요관리, 비금전적 컨설팅·마케팅 지원서비스 및 일관성 있는 성과관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넷째, 정부는 다양한 수출농식품 홍보사업별로 수출실적기여도를 일관성 있게 향후 사업계획에 연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사업평가 16-12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

- 발간일 : 2016년 7월 28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과
- 집필 : 하현선 사업평가관보
- ISBN : 978-89-6073-934-5 93350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은 1997년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은 통일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 5개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예산액은 2,023억원이다.

주요 평가 결과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태조사 시 개인의 월평균 임금소득 뿐만 아니라 생계급여 수급여부 및 가구·소득자산 등을 조사항목으로 추가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생계급여 수급률은 입국 3년차(29.6%)까지 빠르게 감소하는 성과가 있으나 입국 4년차부터는 계속 20% 초반에 머무르고 있어 계획수립 시 원인을 규명하고 자립·자활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5년도 전체 입국자의 80.3%까지 증가한 여성 북한이탈주민 및 전문직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수준과 임금수준이 낮고, 거주지 보호기간(5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의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비율(26.2%)이 정착초기자(19.4%) 보다 높다. 그리고 상용직 근로자의 비율(50.3%)은 정착초기자(58.8%) 보다 낮아 이에 대한 정책대응을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은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 지원을 하려면 법률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한 뒤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적응센터에 대한 예산 및 인력지원방식이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이지 않으므로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하는 지역적응센터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상담사제도는 채용기준 미준수, 역할 불분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사업평가 16-13

공공기관 출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 발간일 : 2016년 7월 29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 집필 : 나유성 사업평가관
- ISBN : 978-89-6073-935-2 93350



2015년 말 기준으로 74개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560개 출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출자규모는 총 41조7,856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관리체계상 문제점은 없는지, 공공기관이 출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업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보고서는 이를 위해 대대적인 출자회사 정리방안이 발표된 2009년 이후 설립된 출자회사를 대상으로 출자회사 사전협의회제·경영공시·경영평가 등 출자회사 관리제도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아울러 주요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운영실태를 출자회사 설립단계, 운영단계, 청산단계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공공기관 출자회사 설립 시 필수적인 사전협의의 누락, 경영공시 및 경영평가를 통한 출자회사 관리 미흡, 퇴직 임직원의 출자회사 취업 통제 불충

분, 출자회사 설립 후 성과점검 미비 등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출자회사 설립단계에서 사전 타당성 검토 미흡, 모회사의 비핵심사업에의 진출, 출자회사 운영과정에서의 사업성과 부진 및 자본잠식, 해외사업 여건 분석 미흡으로 인한 출자회사 청산 등 출자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출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사전협의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출자회사 운영과정에서 주기적인 기능 점검 및 준치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공기관이 현재 운영 중인 출자회사에 대한 조정방안도 제시하였다. 즉, 해외진출 출자회사의 사업 성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업무 분사형 출자회사의 경우 명확한 업무 구분 및 민간과의 경합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출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면밀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평가 16-14

공적 연기금 책임투자 평가

- 발간일 : 2016년 8월 31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 집필 : 이종민 사업평가관
- ISBN : 978-89-6073-937-6 93350



최근 공적 연기금을 중심으로 투자대상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를 분석하고 투자에 반영하는 책임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책임투자의 전세계 규모는 2014년 기준 약 21조 달러로 전세계 운용자산 대비 30.2%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책임투자를 도입한 공적 연기금 전체운용자산 대비 책임투자의 비중은 2015년말 기준 1.33%에 불과하는 등 아직 책임투자가 본 궤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책임투자는 단기적 재무성과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는 동시에 장기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으며, 수익성·안정성·공공성의 투자원칙을 균형 있게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성된 기금의 특성상 많은 경우에 중장기적 자산보유가 불가피한 공적 연기금의 운용 특성에 부합하

는 투자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아직 책임투자에 대한 인식과 대응 수준은 낮은 것이 현실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수익률 측면에서 책임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투자 펀드의 하방위험을 직접 분석하여 리스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책임투자의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률 성과가 비슷하거나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벤치마크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하방위험을 보였다.

이를 근거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적 연기금에 책임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연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등의 법령 정비가 필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사업평가 16-15

Post-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 및 해외배출권 확보 방안 분석

- 발간일 : 2016년 9월 1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 집필 : 유항재 사업평가관
- ISBN : 978-89-6073-938-3 93350



2015년 12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전세계가 동참하는 기후변화 대응체계의 서막을 열었다. 동 보고서는 파리협정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BAU대비 37% 감축) 수준을 평가하고, 감축목표에 포함된 해외감축목표(37% 중 11.3%)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온실가스 목표배출량 국제비교지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의 감축목표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2020년 감축목표(2020년 BAU 대비 30% 감축)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감축 의지가 약하고, 새로 포함된 해외감축분의 비중이 높은 반면 구체적 정책 수단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한편, 해외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해외배출권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과 해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는데, 해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수익률이 높고, 국제탄

소시장에서의 배출권 가격이 높게 형성될수록 프로젝트 방식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다만, 이 경우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향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투명성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감축의무 부담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로드맵 이행실적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의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고, 로드맵 수립 시 공청회 실시 및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해외배출권 확보를 위한 해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발굴 및 개발단계를 지원하는 재정사업을 설계하고, 투자대상국과의 MOU 체결, ODA 사업과의 연계 추진 등 프로젝트의 현지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국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업평가 16-16

일학습병행제 성과 평가

- 발간일 : 2016년 9월 5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 집필 : 강세욱 사업평가관
- ISBN : 978-89-6073-929-1 93350



일학습병행제는 독일·스위스의 도제훈련을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한 제도이나, 양적 확산이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 질 낮은 훈련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그 동안의 운영실태 및 성과를 점검하였다. 본 보고서는 일학습병행제 원자료(raw data)와 고용보험DB 및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패널자료(panel data)를 연결하여 일학습병행제의 고용효과 등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계획단계에서는 목표 물량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제도변경에 대하여 평가하였는 바, ①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 참여 증가에 따른 훈련품질 저하 가능성, ② 신규입직자가 아닌 6개월~2년을 근무한 재직자 참여 증가로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 초래, ③ 최소 훈련기간 6개월 단축으로 인한 사업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었다.

집행단계에서는 1인당 훈련비와 중도탈락률을 분석하였는 바, 1인당 훈련비는 1,800만원 수준으로 유사 사업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는 한 이와 같은 과도한 예산투입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성과단계에서는 훈련종료 후 임금상승효과와 고용유지효과를 분석하였는 바, 임금은 22% 상승하였으나 훈련종료 후 6개월 고용유지율(신규채용자 기준)이 70.7%에 불과하여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74.4%)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개선방안으로, '참여기업 수'와 같은 양적 목표가 아닌, 기업/개인/국가별 기대효과를 단기 및 중장기로 구분하여 성과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사업은 고비용의 훈련임에도 목표집단이 불분명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대학졸업자보다는 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훈련종료자의 고용유지 및 노동시장에서의 상향이동 효과가 미흡한 바, NCS기반자격을 취득하면 경력기간이 유사한 신규입사자와 승진 및 임금수준에서 최대한 동등한 대우를 보장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업평가 16-17

경찰인력 증원 및 운용 평가

- 발간일 : 2016년 9월 6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과
- 집필 : 한재명 사업평가관
- ISBN : 978-89-6073-939-0 93350



현 정부는 2013년부터 5년간 경찰인력을 2만명 증원하여 학교·성폭력대응, 아동·청소년보호, 범죄예방, 112종합상황실 등 민생치안 분야에 우선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해오고 있다. 그 결과 2013~2015년 동안 경찰인력은 총 11,281명이 증원되었고, 2016년에는 1,901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정부서비스의 확충이라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이처럼 수년간 대규모로 경찰 인력 및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인력 증원과정 및 운용성과에 대한 분석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보고서는 경찰인력 증원계획이 증원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립되었는지, 증원인력과 관련한 채용 및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민생치안을 위한 지역경찰 배치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경찰인력증원에 따른 긍정적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증원규모가 정책목표와 명확하게 연계되지 않은 채 산정됨에 따라 인력증원의 성과를 따로

구분하여 평가할 만한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력증원 일정에 맞추다보니 신입순경교육 시 실질 교육기간이 축소되고, 그에 따라 신입경찰관의 전문성 및 안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지역경찰관서 인력증원을 통한 실질 순찰기능 향상 효과가 기대만큼 높지 않으며, 지역간 지역경찰 배치의 불형평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경찰인력 증원의 적정 규모를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정책목표를 주요 기능별로 보다 구체화하고, 경찰인력 적정 규모의 도출을 위한 체계적·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하여 인력운영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시에 신입순경교육의 내실화 등을 위해 증원 속도의 완급 조절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지역별로 치안서비스가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실질 치안수요 및 치안비용 추정에 기반하여 지역경찰을 재배치하되, 그에 따른 지역경찰관서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인력 증원과 연계하여 관련 재배치 대책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업평가 16-18

노인일자리 평가

- 발간일 : 2016년 9월 7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과
- 집필 : 김우주 사업평가관
- ISBN : 978-89-6073-941-3 93350



정부는 매년 5만개의 노인일자리 확대와 보수인상 등을 목표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사업물량과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그 결과 2016년 기준 노인일자리 수는 387만개이고 예산은 국비 3,824억원, 지방비 3,649억원이다. 하지만 재정 투입(input)이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결과(outcome)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현 정부의 노인일자리 창출 성과가 적정한지, 일자리유형별·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업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은 없는지, 참여자 선발 및 운영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였다. 나아가 중장기 사업수요를 추계하여 향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전망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현 정부는 양적 목표는 적절히 달성하고 있지만 보수가 계속 동결되는 등 일자리의 질적 측면의 개선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들이 선호하는 많은 근로높은 임금의 민간분야 일자리보다는 적은 근로낮은 임금의 공공분야 일자리에 치중

하여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사업량 배정에 있어서도 노인의 수요와 일자리의 공급의 불일치하였다. 한편, 공공기관 등 고소득 직종에서 은퇴한 노인이 은퇴 후 같은 직장에서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을 지원(시니어직능클럽)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도 관찰되었다. 참여자 선발 기준이나 접근성이 저소득 노인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보수를 점진적으로 인상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직적인 민간분야 일자리 사업운영방식 및 전년도 사업량과 지방자치단체 요구물량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별 사업량 배정방식을 개선하여 노인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시니어직능클럽 등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 및 지원의 필요성 측면에서의 재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소득층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민간분야 일자리의 선발기준을 개편하는 한편 일자리 유형을 다양화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노인일자리와의 접근성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

사업평가 16-19

공공기관 요금체계 평가

- 발간일 : 2016년 9월 8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 집필 : 전수연 사업평가관
- ISBN : 978-89-6073-943-7 93350



공공요금은 산업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요금수준의 적절성, 가격설정의 형평성에 따라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이 매우 크다. 동시에 자연독점성이 강해서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놓을 경우 공공목적이 달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요금 체계 및 조정 등에 관한 승인·허가권을 갖고 있으며 「공공요금 산정 기준」을 통해 공공요금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본 평가보고서는 총괄원가와 공공요금 간의 비교를 통해 현행 공공요금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각 서비스의 성격과 산업구조, 시장상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요금별 요금체계 및 관련 정책 등 쟁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기요금의 경우 전력도매거래에서 정

산조정계수를 통한 정산방식은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영업이익의 분배기능만을 수행할 뿐 발전효율성 제고를 유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매전기요금의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연료비 연동제 미실시로 원가와 요금간의 괴리가 발생하여 합리적 전력소비를 유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방상수도의 경우 지역 간 원가와 요금의 격차가 큰데, 인구나 지형과 같은 불가피한 요인 이외에 개량공사비의 차이에도 원인이 있어 개량공사비에 대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안되었다.

철도의 경우 고속철도 건설부채 문제가 심각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간 교차보조로 인해 원가구조의 투명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업평가 16-20

사회기반시설 투자정책 평가

- 발간일 : 2016년 9월 22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 집필 : 안태훈 사업평가관
- ISBN : 978-89-6073-946-8 93350



사회기반시설은 국민의 삶과 사회 유지에 필수적이며 생활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헌법에 보장된 생활권적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기 위한 요소이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은 경제와 문화에 대한 역사적 축적이며 경제 성장 동력으로 국가 경쟁력과 국민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인자이다. 따라서 적정 수준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확보하는 행위는 중요한 국가 임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를 큰 폭으로 축소하고 있다. 정부는 2016년 사회기반시설 예산을 전년대비 4.4% 감액하고 2017년도 예산안에서는 전년대비 8.2% 축소하였다.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재정투자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축소 폭이 적정 수준인가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정부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 투자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현

재 재정투자 축소 규모는 적정 수준을 넘어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는 재정투자 축소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손익공유형’과 같은 새로운 민간투자사업방식을 도입하였지만, 민간투자사업은 입법 취지인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도모하기 보다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요금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 제안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국회의 검토·승인을 거치지 않고 시행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축소 및 민간투자 활성화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의 성과가 미흡하지만 재정투자 축소에 앞서 투자성고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며, 국회가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평가 16-21

공공 기후금융 정책 평가

- 발간일 : 2016년 11월 18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 집필 : 진 익 경제사업평가과장, 김윤희 사업평가관
- ISBN : 978-89-6073-970-3 93350



2016년 11월 4일 파리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신기후체제에 대한 대응이 계획단계에서 이행단계로 전환되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공공 기후금융의 조성이 부족하고, 민간부문의 기후금융 참여도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중장기 재정소요를 분석하여 향후 요구되는 국내 기후금융의 규모를 파악해 보았다. 또한 필요자원 조달의 토대가 되는 공공 기후금융의 유인성, 공공 기후금융의 통합성, 민간부문의 기후금융 수용성을 평가해 보았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관련하여 최근 3년 평균 연간 약 3.1조원 규모의 재정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필요한 중장기 재정소요 추정 한 결과 2030년 감축목표(BAU 대비 37% 감축) 이행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10년(2021-2030년) 누적 기준으로 약 31.2조원(약

28.6-33.7조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인하려는 정책-계획-프로그램-사업의 지원이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공공 기후금융의 유인성이 적으며,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이 상충되고 기후정책 내 주요 정책 간 상호조화 및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공공 기후금융의 통합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기후금융 참여 시 활용할 수 있는 위험관리수단, 거래비용 절감수단 등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부문의 기후금융 수용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는 공공 기후금융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의 조성, 공공 기후금융의 유인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촉진기구운영, 공공 기후금융의 통합성 확보를 위한 정책 거버넌스 정비, 민간부문의 기후금융 수용성 향상을 위한 안전망체계 고도화 등을 제안하였다.

사업평가 16-22

국방 전력지원체계 조달사업 평가

- 발간일 : 2016년 11월 22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과
- 집필 : 이현철 사업평가관
- ISBN : 978-89-6073-971-0 93350



최근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잠수함 등의 위협으로 국방전력 특히 무기체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졌다. 북한의 위협이 심각한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하겠으나 국방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전투지원장비(부품)와 전투지원물품 등의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상호보완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력지원체계와 관련하여 조달 지연 및 실패, 성능 미충족·불량품 납품, 부정사례 반복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내재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전력지원체계 조달사업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강구함으로써 국방전력 강화 및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주요 평가 결과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수품 조달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요당사자인 부대의 직접조달(각군 및 국군재정관리단)보다 방위사업청 또는 조달청 조달을 확대하도록 조달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기체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급식유류, 물자 등의 품목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조달청으로 조달기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급식유류 등 군수품 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 비율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방의 특수성 때문에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측면(금액기준 71.4%)이 있지만, 급식유류(38.2%), 물자

(56.5%) 등에 있어서는 수의계약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자활용사촌 등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한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단체들의 생산설비·능력과 단체 간의 균형을 고려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다른 보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납품의 적기성 및 군수품의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조달실패, 전투지원장비(부품) 등의 장기간 납품 지연 등으로 인한 무기체계의 기동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은 적극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품질보증 등 소요군의 사용자뿐만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하자 등에 대한 사후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낙후된 국방규격을 정비하는 한편, 전력지원체계의 중장기적 발전, 조달시기의 적기화, 조달품목의 최적화 등 전반적인 개선과제를 연구·기획하는 전력지원체계 연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시설공사 계약주체를 수요당사자인 부대 특히 국방부 직할부대(국군재정관리단)가 아닌 조달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취지 및 2005년 「국방부와 조달청간의 군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협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방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 이외에는 다른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조달청에 요청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평가 16-23

농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 평가

- 발간일 : 2016년 12월 21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 집필 : 정용제 사업평가관, 이병철 사업평가관보
- ISBN : 978-89-6073-974-1 93350



농식품 ICT 융복합 모델 개발은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생산·유통·소비 등의 과정에서 ICT 기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표 사업인 ICT 융복합 확산사업(스마트 팜 보급)의 예산집행률과 농가보급률을 살펴보면 정부가 기대한 목표치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팜 보급 사업 관련 문제점의 근본 원인은 사업 초기에 농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관련 기반 기술이 부족하고 시설장비 공급 업체가 영세한 점도 있으나, 농가의 ICT 기술 수용 능력을 감안할 때 시설 도입 능력이 있는 농가 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정부는 단기간 성과 창출을 위해 무리한 보급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R&D 사업도 짧은 기간 내 기술개발을 추진하면서 산학연관의 효과적인 기획과 협력이 부족했고 산발적인 기술개발과 표준화가 이어져왔다. 또한 농가의 인식제고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의 중요성에 비해서 관련 인력 양성과 지원예산 준비도 미흡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 팜 선도 농가를 중심으로 성공 사례가 창출되고 스마트 팜에 대한 주변 농가의 인식도 개선됨에 따라 사업 신청률이 높아지는 등 보급 사업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정책-R&D-현장 연계성 및 재정투자의 민간 확산 기능의 강화를 위해 ‘스마트 팜 R&D 혁신플랫폼’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제품개선과 단가 인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표준기기, 공공기술활용 제품개발 등의 실용화 R&D과제 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농축산 ICT 융복합 사업 재정투입 방식의 최적화를 위해 사업 예산 구조를 통합하고 스마트 팜 유형별, 농가 규모별 지원을 위한 사업시행지침 개선, 시설 도입 농가의 데이터 기반 구축을 위한 실증 자료 제공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마련으로 실질적인 농가재정지원 방안 마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팜에 대한 이해와 활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육과 컨설팅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사업평가 16-24

미래성장동력 정책 평가

- 발간일 : 2016년 12월 22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 집필 : 임길환 사업평가관
- ISBN : 978-89-6073-975-8 93350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 모형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5년을 주기로 새정부 출범시 마다 미래성장동력의 발굴·육성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을 발표해 왔으나, 정부의 잦은 정책변화에 따른 지속성·실행력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과거 참여정부 이후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추진 경과와 실태 분석을 통해 정책추진의 연속성, 투자분야별 효과성, 투자전략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첫째, 우리나라는 역대 정부마다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집중육성분야를 수시로 변경·확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의 10대 성장동력 분야는 이명박정부에서 17대 신성장동력 분야로 확대되었고, 현 정부 들어서는 이중 7개 분야를 제외하고 새롭게 6개 분야를 추가하는 등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를 선정하고 있다. 또한, 정책의 변화과정에서 정책추진체계가 비효

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중장기적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정책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가 선정한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투자효과 분석 결과, 미래성장동력 19대 분야 중 13개 분야에서 산업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파급효과 측면에서는 적절하게 선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분야별 투자의 생산효과 및 파급효과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정부의 자원배분 방향에 이를 최적화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산업성숙도와 추진주체를 고려하여 제시한 민간주도, 정부-민간공동추진, 민간-정부 공동추진, 정부주도형과 같은 미래성장동력 투자전략은 실제 투자계획과 적절히 연계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부의 투자전략이 투자계획과 배치되는 분야가 다수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투자전략과 실제 투자계획 간 구체적인 연계성을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사업평가 16-25

시설물 안전관리 평가

- 발간일 : 2016년 12월 27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과
- 집필 : 하현선 사업평가관보
- ISBN : 978-89-6073-977-2 93350



「시설물 안전관리 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최근 5년간 소규모 취약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불량·미흡 등급판정 비율이 25.6%이며, 1·2종 외 시설물(공사장, 주거용건물 등) 붕괴사고가 2009년 220건에서 2015년 431건으로 증가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이 취약한 상태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15년 기준 1·2종 시설물(댐, 교량 등) 중 95.5%가 A(우수)·B(양호) 등급을 받아 안전상태가 양호하다고 집계하였으나, 2016년 감사원 감사결과 교량 균열관리 부적정, 대형옹벽 안전관리 부적정 등의 사례가 나타났다.

시설물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점검 민간업체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15년 기준 한국시설물안전공단에서 민간업체의 안전진단결과 5,600건을 평가한 결과 265건(5.5%)이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유로 시정·부실진단 판정을 받았다. 시·도지사는 점검·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은 민간업체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점검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후속 조치 대상(2,283개) 중 조치가 완료된 시설물은 7.2%(164개)에 불과하다. 또한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E등급(안전도 불량) 시설의 일부가 방치되어 10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그대로 E등급을 받고 있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점검 실시 후 보수·보강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본계획(5년주기)에 따른 시행계획이 없어서 기본계획의 구체성과 실효성이 결여되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시설물 고령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2015년 기준 전체 1·2종 시설물 중 사용연수가 30년 이상인 시설물은 4.0%인데 2030년에는 36.9%로 증가하는 등 시설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13~2017년)' 및 국민안전처의 '제3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15~2019년)'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책이 미비한 상태이다.

다섯째,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투자가 지연되면

향후 노후시설 성능보완, 수명연장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므로 공공관리주체는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

사회복지시설 보수·보강 공사 및 자발적 위험시설물 철거시 비용 일부를 국고보조, 세제혜택, 대출 등의 방식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평가 16-26

저출산 대책 평가 I [총괄]

- 발간일 : 2016년 12월 30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 ISBN : 978-89-6073-978-9 93350



저출산을 특징으로 하는 제2의 인구변천은 유럽에서 시작되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저출산은 고령화와 맞물려 사회적 위험요인이 되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와 인적자본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도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범 정부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차 19조 7천억원, 2차 60조 5천억원 등 10년 동안 80조 2천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지난 15년 동안 합계 출산율 1.3 미만의 초저출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 사회는 이미 ‘저출산의 덫(Low Fertility Trap)’에 빠져 획기적인 계기 없이는 더 이상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저출산 대책의 정책대상이자 출산의 주체인 개인과 가족의 관점에서 저출산 대책을 분석·평가하고, 이에 대한 결과물을 6권의 책으로 묶어 발간

하였다. 제1권에는 보고서 기획 및 주제선정 배경과 주요 연구결과 요지를 담았다. 제2권에서는 저출산 정책 간 우선순위 선정 및 정책 방향의 타당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제3권에서는 결혼, 주거, 출산, 양육, 인구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제4권부터 제6권까지는 일·가족·교육의 삼각 모형을 토대로 각 정책 분야별로 구체적인 정책대응방안을 분석·평가하였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은 단순히 인구규모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제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설계를 물론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현상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강한 ‘국가적 의지’가 필요하다. 아울러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 담보를 위하여 안정적 재원확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저출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실천 등 여건 조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사업평가 16-27

저출산 대책 평가 II [정책 우선순위]

- 발간일 : 2016년 12월 30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 집필 : 김상우 사업평가관
- ISBN : 978-89-6073-979-6 93350



본 보고서는 정부의 「1,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전문가 대상 계층화분석법(AHP) 조사 및 지자체 담당자 대상 설문 조사를 이용하여 저출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추가 재원의 필요성 및 확보방안을 검토하였다.

전문가 대상 AHP 분석 결과, 시급성·효과성·효율성·적용가능성을 통합한 복합우선순위가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0.279), 보육여건 개선(0.268), 혼인여건 개선(0.159), 교육여건 개선(0.149), 출산여건 개선(0.144)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정책별로는, '신뢰할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 '일가정양립 실천을 위한 근로현장의 문화 및 행태 개선', '돌봄 지원체계 강화',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활성화', '정규직 전환 확대 및 임금격차 해소' 순으로 정책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저출산 정책(50개)의 영향력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AHP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맞춤형 돌봄 확대'와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방안의 출산율 제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정책별로 영향력 계수(전체 효과 중 저출산 해결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적용한 분석 결과, 2016년 저출산 관련 예산의 약 30%인 6조 5,920억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직접 연관성이 적고, 다른 목적을 위해 집행되는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정책 추진을 위한 추가 자원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 결과, 전문가 67.4%(62명), 지자체 담당자 91.8%(157명)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자원 확보 방안으로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들이 모두 법인세·소득세 등 세율 인상과 세출구조조정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일가정양립여건 개선은 전문가 AHP 분석과 지자체 담당자 설문조사에서 우선순위가 높고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존 정책의 성과는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016년 저출산 예산에서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분야 예산은 4.6%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근로자 등 정책의 사각지대가 많다.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한 육아휴직 보편화 지원 정책 추진 등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일자리 영토 확대' 등 일부 청년층 대상 일자리 사업 확대 정책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 정책, 적성·능력 중심 교육체계 개편 정책은 저출산 해결 목표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추진 방향 및 수단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거나, 저출산 정책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평가 16-28

저출산 대책 평가 III [정책환경]

- 발간일 : 2016년 12월 30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 집필 : 탁현우 사업평가관
- ISBN : 978-89-6073-980-2 93530



저출산의 원인진단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정책 대상이자 출산의 주체인 개인의 관점에서 결혼·출산·양육으로 받게 되는 부담을 시간과 비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인구동향조사」와 「가계동향조사」의 각년도 자료와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각년도 자료 등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먼저 결혼·출산과 관련된 정책환경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가구의 균등화 가구소득의 분산(dispersion)이 분석기간인 199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확인하였으며, 청년층의 취업률과 일자리의 질도 나빠지고 있었다. 두 번째로, 미혼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대치에 맞는 결혼상대자'를 찾기 어려운 인구 구성(학력, 직업, 경제활동상태 등)을 보이고 있다. 세 번째로, 여성의 초혼연령이 높아질수록 평균 자녀의 수가 감소하고 미혼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합계출산율을 낮추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네 번째로, 월평균 소득수준과 정규직 여부 등은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미혼여성의 경우 결혼으로 인한 출산과 가사부담 등이 결혼을 하지 않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확인되었다. 다섯 번째로, 저출산 대비 주거안정 대책의 정책대상이 좁게 설정되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수의 신혼부부와 청

년은 최근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상승으로 주거불안이 오히려 심각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다음으로, 양육과 관련된 정책환경은 부모의 비용과 시간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2012년 출생한 자녀 1인당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양육비 총액은 평균 1억 6,760만원으로 추정(상위 10%, 2억 9,341만원)되었으며, 출산과 양육이 여성의 고용상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맞벌이는 물론 여성 외벌이 부부의 경우도 여성의 가사 및 돌봄 부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하였다. 세 번째로, 통계청 생활시간조사(2014년)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부부의 출퇴근과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이 불일치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와 관련된 미래 환경변화를 고려한 분석결과, 소멸위험에 놓인 시군구에 대한 선제적 대비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환경변화를 고려한 인구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며, 고령자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적응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추정된 양육비 총액을 고려하여, 양육의 적절한 사회적 부담수준을 설정하고, 이동수당 및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포함한 적정 정책 조합(policy mix)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부모의 생활시간에 맞춘 보육 및 돌봄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지

적된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돌봄 지원의 내실화를 주장하였다.

만혼과 비혼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혼율 제고를 위해 양성평등적인 결혼 및 가족문화를 위한 정책수단의 강화해야하며, 임대주택 중심의 주거대책은 정책대상 중 일부만 혜택을 받게 되므로, 기존 금리혜택과 더불어 보다 전반적인 부동산정책

의 관점으로 확대접근할 필요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국내의 지방소멸 문제를 대비하고, 미래의 환경변화를 고려한 적정 인구 규모, 인구구조 및 삶의 질 제고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인구정책과 지속가능한 국가전략의 관점의 저출산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사업평가 16-29

저출산 대책 평가 IV [일자리]

- 발간일 : 2016년 12월 30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 집필 : 강세욱 사업평가관
- ISBN : 978-89-6073-981-9 93350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종전의 기혼가구 보육 부담 경감 위주의 정책에서 만혼·비혼대책으로 저출산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위 대책은 기존 청년일자리사업과 최근 신규사업 중 일부를 단순히 재구성한 것에 불과하여, 만혼·비혼 현상을 청년일자리 양적 부족 문제(고용률)의 연장선상에 두거나 사실상 동일한 문제로 간주하고 있는 정부의 단선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평가 결과, 정부가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의 핵심 성과지표로 제시한 청년 고용률(취업자 수)은 혼인율(혼인건수)과 상관관계가 약하고 최근 3~4년간은 오히려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결혼의향이 있으나 경제적 여건으로 결혼을 주저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결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마련하는 것에서 나아가, 결혼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갖는 집단을 대상으로 '결혼의향을 변화' 시킬 수 있도록 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일자리

측면에서는 정규직 확대 등 고용의 안정성 제고를 만혼·비혼 추세 완화의 정책기제 중 하나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고용 안정성과 결혼과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여성의 결혼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가정양립측면에서 여성의 결혼의향을 높이는 정책이 별도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육아휴직에서 장시간근로개선으로 전환하여 출산 이후 육아 단계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뿐만 아니라, 향후 더 많은 잠재적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 확대 등 결혼에 이르는 경로 및 친밀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혼인율 상승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평균초혼연령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므로, 취업준비기간 단축 및 조기입직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설계·발굴하여 저출산 대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사업평가 16-30

저출산 대책 평가 V [가족·양육]

- 발간일 : 2016년 12월 30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 집필 : 이채정 사업평가관보
- ISBN : 978-89-6073-982-6 93350



국회에산정책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2016~2020)」에 기반한 가족·양육지원정책의 확대·개편에 앞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가족·양육지원정책(2016년 예산액 9조 3,993억원)은 ① 일가정양립지원, ②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③ 개인양육지원, ④ 방과후돌봄 지원으로 구성되며,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 2015년 기준 자녀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 중 10% 이상이 출산 후 1년 이내에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 신청의 자율성 정도는 개선(2014년 51.0% → 2015년 53.4%)되었으나,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은 49~52%가 육아휴직 신청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유자녀 여성 근로자의 취업계속확률을 가장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현행 이용 규정은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활용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아(0~2세) 부모는 시설보육보다 직접양육이나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을 선택하고 있으나,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단가가 보육료에 비해 낮아 실질적인 양육비용을 상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생활시간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행 초등돌봄교실(오후돌봄교실 기준)의 운영시간과 방과후돌봄 수요자의 출퇴근 등 이동시간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업별 일가정양립지원제도 활용 실태 공시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이용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상하고, 분할 사용 횟수를 필요에 따라 조정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양육수당의 지원 수준을 보육료 수준으로 높이거나,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보다는 모든 영아에게 매월 일정책의 ‘영아양육수당(가칭)’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의무화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대책 평가 VI [교육]

- 발간일 : 2016년 12월 30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 집필 : 김미량 사업평가관
- ISBN : 978-89-6073-983-3 93350



국회예산정책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저출산대책을 분야별로 평가하였다. 동 기본계획에서는 교육분야 대책을 확대하여 ‘교육개혁 과제’를 별도의 저출산 대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교육개혁 과제’에는 사교육 부담 경감, 공교육 역량 강화, 적성·능력중심 교육고용 체계 개편,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등 4개 대책을 담고 있다. 교육개혁 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2016년도 소요예산은 4조 2,004억원으로, 전체 저출산대책 소요예산(21조 4,173억원)의 19.6%를 차지하고 있다.

각종 통계·조사에서 나타나는 높은 사교육비 부담, 교육의 계층사다리 기능 약화, 자녀의 낮은 삶의 만족도 등의 현상은 우리 사회의 교육 여건이 저출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정책은 이 같은 현상을 초래하는 지나친 교육경쟁구조를 바꾸는 데서 출발해야 하나, 제3차 기본계획의 교육개혁 과제는 현

재의 교육시스템의 토대 위에서, 선행교육 규제, 새 교육과정 도입, 대입전형 간소화, 대학등록금 지원 등의 단편적인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경쟁 구조를 완화하는 효과나 이를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자녀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 및 ‘교육 부담’을 경감하려면, 소모적인 교육 경쟁을 유발하여 사교육 팽창, 교육 불평등, 사회이동성 약화, 공교육 무력화 등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인 학벌사회, 대학서열체제, 대학입시제도를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정부가 견지해온 사교육의 대체재·경쟁재적 성격으로서의 공교육이 아니라 건전한 전인적 시민 양성과 경쟁력 있는 국가 인적자원의 육성이라는 공교육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고, 교육의 ‘계층사다리’ 기능 회복을 통하여 사회이동성을 복원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 수단 선택이 중요하다.

사업평가현안분석 제58호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현안과 개선과제

- 발간일 : 2016년 1월 21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과
- 집필 : 김성수 · 한재명 사업평가관
- ISBN : 978-89-6073-877-5 93350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시책 복지사업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이와 같은 복지사업 확대로 인해 국비는 물론이고 지방비 부담도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도 이를 모두 지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앞으로 더 많은 재정투입이 예상된다. 더욱이 장기적인 저성장으로 인해 국가와 지방의 재정수입이 늘어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복지와 재정을 둘러싼 어려움과 갈등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이며, 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최근 복지사업의 확대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여 지방재정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이 수행해야 하는 핵심 과제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복지사업 규모의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로 지방비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의 자연증가분만 부담하고 추가 증가분은 한시적으로 중앙정부가 감당하는 방향으로 기준보조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 사정과 실제 복지수요를 적절히 반영하고 현행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제도와 재정형평화 기능이 서로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차등보조율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보통교부세 제도와 관련해서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자치구도 교부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보통교부세 교부대상에 새로 자치구를 추가하되, 기초 시·군과 구분하여 별도의 기준재정수입액 및 수요액 산정 방식을 도입하거나, 현행 조정교부금제도를 표준화하고 그 재원을 현행 ‘특별·광역시 보통세의 일정률’에서 여기에 ‘특별·광역시 보통교부세 자치구분’도 포함한 규모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평가현안분석 제59호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현황 및 개선과제

-수송 및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 발간일 : 2016년 10월 6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 집필 : 김상우 사업평가관
- ISBN : 978-89-6073-947-5 93350



본 보고서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2016.6.3.)」의 실태를 파악하고, 동 대책이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이 주요 국가 대비 느슨함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기준 달성률이 낮고, 수도권 이외 지역의 미세먼지 측정망이 부족하며, ‘국가 대기질 통합관리시스템’ 등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등 수송부문 대책의 미세먼지 저감 목표 달성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달성하는 경우에도 초미세먼지($PM_{2.5}$) 목표농도까지 낮추지는 못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친환경자동차가 전체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미세먼지 기여율도 낮아서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온실가스 정책에 따라 클린디젤 보급 확대를 추진하였는데, 최근 디젤자동차가 대표적인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대두되는 등 정책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발전부문에서 폐기예정인 10기의 발전소는 지리적으로 외곽에 있거나 2025년까지 더 이용할 계획이며, 기존 발전설비에 대한 대기오염방지설비 개선도 2030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므로 단기적인 성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국내 배출원에 대한 현황 파악·관리를 위해 충남, 충북, 강원 등 미세먼지 배출량 및 농도가 높은 수도권 외 지역의 측정망을 확충하는 한편, 수송부문에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등에 재정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발전부문에서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발전원을 우선적으로 가동하는 환경급전방식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성 뿐 아니라 환경성을 고려하여 전력수급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화력발전 위주의 전력수급 계획을 신기후체제를 고려한 친환경 체계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평가현안분석 제60호

지방교육재정 운용 분석

- 학생수 감소를 중심으로

- 발간일 : 2016년 12월 28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과
- 집필 : 한재명 사업평가관
- ISBN : 978-89-6073-976-5 93350



우리나라의 만 3~17세 학령기 인구는 2000년 1,019만명에서 2016년 734만명으로 감소하였고, 2040년에는 601만명으로 줄어든 전망이다. 이러한 학생수 감소와 더불어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정된 재원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의 운용과 관련된 정책방향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학생수 감소를 고려하여 정부부처의 주요 정책목표 및 재정지원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학생수 감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원정원, 소규모학교 통·폐합, 교육환경개선 등에 미치는 영향을 효율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교육 관련 사업계획과 재정계획의 연계가 부족하여 정책목표 수행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결여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의 교원정원 산정방식 및 시·도교육청의 교원배치 기준이 학생수 감소 등에 대응하여 교원수를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최근 소규모학교 통·폐합 실적이 줄어들고 있고,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사업이 확대되면서 교육환경개선 예산 배정이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규모 및 배분방식도 학생수와의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에 학교수, 학급수 등 시·도교육청이 자의적으로 조정 가능한 변수가 포함되어 있어 지방교육청 간 자원배분의 불형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계획에 기초하여 중장기적으로 정책목표를 재수립하고, 학생수 감소와 교육의 질을 함께 고려하여 학급수 자체를 적정규모로 조정하고, 교원수 확대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유형의 개발 및 통·폐합에 따른 절감자원 배분방식 개선, 학교 통·폐합 기준 및 유인체계의 개선, 행·재정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획일적인 법정교부율이 아닌 적정교육비의 관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규모를 결정하도록 전환하고, 학생수 반영 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부금 배분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평가현안분석 제61호

공공갈등 관리현황 분석

- 국회의 갈등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 발간일 : 2016년 12월 29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 집필 : 유항재 사업평가관
- ISBN : 978-89-6073-984-0 93350



공공갈등은 사회 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정부의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 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가 우리 사회의 공공갈등 관리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공공갈등 관련 통계자료 및 사례분석 결과 정부의 일방적 사업 추진 행태로 인해 갈등 관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당사자 간 신뢰 구축에 실패하여 협력적 거버넌스가 제대로 구축될 수 없었던 것이 갈등 발생 및 갈등 증폭의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부 정책·사업을 계기로 한 공공갈등의 경우 정부가 갈등당사자가 되는 특성 상 이해당사자 간 협상 자원 및 권력 불균형이 발생하므로 정부 중심의 갈등관리 체계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국회는 행정부 국정운영의 견제자로서 갈등 관리의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기에 유리하고, 정부를 포함한 갈등당사자를 협상에 이끌어낼 수 있는 권한과 합의 도출을 위한 회의 진행에 축적된 경험 등 갈등관리자로서의 장점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다만, 국회에서 과도한 정치쟁점으로 오히려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고, 공공갈등 사안이 다른 이슈와 정치적 합의(쟁점 거래) 대상이 될 경우 근본적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 유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정부의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사업 추진 시 계획 확정 이전 단계의 참여와 숙의과정을 보장하여 갈등의 사전적 예방을 도모하는 “계획의 사전 공시 및 협의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갈등관리 시스템이 정부의 구체적 행정절차에 녹아들 수 있도록 갈등관리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활동을 통한 공공갈등 관리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가칭)공공갈등특별위원회’를 상설특위로 설치하여 주요 공공갈등에 대한 조정·중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 기구’ 사례와 같이 갈등 관리 과정에서 당사자·전문가·시민사회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숙의·토론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3. 특별·연구·기획 보고서

[제20대 국회 개원]

대한민국 재정 2016,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6

- 발간일 : 2016년 6월 3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 ISBN : 978-89-6073-889-8 93350
978-89-6073-890-4 93350



동 보고서는 제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2016년 2~3월에 발간한 「대한민국 재정 2016」,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6」의 주요 내용을 5월 기준으로

업데이트하여 재발간한 것으로 각 의원실에 배포하였다.

[제20대 국회 개원]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법률 개선과제

- 발간일 : 2016년 6월 3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 ISBN : 978-89-6073-891-1 93350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법률 개선과제」는 제20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그간 예·결산 분석, 경제분석, 사업평가 및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재정 관련 법률 개선과제들을 제시하는 보고서이다.

총 46건의 개선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률안 발의·심사의 편의를 위하여 ‘국회 재정통제 강화’, ‘재정건전성 확보’, ‘분야별 개선과제’ 등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개선과제를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주요 개선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시배정사업의 예산 배정내역을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여 수시배정제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예산의 수시배정은 국회가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 배정을 유보함으로써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국회 제출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금융성 기금의 경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그 외의 기금의 경우에는 20% 이하의 범위에서 자체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시 중장기 재정전망의 근거를 함께 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중기 경제성장률이 낙관적으로 전망되면서 세입예산이 과대 계상되고 세입결손이 발생하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저해되는 요인이 되고 있으나, 정부는 2015년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경제성장률 예측치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전망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제20대 국회 개원]

주요국의 재정제도

- 발간일 : 2016년 6월 3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과
- ISBN : 978-89-6073-894-2 93350



주요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추진한 확대재정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증가한 정부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세입확충과 지출감축, 재정준칙 개혁 등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6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GDP 대비)는 40.1%로 OECD 평균(115.2%)보다 낮으나, 저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세 둔화와 경기부양복지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구조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할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본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의 예산과정과 재정제도를 소개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미 2012년에 발간한 「주요국의 예산제도」를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 보고서는 최근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의 재정제도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보고서는 OECD국가들의 재정상황과 주요 재정제도를 정리한 총괄부문과 주요국이 새로 도입한 재정준칙들과 준칙도입 이후의 재정변화 분석, 그리고 중국의 재정제도를 새롭게 소개한 것이 기존 보고서와의 차이점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웨덴, 중국의 일반현황, 정치구조, 최근 재정상황, 법령, 조직, 예산구조와 예산과정, 그리고 주요 재정제도를 최신 자료에 기초하여 정리하였다.

주요국들은 1990년대 이후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예산안의 하향식(top-down) 편성 및 심의, 사전예산서의 의회 제출, 재정준칙의 도입, 독립적 재정기구의 설치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따라서 본 보고서가 주요국의 최근 재정제도 변화와 예산과정에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소개함으로써 국회가 새로운 재정정책을 수립하거나 심의할 때에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였다.

[제20대 국회 개원]

재정사업평가와 사례

- 발간일 : 2016년 6월 3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과
- ISBN : 978-89-6073-892-8 93350



「재정사업평가와 사례」는 제20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수행중인 사업평가 제도와 주요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법률 제·개정,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 정부 주요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제안·권고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본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사업평가 대상과 방법, 절차와 기준 등을 소개하는 한편 관계 법률에 따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주요 평가제도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함께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 평가질문 작성, 평가설계 등 재정사업 평가를 위한 과학적 조사연구 과정을 설명하였으며, 정성적 방법론 및 정량적 방법론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책의 후반부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법률개정과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 등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총 45개의 구체적인 사례

를 들어 소개하였다. 또한 정부에서 정책수립 시 보고서 지적사항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사례를 들었다.

법률개정사례로는 「독도 이용·보전사업 평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평가」, 「보증기금사업평가」, 「주거복지사업 평가」 등이 있다. 개별 사업평가보고서의 평가결과와 함께 관련 법률의 조문대비표를 제시하였다.

예산안 수정 사례로는 「자영업자 지원사업 평가」, 「중소기업 수출·판로 지원사업 평가」, 「방과후돌봄 서비스 평가」, 「문화시설 BTL사업 평가」 등이 있으며, 결산 시정요구 사례는 「청년일자리사업 평가」, 「범죄피해자보호사업 평가」, 「경인아라뱃길사업 평가」, 「기금여유자금 운용실태 평가」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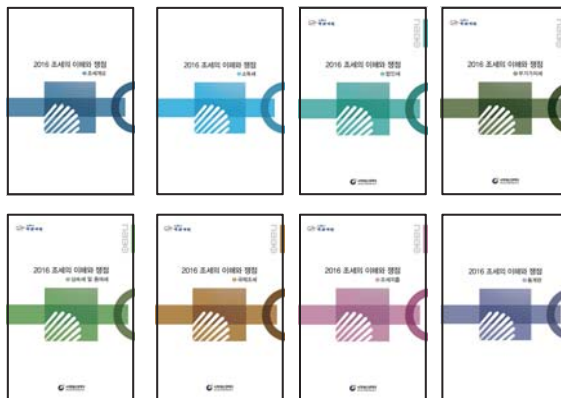
이 밖에도 제도개선·정책반영 사례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평가」,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사업 평가」, 「기초생활보장사업 평가」, 「벤처·창업지원정책의 주요쟁점과 개선과제」 등이 있다.

[제20대 국회 개원]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조세개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국제조세,
조세지출, 통계편

- 발간일 : 2016년 6월 3일
- 발간부서 : 세제분석과
- ISBN: 978-89-6073-896-6 93350
- 978-89-6073-897-3 93350
- 978-89-6073-898-0 93350
- 978-89-6073-899-7 93350
- 978-89-6073-900-0 93350
- 978-89-6073-901-7 93350
- 978-89-6073-902-4 93350
- 978-89-6073-903-1 93350



조세는 국가재정의 주요 수입원이자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과 소득분배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 성장 둔화 및 복지·경제 정책수요의 증가는 조세수입보다 재정지출 확장을 가속하여 각국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들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구조개혁 및 세수확충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조세개편이 효율성과 공평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전반적인 조세체계를 이해하고 선진국의 세제개편 동향을 모니터링 하며,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조세개편 방향과 쟁점을 파악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 주요 세목에 대한 이해와 현안 위주로 정리된 「조세의 이해와 쟁점」 시리즈를 출간한 이후, 동 보고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해

마다 이루어지는 제도변화와 최근의 현안 등을 시의 적절하게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해 오고 있다.

특히 2016년 개정판은 제20대 국회 개원을 기념하면서, 부의 집중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상속·증여세편'을 신규 발간하였다.

지금은 복지·경제 정책 수요에 따른 자원마련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바람직한 조세정책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기이므로, 본 보고서가 세제관련 입법 논의과정에서 국회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데 충분히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19대 국회 세법개정안

1. 주요내용과 쟁점

2. 목록 및 요약

- 발간일 : 2016년 7월 15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 ISBN : 978-89-6073-930-7 93350
978-89-6073-931-4 93350



조세제도는 다양하게 변화·발전하는 경제생활에 연동하여 점차 복잡해지고 있고 최근에는 재정조달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적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조세법은 과거에 비해 보다 정밀한 규정이 요청되고 있다.

다변하는 경제·정책 환경을 반영하면서 공평과 효율을 확보하는 바람직한 과세제도 확립을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활발한 세법개정 논의가 있었다. 제19대 국회(2012.5.30.~2016.5.29.)에서 발의된 1만 7,822건의 법률안 중 세법개정안은 5.3%인 942건을 차지하였고, 이 중 302건의 내용이 개정된 법률에 담겨 반영비율은 32%에 달했다. 한편 나머지

68%에 해당하는 640여 건의 세법개정안은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폐기되었다.

국회 심의를 통과한 법안을 비롯해 임기만료 등으로 폐기된 법안 상당수는 조세심사소위원회 등을 통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는데, 주요 세법개정안의 심의과정과 쟁점을 확인하는 것은 제20대 국회 조세입법 논의가 더욱 심층적으로 진행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제19대 국회에서 심사된 세제관련 주요 법안들에 대하여 주요내용, 심의과정, 반영결과 및 쟁점사항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조세특례평가 방법 연구

- 발간일 : 2016년 11월 21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세수추계2과
- ISBN : 978-89-6073-969-7 93350



본 보고서는 조세지출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입한 조세특례평가의 수행시 평가기법의 전문성, 일관성 및 결과의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방법론을 관련 사례와 함께 정리하고, 평가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쟁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세특례평가는 평가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시작하여 사전 준비단계로서 평가설계가 진행되고, 이에 근거하여 개별 평가범주별로 구체적인 평가가 수행되어 최종적으로 이들 결과를 종합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우선 「국회법」 제73조의2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연간 조세지출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평가 대상이 되며, 사전 준비단계로서 평가설계시 구체적 평가에 앞서 조세특례평가의 쟁점을 도출하고 분석에 필요한 자료 수집, 적용 가능한 평가 방법 선정 등을 기획하게 된다. 조세특례평가 시 성과관리에 기반 한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평가제도 도입의 취지를 감안하여 재정적 측면, 정책적 측면, 경제적 측면 등 개별 평가범주별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종합평가 단계에서는 계층화 분석법(AHP)이나 협의체 구성 방식 등을 통해 범주별로 이루어진

평가결과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정성적인 정책적 측면 평가와 정량적인 재정적 측면 및 경제적 측면 평가의 성질이 다르고, 범주별로 조세특례 존치에 있어 상호 대립되는 평가결과가 제시될 수 있다.

조세특례평가는 제도도입의 목적, 관련 세목별 특성, 감면유형 등이 다양하고 납세 및 감면자료 수집의 제약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평가지침이나 매뉴얼 보다는 사안별 평가설계(evaluation design)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세특례 범위는 투자나 고용 등 경제활동 외에도 교육, 문화·관광, 사회복지 등 가치재나 비경제활동을 포함해 광범위하고, 관련 국세의 세목별 성질이 다르고, 비과세·세액공제·이월과세 등 감면유형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조세특례평가를 수행하는 전문 연구기관은 조세특례평가의 효과와 평가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문적 평가역량을 확보해야 하며,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자문과 의사결정을 위한 평가협의체(가칭 '조세특례평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하는 평가체계를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재정지출의 분야별 경제적 효과분석 모형 연구

- 발간일 : 2016년 11월 30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과
- ISBN : 978-89-6073-973-4 93350



본 보고서는 재정지출의 분야별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2015년 개발된 NABO 거시재정모형을 수정하고 개선시킨 연구보고서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구조에 따라 변화된 예산제약 하에서 재정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재정운용방향은 경제적 효과를 비롯하여 국민의 선호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결정, 사회적 여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정되나, 저성장 시기에 효율적인 자원배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학적 분석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각 분야별로 소득, 물가, 고용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므로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분야별로 경제적 효과분석이 가능하도록 2015년 구축된 거시재정모형을 수정하고 확장시켜 각 연도별로 재정승수를 추정하여 예산 증감의 효과와 승수 변화의 효과가 함께 반영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재정지출의 성장제고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를 도출하여 주요 분야(국토 및 지역 개발, 사회복지 등)의 경제적 효과를 중기적으로 비교

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2014년 예산에 적용되는 재정승수가 제일 크며 2017년 예산안으로 갈수록 재정승수가 감소 또는 둔화 추세에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분야별로 경제적 효과를 산출한 결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가 특징적이었는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주로 재정지출 승수가 높은 재화 및 용역보다 승수가 낮은 자본지출에서 주로 감소하면서 경제성장 감소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에 반해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규모는 지속적으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여 취업자 수 증가가 다른 분야보다 높으나 재정지출 승수가 낮은 경상이전지출이 주로 증가하여 투입단위당 경제성장 제고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의 증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분야 간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투입단위당 경제 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분야별 재정승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향후 재정부문의 개선,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모형 구축, 정치·행정·경제 측면에서 합리적인 분야별 자원배분 방안 마련 등 후속 연구 계획도 제시하였다.



Annual Report of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국회의 위원회 및 국회의원 요구사항의 조사 · 분석 업무

1. 일반 조사·분석 요구 및 회답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제5호에 의하여 국회의 위원회 및 국회의원의 조사·분석 요구에 대하여 회답하고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에 접수된 일반 조사·분석 요구는 모두 392건이다.

가. 2016년 처리 현황

[실·국별 조사·분석 접수 현황]

실·국	건수
예산분석실	100
경제분석실	174
사업평가국	118
합 계	392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사·분석 요구 현황]

교섭단체 및 위원회		건수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184
	새누리당	143
	국민의당	46
비교섭단체		18
위 원 회		1
합 계		392

나. 최근 5년간 추이

[최근 5년간 조사·분석 회답 현황]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400	569	423	352	392	2,136

다. 신청 및 회답 절차

□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국회는 2008년 7월 31일부터 조사·분석(의안비용추계 포함)과 관련하여, 의원실의 업무 편의를 위해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Support, NALS)을 서비스하고 있다.

NALS는 국회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접속할 수 있으며, 의원실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로 구분된 지원기관의 단일 창구를 제공하여 의원실이 효율적으로 조사·분석을 요청하고 회답된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입법정보요청]

이 버튼을 클릭하면 예산·경제 및 사업평가 관련 조사·분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의안비용추계요청]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 추계를 요구할 수 있다.

□ 요구서식을 이용하는 방법

요구서식을 이용하여 팩스로 신청하는 기존 방법도 가능하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NALS) 이용 화면]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자료요청관리 / 통계관리 / 공지사항 / Q&A / 시스템관리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방문을 환영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Home > 자료요청관리 > 자료요청 등록

자료요청 등록

자료요청을 등록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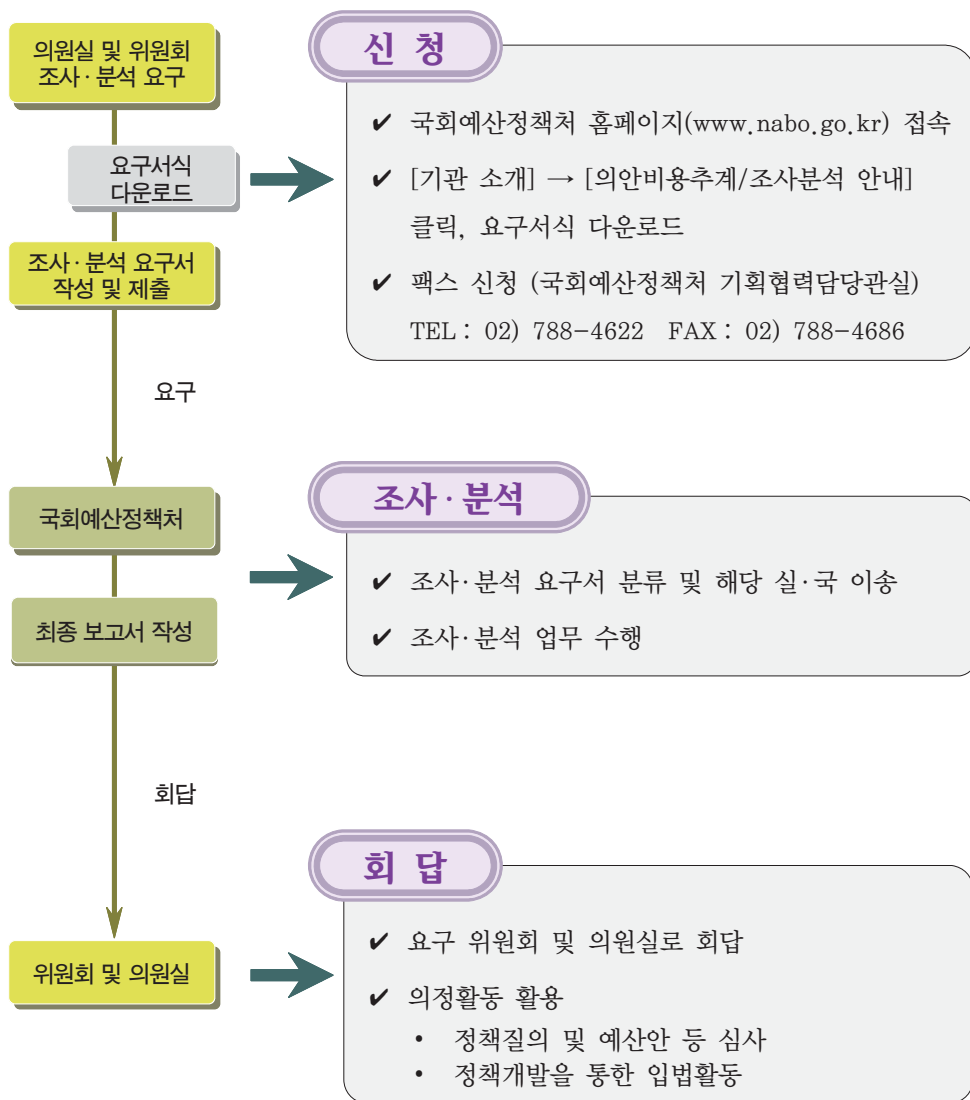
01 입법정보
요청

02 법률안
입안요청

03 의안비용
추계요청

국회정보시스템 | 법률자식정보 | 예산안정보 | 국정감사정보 | 의안정보 | 회의록 | 인터넷의사중계 | 영상회의록 | 미디어자료관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1(여의도동)
Copyright © 대한민국국회 All rights reserved.



2. 법안비용추계 현황

가. 법안비용추계 개관

「국회법」 제79조의2에 따르면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적 비용이 수반되는 법안을 제안하는 경우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는 해당 의안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의안의 통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1·2·3과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비용추계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서 국회의원 및 위원회의 추계요청에 따라 독립적으로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제공하고 있다.

준비된 법안의 비용추계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하려면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의안비용추계요구서식을 작성하여 팩스(02-788-4686)를 통해 기획관리관실 기획협력담당관실에 송부하면 된다.

나. 법안비용추계 의뢰 및 회답 현황

국회예산정책처는 2004년 출범 이후 2016년 12월 31일까지 국회의원 및 위원회로부터 총 8,784건의 비용추계 의뢰를 받아 철회 처리된 705건을 제외한 8,079건을 회답하였다.¹⁾ 비용추계 업무를 시작한 2004년에는 54건의 의뢰에 그쳤으나, 제17대 국회에서 연평균 153건, 제18대 국회에서는 연평균 487건의 의뢰가 접수되었다.

제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5월 이후 2016년 5월 29일까지 접수된 비용추계 의뢰 건수는 3,639건으로 제18대 국회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5년 3월 19일부터 의원 발의 법률안 비용추계서 작성 주체가 예산정책처로 일원화되고, 위원회 수정안·대안에 대한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첨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비용추계 의뢰가 급증하여 2016년에는 2,705건이 의뢰되었고 2,522건의 비용추계서가 회답되었다.

1) 2016년 12월 31일 기준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접수 및 회답 건수]

(단위: 건)

		의뢰	철회	회답
제17대 국회	2004	54	0	54
	2005	184	39	145
	2006	184	45	139
	2007	166	23	143
	2008 (~5.29)	23	4	19
	소 계	611	111	500
제18대 국회	2008 (5.30~)	421	38	383
	2009	508	66	442
	2010	516	61	455
	2011	477	63	414
	2012 (~5.29)	26	3	23
	소 계	1,948	231	1,717
제19대 국회	2012 (5.30~)	702	43	659
	2013	717	34	683
	2014	394	18	376
	2015	1,707	85	1,622
	2016 (~5.29)	119	6	113
	소 계	3,639	186	3,453
제20대 국회	2016 (5.30~)	2,586	177	2,409
	소 계	2,586	177	2,409
합 계		8,784	705	8,079

주: 1. 2016년 12월 31일 기준

2. 법안비용추계 건수는 전체 추계 건수 중 세수추계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 비중

2004년 5월 이후 2016년 말까지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의원발의 법안은 8,583건(세수추계 제외)으로, 이 중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과에서 작성한 추계서는 40.8%에 해당하는 3,499건이다. 제17대 국회에는 그 비중이 23.5%였다. 제18대 국회에는 30.2%로 증가하였고 제19대 국회에는 43.3%로 증가하였다. 제20대 국회의 경우 2016년 12월 31일 현재 908건의 의원발의 법안 첨부 추계서 중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비용추계서는 908건으로 100%이다.

[의원발의 법안에 첨부된 지출 비용추계서 중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추계서 비율]

(단위: 건, %)

		전체지출 비용추계서 첨부발의법안	의원발의 법안지출 비용추계서(a)	의원발의법안 중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서(b)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비율(b/a)
제17대 국회	2004 (5.30~)	144	144	15	10.4
	2005	352	322	77	23.9
	2006	343	286	76	26.6
	2007	560	413	111	26.9
	2008 (~5.29)	57	50	7	14.0
	소계	1,456	1,215	286	23.5
제18대 국회	2008 (5.30~)	776	623	181	29.1
	2009	1,024	925	284	30.8
	2010	860	771	248	32.2
	2011	962	863	253	29.3
	2012 (~5.29)	45	41	7	17.1
	소계	3,667	3,223	973	30.2
제19대 국회	2012 (5.30~)	937	873	271	31.0
	2013	1,142	1,060	368	34.7
	2014	778	707	196	27.7
	2015	783	701	601	85.7
	2016 (~5.29)	19	18	18	100
	소계	3,659	3,359	1,454	43.3
제20대 국회	2016 (5.30~)	1,051	908	908	100
	소계	1,051	908	908	100
합 계		9,833	8,705	3,621	41.6

- 주: 1. 2016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의원 발의법안을 분석
 2.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서의 첨부 건수는 법안의 국회 접수일자 기준
 3. 세수추계서 및 세수·지출공동추계서는 제외

라. 관련 보고서 발간

□ 2016 재정법령집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매년 재정 관련 법률과 주요 하위 법령을 수록한 「재정법령집」을 발간하고 있다.

「2016 재정법령집」은 재정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법령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3단 대비표 형식으로 수록하여, 법령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6년 3월을 기준으로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등 「2015 재정법령집」 발간 이후 제·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였다.

법령은 헌법 및 국회편, 국가재정편, 지방재정편, 국가 채권·채무편 등 모두 4가지 주제로 구분하였으며, 법령명을 알고 있을 경우 용이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가나다순 법령색인을 추가하였다.



3. 세입관련 법률안 세수변화 추계

가. 세입관련 법률안 세수변화 추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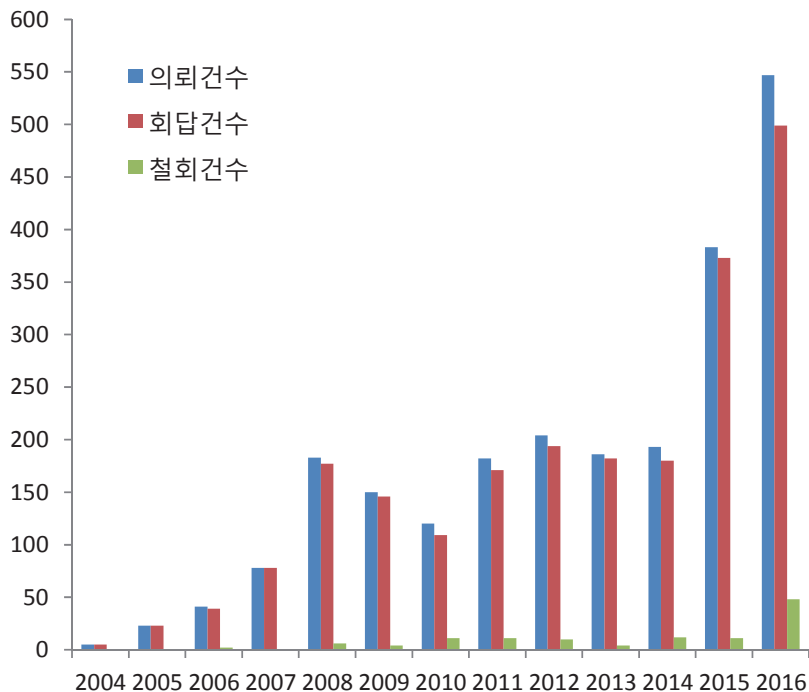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입과 관련된 의안의 비용추계를 의뢰받아 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관련 업무를 시작한 2004년의 의안비용추계 의뢰 건수는 5건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연평균 160건 이상의 세입관련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작성하여 국회의원과 위원회에 제공하였다. 2015년은 「국회법」 개정에 기인하여 전년에 비해 두 배(383건)에 달하는 비용추계가 의뢰 되었으며, 2016년에도 의뢰건수는 큰 폭(42.8%)으로 증가하였다.

2015년 3월부터는 비용추계제도의 실효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비용추계서의 작성 주체를 국회 예산정책처로 일원화하고, 위원회 수정안 및 위원회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의 첨부을 의무화하도록 「국회법」이 개정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제도 개정 사항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비용추계 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추계시스템 고도화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비용추계서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세입관련 법률안 의안비용추계 의뢰 및 처리 추이]

(단위: 건)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의뢰건수	5	23	41	78	183	150	120
회답건수	5	23	39	78	177	146	109
철회건수	0	0	2	0	6	4	11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의뢰건수	182	204	186	193	383	547	2,295
회답건수	171	194	182	180	373	499	2,176
철회건수	11	10	4	12	11	48	119



세입관련 의안비용추계의 접수 분포를 분기별로 살펴보면, 하반기에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상반기(101건)에 비해 하반기(446건)에 의뢰건수가 급증하였으며, 특히 개원 직후인 3/4분기에 의안비용추계 접수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세입관련 의안비용추계 분기별 접수 분포]

(단위 : 건,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의뢰건수	12	89	290	156	547
(비 율)	(2.2)	(16.3)	(53.0)	(28.5)	(100.0)

2016년에 회답한 세입관련 의안비용추계 499건 중 416건(83.4%)이 세법관련 비용추계이며, 그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안비용추계가 143건(28.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포함)일부개정안(94건)과 소득세법 일부개정안(58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법인세법 일부개정안(30건)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26건)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비해 회답건수는 126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법(38건), 기타세법(29건), 조세특례제한법(25건) 일부개정안 순으로 회답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2016년도 세입관련 의안비용추계 회답 현황(법안종류별)]

(단위 : 건, %)

	세 법						세법 외	합 계
	조특법	지방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세법	기타세법		
회답건수	143	94	58	30	26	65	83	499
(비 율)	(28.7)	(18.8)	(11.6)	(6.0)	(5.2)	(13.0)	(16.6)	(100.0)

- 주: 1.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 부가세법은 부가가치세법
 2. 지방세법에는 지방세법 외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포함



Annual Report of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주요 사업 및 활동

1.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지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 및 보좌진을 대상으로 예산안·결산·기금관련 토론회와 더불어 각종 예산정책현안에 대한 설명회·토론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였다.

가.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

1. 개요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과 공동으로 2016년 10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9월 2일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제고,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경제 여건 및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용기반을 마련한다는 기본방향에 따라, 총지출 기준으로 400조 7천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재정건전성 확보와 함께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 앞서 국회 심사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

이번 토론회의 전 과정은 국회방송으로 녹화중계되었으며,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님의 격려사, 김현미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광림·장병완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의 축사가 있었다.

발제는 조용복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과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과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 최병호 부산대학교 교수가 참여하였다.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토론자들은 2017년도 예산안 및 재정운용 방향, 분야별 재원배분 그리고 재정개혁 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2. 발제와 토론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재정총량, 분야별 재원배분, 중점 투자 방향, 재정개혁 등으로 구분하여 그림과 도표 등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조용복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2017년 경제전망 및 재정운용 방향, 재정운용기조 및 재정건전성, 주요 정책현안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분석내용을 토대로 심도 있게 평가하였다. 토론회는

토론자들의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개진이 끝난 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에게 묻는 방청객의 질문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내년 예산안의 주요 현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



□ 재정운용 방향 및 재정총량

올해에도 2017년도 예산안의 재정운용을 놓고 발제자 및 토론자들 사이에 의견 차이를 보였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총수입은 414.5조원으로 전년대비 6% 증가하고, 총지출은 400.7조원으로 3.7%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 결과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총지출 증가율이 명목 경제성장률과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이고 증가분의 대부분이 의무지출로 이루어져 재정확대 효과에 한계가 있으며, 2016년도 본예산 대비 재량지출 증가율은 0.6%에 불과해 정부의 재정운용기조를 확장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객관적 수치만 보면 확장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재정건전성 측면을 고려하면 확장적 재정운용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김태년 의원은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이고 대부분이 의무지출이라는 이유를 들어 확장적 재정기조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김태일 교수는 총량에 대한 확장성 여부를 떠나 2017년 예산안이 확대되는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병호 교수 또한 재량지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는 재정의 역할 확대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재정건전성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재정수지가 2017년에 GDP 대비 -1.7%이고 국가채무비율은

40.4%로 국가채무수준이 중기계획기간 중에 40.7%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목표를 준수한 사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최근의 세수 호조는 실물경제와 괴리된 일시적인 원인에 의한 현상일 수 있으므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지출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분야별 자원배분

기획재정부는 2017년도 예산안 자원배분의 기본방향이 대내외 여건 및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투자 중점은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경제활력 회복, 민생안정, 국민안심에 두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복지분야 예산증가율이 5.3%로 낮다는 비판에 대해 기초연금 및 맞춤형 급여 등이 정착되면서 의무지출은 줄었고 재량지출이 복지 분야에 증가하였으므로 5.3%가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2017년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 직업훈련 및 직업이 체계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각 분야별 주요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SOC 예산지출 축소에 대하여 김동철 의원은 국토 면적당 도로, 철도 등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는 정부의 지출축소 논거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장기적인 국토 균형발전을 위하여 SOC 예산을 급격히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최병호 교수는 SOC 예산이 이미 총량적으로는 적정수준을 달성하였다는 학계의 의견을 언급하며 지역별 격차 완화를 위한 배분상의 문제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재정개혁

기획재정부는 재정 개혁 파트에서 재량지출 구조조정 및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과정을 통하여 필요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2017년 예산안에는 205개 사업을 추가로 통폐합하고 재정지출효율화를 위해서 신규 보조 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원마련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정건전화법」을 준비 중에 있으며,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성도 강화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이러한 지출구조조정 노력은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하였으며, 다만 향후에는 구조조정 성과와 재정절감 효과 평가를 위해 부처별 지출구조조정 내역과 통폐합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정부가 준비 중인 「재정건전화법」 상의 재정준칙 및 Pay-go제도와 관련하여 정부가 설정한 재정준칙 목표는 다소 관대하게 설정되었다고 지적하며, Pay-go제도가 입법권을 제약할 수 있고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제도 도입에 대해 국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자들 또한 정부의 재정개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주광덕 의원은 초과세입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법인세 인상 등 세법개정안 논의에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김태년 의원은 법인세 인상 등 세수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동철 의원 역시 비과세·감면을 통

한 재원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안정적인 세원확보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최병호 교수는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전망, 재원배분, Top-down과의 연계 등을 위해 도입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매년 실효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구속력 제고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3. 마무리

토론회 발제 및 토론이 끝난 후 방청객 질문에 대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의 답변이 진행되었다.

주광덕 의원에게는 생계급여, 장애수당, 어린이집 확충 등 복지예산 증액 가능성에 대해 물었고 이에 대해 현실적인 수요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SOC 예산에 대한 쪽지예산이 증가할 우려와 최종 의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에 대해 어떻게 해결 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김태년 의원과 김동철 의원은 제도적으로 쪽지예산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하며 토론 과 타협을 통해 균형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광림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장병완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가 차례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한 총론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원만한 합의에 대한 다짐을 끝으로 「2017년 예산안 토론회」는 마무리 되었다.

나. 제20대국회 초선의원 대상 설명회 현황

연 번	개최일	주 제	장 소	대 상
1	6. 3	국회 예·결산 심사 설명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2	6. 8	국회 예·결산 심사 설명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새누리당 초선의원

다. 국회의원 대면보고 현황

[예산분석실 국회의원 대면보고 현황]

연 번	보고일	대면보고 내용	보고자	대 상
1	8. 16	고용노동부 추경예산안 관련	문종열 과장 김성은 분석관	위성곤 의원
2	10. 20	2017예산안 관련 보고	서세욱 과장 김혜미·한성진· 윤성식 분석관	김종훈 의원
3	10. 24	2016년도 국정감사 관련	박혜진 과장	김도읍 의원
4	10. 26	고용노동부 2017년도 예산안 관련	문종열 과장 김성은 분석관	이상돈 의원
5	10. 26	여성가족부 2017년도 예산안 관련	문종열 과장 김성은 분석관	이정미 의원
6	10. 27	환경부 2017년도 예산안 관련	문종열 과장 강상규 분석관	이정미 의원
7	10. 31	여성가족부 2017년도 예산안 관련	문종열 과장 김성은 분석관	이정미 의원
8	11. 15	대구지역 사업에 대한 예산분석보고서 주요내용	조용복 실장 윤용중 심의관 상지원 과장	추경호 의원

[경제분석실 국회의원 대면보고 현황]

연번	개최일	대면보고 내용	보고자	대상
1	7. 28	현행 우리나라 주요세목의 과세체계	최천규 분석관	심상정 의원
2	9. 1	조세 관련 자료	채은동 분석관 김효경 분석관	김성식 의원
3	10. 20	R&D비용세액공제 현황 및 개선방안	채은동 분석관	이연주 의원
4	10. 31	2017년 예산안 관련 법인세 방안	채은동 분석관	국회의장

[사업평가국 국회의원 대면보고 현황]

(2016. 9. 기준)

연번	개최일	대면보고 내용	보고자	대상
1	6. 8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현안 및 정책 관련	최미희 과장 안태훈 평가관	조정식 의원
2	6. 16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청년일자리사업 분석 고용보조지표별 청년체감실업률 추이 분석	김수옥 과장 강세욱 평가관	이 훈 의원
3	8. 10	일자리사업 현황과 성과평가	김수옥 과장 강세욱 평가관	김현미 의원
4	8. 12	국가R&D정책 평가	최미희 과장 임길환 평가관	김성수 의원
5	8. 29	인천공항철도 재구조화 관련 쟁점	최미희 과장 임길환 평가관	윤영일 의원
6	9. 8	전력분야 국감대비 주요 질의사항 점검	허가형 평가관	박재오 의원
7	9. 19	일자리사업 현황과 성과평가	김수옥 과장 강세욱 평가관	김현미 의원

2. 정책 토론회 개최

가.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 -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

□ 개요

2016년 7월 14일, 제20대국회 개원을 기념하여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개원한 제20대국회가, 주요 현안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국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의 전 과정은 국회방송으로 녹화중계 되었으며, 본격적인 발제 및 토론에 앞서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 정세균 국회의장의 격려사, 조경태 기획재정부위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아울러 정진석 새누리당 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영상 및 서면으로 축사를 갈음하였다.

토론회는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및 최경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정남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 경제·재정분야 전문가 설문조사

토론회 시작으로 “경제·재정 분야 전문가의 경제인식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영상으로 편집하여 공개되었다. 본 설문조사는 경제·재정 분야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5~6월 중 진행된 것으로, 설문조사는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요원인, 저성장 국면 탈피를 위한 시급한 정책, 분야별 구조조정 시 고려 사항 및 정책 방안, 국가채무 수준 진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토론

김준기 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경제여건 진단과 저성장에 대한 해법, 구조조정과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지난 20여 년간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생산성마저 하락하고 있으며, 경제 역동성 약화, 생산성 하락의 주원인은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연됨과 동시에 여러 규제가 투자와 진입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구조조정, 구조개혁과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 -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



유병규 산업연구원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국내 업종별 경기는 부진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세계경제는 브렉시트 등의 여파로 인해서 저성장 구조가 더 굳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 미국의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고 있어서 앞으로 중국 등 주요국도 자국 이익중심의 보호주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내 경제는 김영란법 발효 등으로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내수업종 경기는 하반기에 추가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 진단하였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우리 경제가 추격형 경제성장 전략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성장패러다임이 전환이 지연되면서, 생산성 향상은 둔화되는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투자 기회가 소진되고 있고, 가계부채의 누적, 고령화, 불확실성의 증대 등으로 투자와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을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분해해서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여성·청년을 중심으로 경제활동 증가율이 외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이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는 측면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은 향후 성장이 고용을 이끄는 패러다임의 힘이 약해지고 있어, 고용이 성장을 이끄는 쪽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 그리고 경제주체들이 해야 할 일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면서, 입법과정에서 정책의 우선순위, 선택과 집중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있는 구조개혁,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화, 그리고 가계소득의 불평등 감소 등 우리가 내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착실하게 실행에 옮겨야한다고 밝혔다.

최경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우리 경제가 제일 힘들어 하는 것은 불확실성이고 정부 정책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언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사례로 들어 소개하였다.

또 세제개편과 관련하여 법인세율을 높이지는 주장은 세계적인 추세와 맞지 않으며, 개인소득세의 면세 제도를 없애는 것이 우선이라 주장하였다.

정남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은 우리 경제는 내수 쪽에서 경제활성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내수 주도로 성장을 하지는 뜻은 아니고 내수부문도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악순환을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세제개편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라 생각되며,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면세점을 최저임금수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내려서, 조금씩이라도 근로소득세를 내도록 하여 전체적으로 소득세의 재정기여비율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마무리

김준기 처장은 민생국회·경제국회·정책국회를 표방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지향하고 있는 제20대 국회가, 국민의 힘을 결집시키고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통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정지원전문기관으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 - 인구·재정·복지: 넥스트 챌린지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준기)는 제20대국회 개원을 기념하여,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핵심이슈로 떠오른 인구·복지·재정이라는 3가지 상호의존적 변수들이 던지는 도전적 상황을 재조명하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범국가적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2016년 7월 19일 오전 10시에 세미나 「인구·복지·재정: 넥스트 챌린지」를 개최하였다.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고도성장기부터 점진적으로 복지지출의 증가가 이루어져 온 서구 복지국가와 달리, GDP 대비 복지지출이 OECD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치는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 및 저성장의 상황에서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하면서, 오늘의 논의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제20대국회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참석하여 대독한 격려사를 통하여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를 비롯 양극화, 저성장이라는 거대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직면해 있고 특히,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노인빈곤율로 인해 노인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다른 한편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갈등이 고조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국민통합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제20대국회는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정책방향을 정립해야 하며 오늘 세미나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힐 다양한 지혜와 의견들이 제시되고 논의되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주길 당부한다고 하였다.

임현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고세훈 고려대학교 교수가 “한국복지: 현실, 전망, 구상”에 대해,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고령화, 저성장, 장기 재정전망 및 정

책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어서 김종석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현 국민의당 국회의원, 고재학 한국일보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인구, 복지, 재정에 관한 정책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주제발표

고세훈 고려대학교 교수는 “한국복지 : 현실, 전망, 구상”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조세의 빈곤율 개선효과나 정부이전지출의 불평등 개선효과 등 복지수준을 나타내는 각종 통계로 볼 때 한국의 국가복지지는 취약하며 민간의 복지수준이나 복지의식도 취약하다고 하였다. 한국의 심각한 복지현실에도 불구하고 성장결정론, 복지민영화, 복지국가 위기론 등과 같은 반복지 담론들이 성행하는 것은 역설적이며, 한국의 계급 간 권력자원의 배분이 아주 심하게 불균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서유럽 복지국가가 시혜와 쟁취, 곧 보수주의와 노동정치를 두 축으로 발전하였으나, 시혜의 전통이나 진보정치의 역량 모두 취약한 한국은 민주주의를 시장영역으로 확대하여 복지국가를 공세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복지한국의 과제는 국가와 시장 모두에서 권력의 행사 자체를 민주적으로 규율하는 제도적 틀을 정립하는 일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복지를 뒷받침하는 경제민주화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편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고, 우리의 현실에서 복지국가의 발전은 중장기적 전망에 있고 그 도정이 멀고 험하지만(not easy), 가야할 길이 복잡한 것은 아니라고(but simple) 강조하였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 저성장, 장기재정전망 및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 경제의 저상장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노동생산성은 증가하는데 실질임금이 정체되는 즉 ‘임금 없는 성장’이며, ‘임금 없는 성장’으로 기업저축이 대폭 증가하는 동안 투자, 고용, 임금, 배당 부진으로 경제전체가 기력을 상실하는 ‘기업저축의 역설’ 현상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2018년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조세부담률을 2.5%p 제고하여 2060년 국채/GDP 비율을 60%대로 안정화하고, 비과세·세제감면의 규모도 국세대비 한자리 수로 대폭 축소하는 등 재정구조의 전면적 개혁을 통한 장기재정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업저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이고 가계의 임금소득을 늘리는데 주력함으로써 경제 선순환구조를 복원해야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금융기업의 금융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인상 등 가계의 임금소득을 늘리기 위한 전향적 노력을 요구하였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행위 근절 등 경제민주화는 경제정의 차원을 넘어 거시경제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아젠다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 - 인구·재정·복지: 넥스트 챌린지]



□ 지정토론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의 경우 상위 10%의 소득층이 소득세의 70%를, 1%의 기업이 법인세의 80%를 부담하는 기이한 구조 하에서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으로 복지재원 조달은 한계가 있고, 법인세 인상은 자본유출의 위험을 내포하고 소득재분배와 거의 관계가 없으며 자원배분의 왜곡과 비효율성이 높고 조세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하면서 복지정책과 조세정책 간의 정합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 조세부담이 전제되어야 지속가능한 것이므로, 현재 한국과 같은 선별적 과세 구조에서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빈곤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사회의 커다란 문제인 불평등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시장개입에 의한 경제민주화가 중요하며 기본소득, 위미노믹스(womenomics)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남녀 간의 일을 구분하는 것 이상의 강력한 성평등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남녀역할이 유연해질수록 사회전체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양극화 심화로 인한 내수 소비 위축이나 양극화 자체로 인한 사회갈등과 비용이 크다는 점에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보다는 ‘양극화 해소 없이 성장 없다’는 정책 슬로건이 더 적합하며, 양극화 해소는 계량적인 목표(이를테면, 세입·세출의 양극화 감소효과를 5년 내 현재의 9%에서 미국 수준의 24%로)를 세워서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구·복지·재정 문제 해결의 키는 조세부담률을 확대하되 양극화 해소를 병행하는 방식이어야 하고, 법인세 감소정책 실패에 따라 법인세 정상화가 필요하며, 대기업에 대한 저리대출이나 정책금융은 중단하고,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해 가난한 지역일수록 부담이 큰 소득역진적인 복지사업은 비매칭사업으로 국고로 전액 부담해야 하

며, 상위 소득자에게 혜택이 가는 조세감면제도는 신속하게 정리하고 필요성 있는 사업은 조세감면형식이 아니라 지원금 형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고재학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미래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 정책이 중요하고, 제조업 중 한계기업은 과감히 구조조정 해야 하며, 국가 물적자원을 IT벤처, 강소기업,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로 중부담-중복지 모델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복지 수요자를 확대해 나갈 경우 세부담 대상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투자 및 고용과 연계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실효성 있는 출산율 제고정책과 함께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국가 핵심전략으로 설정하고 법·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저출산 위기, 길을 찾다’ 콜로키움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저출산의 위기와 이를 해결할 정책대안에 대한 모색을 위해 사업평가국을 중심으로 「저출산 위기, 길을 찾다」 콜로키움을 2016년 10월 13일(목) 10:00~12: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김준기 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가장 시급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고령사회의 문제에 대한 국회차원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콜로키움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나경원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 콜로키움이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본격 접어든 상황에서 적절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본 콜로키움은 저출산의 분석범위를 ‘원인진단과 정책방향’, ‘일자리’, ‘결혼 및 가족’, ‘양육’ 등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고 이들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해당 분야의 현황과 주요 쟁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주제발표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저출산의 원인진단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지금까지 출산율에만 초점을 맞춘 인구 정책이 저출산 위기를 자초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산을 아우르는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저출산 문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인구문제를 다루는 정부부처는 2004년에 처음 생겼을 정도로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기(失期)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한 국책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인구정책의 밑그림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일자리의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이어진 발표에서 현재의 저출산 대책은 청년고용 활성화를 통한 혼인율 제고에 주목한 것은 긍정적이거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책수단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또한, 임금피크제나 노동시장개혁 법안(파견법) 등을 청년고용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으며, 청년에게 안정된 적정임금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금현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결혼과 가족의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저출산의 원인이 개인과 부부차원의 선택의 문제임을 상기해야 하며, 청년층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비혼과 만혼가구가 늘고 있어 출산력이 악화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사와 양육부담에 대한 부부간 불공평성도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맞벌이인 경우는 물론이고 여성 외벌이 가구의 경우도 남성의 가사분담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별 가사지원을 바우처로 제공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일과 보육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미라 가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자녀양육의 관점에서’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우리나라 양육지원 정책은 보육시설 중심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정책에서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의 양육정책이 자녀양육을 보람이나 소중함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경제적 심리적 부담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육지원이 아니라,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출산 위기, 길을 찾다’ 콜로키움]



라. 조세정책토론회: 「201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2016년 10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6년 세법개정안’을 주제로 조세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제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의 정책방향이 대내외 경제환경과 재정여건 변화에 부응하는지 평가하고, 개정내용의 타당성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기획되었다.

개회식에서는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와 정세균 국회의장의 격려사가 전달되었다. 또한 조경태 국회기획재정위원장과 최병호 한국재정학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윤성식 고려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16년 세법개정 주요내용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대해,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이 “「2016년 세법개정안」 분석”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김유찬 홍익대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참석하여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 발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016년 세법개정 주요내용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2016년 세법개정의 기본방향과 세부 내용을 소개하고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중장기 조세정책의 방향을 함께 제시하였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및 투자위축 등 경제여건과 복지지출 수요 증가 등 현재의 재정여건을 설명하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과 과세형평성 제고 및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개정안으로 R&D 세액공제 확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확대,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등을 소개하였다. 민생안정 측면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의제매입세액공제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공평과세 측면에서는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 확대를 통한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을 소개하였다.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정책으로 기업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및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 계획을 밝혔다.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자연스럽게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을 전제로 하였다. 이에 성장 동력의 확충·과세형평 제고·안정적 세입기반 확보·조세제도 합리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을 소개하면서 발제를 마무리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2016년 세법개정안」 분석”이라는 주제로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세목별 정비방안 및 종합적인 평가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현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은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조세의 재원조달 기능 약화, 구조적 개편보다는 소극적 개편, 비과세·감면 정비방향과의 역행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중장기 세제개편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현행 조세구조의 특징과 세목별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조세정책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다. 소득세의 경우 세원확보 및 조세형평성 등의 기본원칙 하에 중장기적으로는 조세지출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법인세 측면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에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은 타당하나, 조세지원 규모가 크지 않고 보조적인 수단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소비세 부문에서도 반복적인 일몰연장으로 세수기반이 악화되거나 제도의 도입취지를 저해하는 제도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토론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법인세 인상 시 기업경영 악화 등 경제활력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되, 신성장동력 확충·서민과 중산층 생활안정·대기업과 고소득층 중심의 세입기반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하며 U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기업에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을 개진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소득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면서, 세제 측면에서도 보다 공평한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 및 대기업 세제혜택 축소,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 중산층 및 서민에 대한 공제 확대를 위한 안들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임대소득 비과세, 장기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준조합원 출자금 세액공제,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등에 대한 일몰연장을 주장하였다. 또한 기업소득환류세제 조정, 가업상속에 대한 혜택 축소, 법인세 강화 등의 방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조세정책토론회: 「201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네 번째 토론자인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완 없이 과세가 유예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법인세 인상이 복지 자원 확대 등 재분배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임대소득 등 *rend-seeking* 행위에 대한 과세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 세수 증가세가 최저한세 인상 및 조세감면 등의 정책효과 보다는 국세청의 세수지도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 우발적인 세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더불어 외국자본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체계 등 현 제도 하에서 국내 법인세를 조정하는 것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 의견도 제시하였다.

3. NABO-UNEP FI 국제공동 세미나: 기후환경규제와 산업·금융의 변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준기)는 국내 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책임) 경영 및 금융회사의 ESG(경제, 사회, 지배구조) 투자를 확산시키고자, 「기후환경규제와 산업·금융의 변화」를 주제로 향후 강화되는 기후환경규제가 산업 및 금융부문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 공동세미나를 UNEP FI(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와 공동으로 2016년 11월 24일 오후 2시에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2016년 7월 22일 국회예산정책처와 UNEP FI가 ‘지속가능 금융 및 책임투자’ 부문 관련하여 공동연구 수행 및 공동세미나 개최를 목적으로 하는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공동 주최하는 행사이다.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파리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대응이 계획단계에서 이행단계로 전환되고 있으며, 파리협정을 계기로 세계는 바야흐로 저탄소 또는 탈(脫)탄소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에 서명한 금융기관의 운용자산은 2015년 기준 약 100조 달러로 전 세계 운용 금융자산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여부와 수준이 점점 투자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기후환경·기후금융 및 책임투자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및 자원 조달 방안 마련을 모색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하여 국제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우리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표들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공적연기금의 공공성을 고려한 투자 확대,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한 정책 등과 관련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정책방향을 도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세미나가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흥기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Eric Usher 대표(UNEP FI)가 ‘기후·환경·규제와 금융’에 대해, Anthony Serhan 전략본부장(Morningstar)이 ‘기후·환경·규제와 산업’에 대해, 고기석 사업평가국장(국회예산정책처)이 ‘기후·금융·산업: 책임과 법’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용주 환경산업기술원 원장, Omar Selim CEO(Arabesque Partners),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기후환경규제와 산업·금융의 변화에 대한 주요 논점과 개선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주제발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Eric Usher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 대표는 ‘기후 · 환경 · 규제와 금융’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신기후체제를 위한 파리협정은 지난 25년간의 노력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결과이며 산업화이전보다 1.5~2℃ 기온상승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2℃ 목표를 위해서는 1조달러의 추가적인 투자가 2030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물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연간 3,0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인프라의 기후 탄력성을 구축하는 데도 많은 투자가 예상된다고 하였다.

UNEP에서는 금융부문의 발전을 조사하여 2015년 이후 많은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다양한 정책과 규제에 대한 보고(reporting)를 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disclosure)와 투명성(transparency) 향상에 대한 압력이 높아졌으며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을 어떻게 공개하고 공유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도전과제이며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금융부문에서 저탄소경제를 위한 공공재원(public finance)을 잘 운영하여 민간 투자의 확대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유인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 Anthony Serhan 모닝스타(Morningstar) 아태지역 전략본부장은 ‘기후 · 환경 · 규제와 산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아시아는 전 세계 인구의 60%가 거주하고, 성장률도 높고 성장가능성도 높기에 환경관련 이슈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다. 지속가능 투자는 단순히 사회책임 투자가 아니고 좀 더 광범위한 장기적인 투자를 의미하며 회사의 정보공개를 보면 기업이 얼마만큼 ESG를 고려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동안 모닝스타에서는 기업들의 ESG를 합계해서 국가별 ESG점수를 평가하였으며 ESG원칙을 회사의 재무실적과 연계하여 비교하고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보고(reporting)에 있어서는 점수가 좋고 각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개선 노력이 보이며, 반 이상의 한국 회사들이 회사 내에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은 핀란드,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ESG연계 투자를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를 위해서 시스템적인 뒷받침과 시장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투명성 확보 및 측정에 대한 노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고기석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은 ‘기후 · 금융 · 산업: 책임과 법’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 해수면상승, 대형기상사태와 같은 간접적 영향과 전기로 상승과 같은 직접적 영향으로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중요 사항이라고 했다.

[NABO-UNEP FI 국제공동 세미나: 기후환경규제와 산업·금융의 변화]



더군다나 지난 11월 4일에 발효된 파리협정은 최초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기후변화협정으로 단기적 과민반응과 불확실성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나, 정책방향성의 중장기적 경로는 불가역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였다.

국회에산정책처에서 최근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제 비교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37%라는 한국의 감축목표량에 대한 국제비교지수는 120.3으로서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극적 수준으로 평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소요를 추정한 결과 현재 정부가 기존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입 중인 예산(연간 3.1조원)과는 별도로 2030년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10년 간 약 31.2조원의 추가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공 기후금융 공급이 유발하는 민간 금융의 규모 또는 유인 수준이 약 5배 정도임을 고려할 때, 31.2조원의 조성은 민간부문에서 약 26조원의 자원조성을 전제로 하며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지속가능발전, ESG(환경, 사회, 지배), 책임투자 및 탄소공개의 원칙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도 기후환경규제와 관련하여 현재 다양한 입법 이슈(「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기관, 산업계 및 정부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며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교류 및 협력을 통해서 기후환경규제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산업 및 금융의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정토론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기후환경 규제와 금융의 흐름은 깊은 연관성이 있으며 경제·환경·사회의 균형과 통합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금융기관이 어떻게 참여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야 하는 고민과 실천의 산물이 바로 ‘지속가능금융’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사회책임투자, 지속가능금융이라는 국제적인 흐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활동 또한 소극적임을 밝혔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의 사회책임투자 등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공적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사회책임투자 등 지속가능금융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시키고 전 인류적 해결 과제인 기후변화 문제를 완화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며, 국회CSR정책연구포럼과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 의원으로서 지속가능금융, 사회책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을 밝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사회책임투자(SRI)는 투자대상의 재무적 측면만이 아니라 ESG(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투자하는 철학이자 방법이며 전 세계적으로 사회책임투자의 규모가 늘어나고 주류 투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책임투자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 사례는 ‘국민연금법’으로 국민연금의 ‘ESG 고려와 공시법’이 유일하며 이 법이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규모를 증가시키는 데는 아직 기여하지 못하는 현실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를 촉진할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확산은 ‘포용적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기후금융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 및 정책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책임투자(SRI),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논의가 지속가능경영의 관점에서 논의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초기단계라고 했다. 최근 들어 SRI(사회책임투자)펀드가 조직·운영되고 있으나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원칙을 보다 구체화하고, CSR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 적극 투자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현재 책임투자 펀드에서 투자할 만한 기업이 다양화 될 수 있도록 ESG 평가를 위한 정보를 시장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가시장 발전을 위해 Data 수집 회사와 이를 이용한 평가회사가 다양화 되는 것이 필요하고, 평가 결과도 공개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용주 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산업계의 환경경영 노력을 유도하는 매커니즘 구축에 금융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책임투자 성과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 환경리스크와 재무적 성과 간 상관관계 도출 등 기초 연구가 중요하고 금융권에서 환경리스크를 반영하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며, 특히 인센티브 마련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좀 더 체계적으로 녹색금융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에서 환경사회 리스크 평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기후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민간금융의 활성화 유도도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Omar Selim 아라베스크 파트너스(Arabesque Partners) CEO는 지속가능성, 지속가능경영 혹은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관련 사안은 전 세계적으로 주류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라베스크와 옥스퍼드 대학이 공동으로 지속 가능 경영이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논문 약 200여 개를 분석한 결과 ESG 요소가 기업의 자본비용, 운영 성과 및 주식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다. 또한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에서 발간한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초에 미화 21조 가량이 지속가능투자(sustainable investment) 전략을 통해서 관리되는 자산이라고 발표되었으며 이는 2012년의 13조달러에 비해 약 8조 달러, 61%가량의 성장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총 자산은 미화 61조에서 미화 70조로 약 15% 정도의 성장을 보였다고 했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기후변화 대응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일 즉, 탄소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기업 자신과 지구를 동시에 살리는 “현명한 사리사욕(enlightened self-interest)”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재무적 정보가 기업의 과거에 대한 실적이라면, ESG 정보는 기업의 미래 실적을 예측하기 위한 자료이기에 ESG 정보공개는 적격심사, 잠재적 위험 평가, 주주 관여 등 책임투자의 기본 전략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가재정법」과 「자본시장법」에 ESG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희망하며, 미국의 정권 교체로 인해 파리협정의 미래가 불확실해졌으므로 2020년 이전에 가급적 빨리 가동되도록 촉구하는 국제적 압력을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에너지 관련 기금을 통합하여 기후변화 관련 민간투자를 견인할 공적 투자기금의 창설을 제시했다.

4. 전문가 간담회 및 포럼 개최 현황

가. 전문가 간담회 현황

국회예산정책처는 학계,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수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하여 재정·조세 분야와 사업평가 분야의 현안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외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강화하고 분석보고서 작성 및 조사·분석 요구사항의 처리에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예산분석실 전문가 간담회]

연번	개최일	주 제	발표자	소 속
1	1. 13	전문가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프로페셔널 구글링	이재현	구글 정책협력실
2	1. 19	국회 예·결산 심사제도의 개선 방향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
3	2. 5	사학연금공단의 사학연금 장기재정추계 모형 연구	김병률 주효찬	사학연금공단
4	2. 19	국민기초생활급여 장기 재정 전망 방법 연구	신화연	보건사회연구원
5	2. 25	군인연금 장기 재정 전망	문채봉	한국국방연구원
6	2. 25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현황 및 개선과제	박홍준	한국연구재단
7	2. 26	국민건강보험 장기 재정추계 모형 연구	현경래 이수연	국민건강보험공단
8	2. 29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모형 연구	신경혜	국민연금공단
9	2. 29	국회 예·결산 심사제도 개선방안	류덕현	중앙대학교
10	3. 11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 전망	김용철	공무원연금공단
11	3. 17	한·일 경제상황에 관한 의견 교환 (저성장 지속과 한국경제)	신후식 미아지마	전 거시경제과장 미즈호종합연구소
12	3. 18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기준	신동준	법무법인 광장
13	3. 31	정보·통신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박현제 김태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연번	개최일	주 제	발표자	소 속
14	4. 27	국회 예·결산 심사제도 개선방안	정해방 황도수 김성수 장용근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연세대학교 홍익대학교
15	5. 2	재정법률 개선과제	김성수 성승제 장용근 국경복	연세대학교 한국법제연구원 홍익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16	6. 28	하반기 경제전망 및 통화정책	허재환	미래에셋대우
17	7. 29	건축물 법안비용 추계	김용표 송홍준	원양건축사사무소
18	8. 26	정보시스템 구축 법안비용추계 기법	김영진	마이스스타
19	11. 22	기금제도의 이해 및 개선에 관한 간담회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20	11. 30	재정준칙과 국회의 역할	류덕현	중앙대학교
21	12. 1	기금운용 관련 전문가 간담회	구진서 노재수	전력기반센터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22	12. 7	성인지 예·결산 분석보고서 개선방안	이택면	여성정책연구원
23	12. 13	법안비용추계시 공시지가 활용 및 유의사항	강동훈 이신일	한국감정원
24	12. 13	서민주택금융 현황과 과제	김덕례 한동진	주택산업연구원
25	12. 16	우리나라의 적정 SOC투자 규모 관련	김호정	국토연구원
26	12. 16	관상어 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전민민	국립수산물과학원
27	12. 19	중소기업 성과공유제의 현황과 정책과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28	12. 21	규제비용분석	김신	한국행정연구원
29	12. 26	출연금 지원 확대를 통한 정부출연기관 연구 안정성 확보 방안	김이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제분석실 전문가 간담회]

연번	개최일	주 제	발표자	소 속
1	1. 22	경제민주화의 현황과 과제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2	1. 29	기금현황과 주요쟁점	박노옥	조세재정연구원
3	2. 4	동반성장과 이익의 공유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4	2. 5	세대간 회계를 이용한 세대별 재정부담분석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최기홍	국민연금연구원
5	2. 15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장기재정 전망 모형 분석	문성현	백석대학교
6	2. 16	장기재정전망 거시모형 점검	성명기	국민연금연구원
7	2. 18	Dynamics of Fiscal Financing in Korea	허준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8	3. 11	조세특례심층평가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
9	3. 25	프랑스 재정제도	김지영	대구대학교
10	4. 1	선거제도와 재정정책	최승문	조세재정연구원
11	4. 7	산업별 기업구조조정 방향 및 개선 방안	하 준	산업연구원
			정대희	KDI
12	4. 15	효율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향과 개선방안	이종철	산업은행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13	4. 26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 현황과 과제	이성태	삼정KPMG 상무이사
14	4. 29	구조조정의 경험과 교훈	박홍수 조기환 배원섭	한국자산관리공사
15	5. 1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집행 방향	원동진 문경준	산업통상자원부
16	5. 31	생산성 제고를 위한 조세·재정정책방향	Ruud de Mooij	IMF, Deputy Division Chief in the Tax Policy Division of Fiscal Affairs Department
17	6. 14	금융소비자보호법 현황, 쟁점 및 과제	노형식	한국금융연구원
18	6. 28	독일Industry 4.0(제4차 산업혁명)	김인숙	KDI
19	7. 11	조세특례평가 전문가 간담회: 소비세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연번	개최일	주 제	발표자	소 속
20	7. 12	대안적 방식의 사회적 합인을 적용 방안의 모색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21	7. 14	조세특례평가 전문가 간담회: 소득세	권혁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22	7. 20	조세특례평가 전문가 간담회: 법인세	김성태	청주대 경제학과
23	8. 5	Key Economic Challenges in Asia: A Focus on China and Japan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국
24	8. 18	거시재정계량모형을 통한 재정정책 효과 분석	홍성철	중소기업연구원
25	8. 30	2016년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원인과 향후전망	장석인	산업연구원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26	11. 23	살림의 명제로 본 경제 재정 헌법의 개정론	이덕연	연세대학교
27	12. 6	최근 소비행태 변화 양상과 세정 개선방안	김진영 최홍신	국세청 개인납세국

[사업평가국 전문가 간담회]

(2016. 12 기준)

연번	개최일	주 제	발표자	소 속
1	2. 2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요인을 이용한 투자 전략	손경우	국민연금연구원
2	2. 4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지은정	노인인력개발원
3	2. 19	경찰인력운용 평가	이동희	경찰대학교
4	2. 19	국방조달 현황과 과제	조관식	국방연구원
5	2. 19	일 학습 병행제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전승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6	2. 24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	임대웅	Eco&Partners
7	3. 3	성과측정 역설현상의 의미와 대응	이광희	한국행정연구원
8	3. 4	교통시설 투자정책 평가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호정	국토인프라 연구본부
9	3. 4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용 실태	박명우	한국거래소
			방문옥	한국기업구조조정지원

연번	개최일	주 제	발표자	소 속
10	3. 8	기초연구지원정책의 성과와 과제	이윤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안화용	한국연구재단
11	3. 31	한·중 FTA 보완대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상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	4. 1	난민관리 정책방향	이호택	사단법인 피난처
13	4. 8	건강보험사업 전문가간담회	서남규	건강보험평가연구원
14	4. 22	주택담보대출정책 평가	노승한	건국대학교
			박천규	국토연구원
15	4. 26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	김운	서울대학교
16	4. 28	국가장학금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미란	한국교육개발원
17	5. 9	일경험지원사업 평가	이상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8	6. 17	한국 지역별 자본스톡 추계 및 공간패널 모형을 이용한 사회간접자본의 최적 규모 연구	공준현	중앙대 경제학과
19	6. 23	농식품 수출지원 사업평가	김정렬	한성대 경제학과
			김미복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
20	7. 5	산업,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 재정소요 시나리오 분석	박영구	아주대 에너지시스템학과
			오대균	에너지공단
21	7. 13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	조정아	통일연구원
22	7. 15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한계 및 개선과제	장영기	순천대
			유경선	광운대
			정용일	한국기계연구원
23	8. 11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지은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4	8. 16	국방재정 현안검토	박재욱	국방연구원
25	8. 17	기후변화협약 이행과 기후금융	김성우	KPMG
			김민진	기획재정부
26	9. 6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강병화	한국시설물안전 진단협회
27	9. 28	저출산 대책 보고서 간담회	차병섭	KDI
28	10. 10	해외 아동수당제도의 효과성 논의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연번	개최일	주 제	발표자	소 속
29	11. 1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평가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홍중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최종석	에너지경제연구원
30	12. 1	농축산 ICT융복합 지원사업 평가	양종열 외 2인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등
31	12. 7	시설물 안전관리 평가	강병화	한국시설물안전전담협회
32	12. 13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의 국내외 현황	황용수	한국원자력연구원
33	12. 16	국방 중기재정운용 개선과제	백재욱	국방연구원

나. 포럼 현황

국회예산정책처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각 실·국별 포럼 개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예산분석포럼]

연번	개최일	주 제	발표 및 토론
1	1. 11 ~ 3. 17	2016 주요 분석주제 심의회	예산분석실 전직원
2	3. 29	제1차 「NABO 국방재정정책포럼」	홍두승 교수 외 12인
3	5. 25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법률 개선과제 심의회	예산분석실 전직원
4	5. 13 ~ 6. 28	2014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 심의회	예산분석실 전직원
5	7. 26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회	예산분석실 전직원
6	8. 22 ~ 8. 25	예·결산 보고서 주요내용 심의회	예산분석실 전직원
7	9. 26 ~ 10. 21	201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 심의회	예산분석실 전직원
8	12. 8	제3차 「NABO 국방재정정책포럼」	홍두승 교수 외 6인

[NABO 재정포럼]

연번	개최일	주 제	발표 및 토론
1	2. 24	한국의 불평등	이우진
		자영업 과잉과 서비스업 생산성	김태일
2	10. 17	규제개혁의 개선 방안 모색	전영평
		한국 소득불평등의 추세와 경기변동 특성	곽노선
		복지재정의 현실적 규모에 관한 소고	이철인

[사업평가포럼]

연번	개최일	주 제	발표 및 토론
1	1. 19	「주거정책평가 포럼」	이창무 교수 외 4인
2	2. 3	지역산업 경쟁력강화사업평가	박재곤 팀장 외 4인
3	5. 11	제2차 「NABO 국방재정정책포럼」	홍두승 교수 외 7인

5. 정보화 사업

2016년도 국회예산정책처 기획협력담당관실은 의정지원활동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비용추계시스템 고도화 2차 사업과 NABO-EFIS DB 갱신 사업을 수행하였다.

비용추계시스템 고도화 2차 사업은 2014년도의 ISP 계획에 맞춰 최근연도의 부처 예·결산 사업 설명자료를 DB화하고 이를 세부사업별로 분리, 디브레인 예·결산 수치 자료와 연결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의 참조자료 확보는 물론, 향후 거시총량 분석 및 의무지출 전망을 위한 자료기틀을 수립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NABO-EFIS DB갱신부문은 DB화한 통계항목을 검증하고 2016년 발표자료(419,949 항목)를 수집·갱신하였으며 886개의 신규 통계항목을 추가 DB화하였다.

□ 비용추계시스템 고도화 2차 사업

의안비용 추계회답은 관련 법률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비용을 추계, 요청의원실에 회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참조하는 자료 중, 행정부처의 사업 설명자료 내 단가 및 실제 예산반영 내역 등은 기본적으로 참조해야 할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설명서는 책이나 파일 형태로 제공되어 분석관 스스로가 수작업 방식을 통해 해당 자료를 검색·수집해야 했고, 검색 결과의 공유 또한 부족했기 때문에 비용추계 건별로 맞춤 자료를 확보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다.

고도화 2차 사업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연도의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를 DB화하고 이를 검색하는 기능을 구축하였다. 또한 부처의 사업설명자료를 세부사업별로 분류, 디브레인 자료와 연계하여 DB화함으로써 거시총량 분석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9월초까지 기재부에서 국회에 차년도 예산안을 제출한다. 고도화 2차에서 구축한 DB 관리기능을 통해 예산안 설명자료를 부처별·세부사업단위로 분리, 각 세부사업의 개요정보를 추출하여 디브레인 정보와 비교한 후, 매칭되지 않는 세부사업들을 수작업으로 연계하여 DB화한다. 연도별 사업코드가 동일한 계속사업일 경우 연도별 자료연계가 자동으로 가능하고, 신규사업이거나 사업코드가 매핑되지 않는 건은 관리화면에서 데이터 내용을 토대로 연도별 자료연계를 실시하도록 기능을 구축하였다.

또한 디브레인에서 제공하는 각 연도별 예·결산 수치자료와 설명자료를 연계하여 예·결산 수치의 신뢰도를 확보하였으며, 분리된 사업설명자료의 통합검색을 통해 비용추계시 필요한 자료 확보 시간도 대폭 절감하였고 다부처에 걸친 검색기능으로 담당부처 이외의 사업설명자료에서도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내용	• 기존 추계사례(967건) 및 요구 법률안 DB구축관리 • 부처 예·결산 사업 설명자료 DB화(세부사업별 분리) • 예·결산 자료 DB 갱신 및 관리 기능 구축 • DB화 자료 통합 조회 및 추계서 작성 지원기능 개발
사업기간	8개월(2016. 3. ~ 10.)

[비용추계 고도화 2차 - 예·결산 자료 조회 화면]

예산자료시스템

검색어 입력

예·결산자료조회 NASO 보고서 위원회 심사보고서 자료요구서

조회 목록

회계연도: 2016년 예산/결산: 전체 소관: 전체 부서/세출: 전체

전: 전체 검색

과목: 전체 분야: 전체 프로그램: 전체 사업명: 기본정보포함

출력할 목록: 정부안

소관	회계	프로그램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과)	2016년		2015년		과
					정부안	확장안	정부안	확장안	
경찰청	경찰행정	경찰이전수입	기타경찰이전수입	기타경찰이전수입	5	5	5	5	5
경찰청	경찰행정	경찰이전수입	경찰경찰위탁금	위탁금	6	6	6	6	6
경찰청	경찰행정	관유물대여	고정자산대여	기타고정자산대여	2	2	2	2	6
경찰청	경찰행정	기업특별회계영입수입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27,467	27,467	28,730	28,730	30,593
경찰청	경찰행정	재산수입	관유물대여	관유물대여	121	121	121	121	61
경찰청	경찰행정	재산수입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기타재산수입	1	1	1	1	1
경찰청	경찰행정	채화및유적건대수입	병용수입	병용수입	6,669	6,669	4,399	4,399	0
경찰청	경찰행정	채화및유적건대수입	합수입	기타합수입	7	7	7	7	316
경찰청	경찰행정	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금	680	680	330	330	3,028
경찰청	경찰행정	정부내부수입및기타	관입금	일반회계관입금	32,987	32,987	33,368	33,368	26,946
경찰청	경찰행정	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금	37	37	17	17	0
경찰청	경찰행정	정부내부수입및기타	기타	경각상각비관입금	1	1	1	1	1
경찰청	경찰행정	정부내부수입및기타	기타	국가준이익관입금	1	1	1	1	1
경찰청	경찰행정	정부내부수입및기타	관입금	일반회계관입금	2,853	2,853	3,183	3,183	1,933

2016 연차보고서

[통합 검색 화면]

5. 정보화 사업

[검색결과와 분류별 제공 화면]

■ 회계연도-예결산유형별

- 전체
- 2016년 예산안 316건
- 2015년 추경안 3건
- 2015년 예산안 417건
- 2015년 결산 281건

■ 소관부처별

- 전체
- 경찰청 9건
- 고용노동부 47건
- 관세청 5건
- 교육부 64건
- 국가보훈처 12건
- 국가인권위원회 7건
- 국무조정실및국무총리비서실 5건
- 국민권익위원회 15건
- 국방부 4건
- 국토교통부 25건
- 금융위원회 2건
- 기상청 5건

□ 2016년 예산안 검색결과 316 건

- ☐ 2016 예산안 고용노동부 (5000 - 5033 - 308)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 세출(지출) | 일반회계 - | 사회복합서비스사업]
- ☐ 2016 예산안 산업통상자원부 (4900 - 4902 - 301) [투자유치기반조성(제주) | 세출(지출) | 지역발전특별회계 - | 일반회계 - | 일반회계]
- ☐ 2016 예산안 산업통상자원부 (4900 - 4901 - 302) [투자유치기반조성 | 세출(지출) | 지역발전특별회계 - | 일반회계 - | 일반회계]
- ☐ 2016 예산안 법무부 (1200 - 1233 - 303) [외국인종합안내센터운영 | 세출(지출) | 일반회계 - | 공공질서및안전유지사업]
- ☐ 2016 예산안 법무부 (1200 - 1233 - 301) [외국인사회통합지원 | 세출(지출) | 일반회계 - | 공공질서및안전유지사업]

□ 2015년 추경안 검색결과 3 건

- ☐ 2015 추경안 보건복지부 (1100 - 1133 - 300) [긴급복지 | 세출(지출) | 일반회계 - | 사회복합서비스사업]

□ NABO-EFIS DB 갱신

NABO-EFIS DB갱신부문은 DB화한 통계항목을 검증하고 2016년 발표자료(419,949 항목)를 수집 · 갱신하였으며 886개의 신규 통계항목을 추가 DB화하였다. 자료제공 방식이 Open API 방식으로 변경된 출처에 대응하여 데이터 관리 및 신뢰를 제고하였고, 수요조사를 통해 886개의 신규 통계항목을 추가하여 DB화하였다.

이밖에도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제재정통계란의 자료를 수집 · 갱신하여 최신자료(총 206 항목)를 제공하도록 추진하였다.

사업내용	· 신규 발표자료 수집·갱신(419,949 항목), 신규 추가항목 입수·등록(886 항목) ·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 경제재정통계란(206 항목) 갱신
사업기간	4개월(2016. 9. ~ 12.)

□ 향후 계획

2017년은 비용추계 업무효율화 정보화전략계획에서 수립한 고도화 3개년 사업의 완료년도이다. 3단계의 주요 사업내용은 비용추계 기초자료인 법률, 추계서, 사업설명 자료 DB화 확장구축, 기초자료간 연계를 통해 비용추계 및 예·결산 분석업무 지원 기능 통합하는 것이다. DB화된 기초자료를 대상으로 거시총량분석 및 주제별 분석업무 및 비용추계 지원기능 통합(기존 COSTEM과 1, 2차 구축기능)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6. 대외협력

가. 국제교류

2016년에는 쿠웨이트 기획개발최고위원회, 러시아연방 재무부 공무원 방문단 등 총 7차례의 국회예산정책처 방문이 있었다. 방문단은 국가사업평가, 국가예산제도 파악, 국회예산과정에서 의회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 쿠웨이트 KSP 정책실무자연수단

2월 16일, 칼레드 마흐디(Khaled Mahdi) 기획개발최고위원회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쿠웨이트 KSP 정책실무자연수단 2인이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하여, 국회예산정책처 기능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이후 사업평가국의 국가사업평가업무에 대해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 러시아 연방재무부 대표단

2월 26일, 세르게이 프리호드코(Sergey Prikhodko) 러시아 연방 재무부 집행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대표단 10인이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하여 처장을 예방하였다. 대표단은 예산수립과정에서 국회의 역할 등에 대해 설명을 받은 이후, 예산편성 및 결산 관련하여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 헝가리 국가경제부 대표단

4월 11일, 리타 헤베이(Rita Hevei) 국가경제부 행정사무국장을 단장으로 5인의 대표단이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하여 조세지출을 활용한 투자 촉진,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 균형 발전과 조세지출평가제도에 대해 토론하였다.



□ 아프리카 카메룬 공무원 대표단

6월 23일, 저스틴 론 킨제카(Justin Lon Kindzeka) 조세국 조세감사관 등 13인의 공무원 대표단이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하였다. 방문단은 국가예산제도에 대해 양국 간 사례를 비교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 KDI 국제회의 대표단

7월 8일, KDI 국제회의에 참석한 벤 그래함(Ben Graham) 아시아 개발은행 선임평가전문관 등 32인이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 미얀마 의회 대표단

11월 14일, Zaw Min(쩌 민) 미얀마 상원의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일행 15인이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하였다. 방문단은 국회예산정책처 조직 및 기능에 대해 소개받고,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국회 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해 상호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 호주 대사관 대표단

12월 1일, 브렌턴 골드워시(Brenton Goldworthy) 호주대사관 파견 호주재무부 소속 담당 재정관 등 2인이 예산정책처를 방문하였다. 방문단은 국회예산정책처 조직과 기능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2017년 예산 및 경제전망에 대한 심층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나. 제8회 OECD 회원국 의회예산기관 및 독립재정기관 회의

김광목 예산분석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예산정책처 대표단은 4월 11일 ~ 4월 12일까지 양일간 프랑스 파리 OECD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제8회 OECD 회원국 의회예산처 및 독립재정기관 회의(The 8th Meeting of OECD Parliamentary Budget Officials and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호주 등 30여개국의 OECD 회원국 대표단과 IMF,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대표단은 회의를 통해 글로벌 금융·거시경제 위험과 독립재정기관의 역할, 기업 법인세 분석 및 중기재정 관리체계에 대하여 각 국 대표단의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독립재정기관에 대한 평가 세션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사례에 대해 소개하였다.

□ 첫째 날

OECD 회의 첫날, 첫 번째 세션은 글로벌 금융·거시경제 위험과 독립재정기관의 역할에 대한 의제로 시작되었다. 이 세션에서 기존의 거시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도전과제를 제공하고 경제 및 금융 부문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독립재정기관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두 번째 세션은 새로 설립된 독립재정기관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과거 10년간 의회예산기구·독립재정기관의 수는 3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올해 회의에서는 리투아니아, 남아프리카, 그리스 및 아이슬란드에서 새로 설립된 독립재정기관에 대해 소개하였다.

세 번째 세션은 아일랜드 의회의 예산 감독권에 대해 검토하는 자리로서, 아일랜드 의회 내 예산분석국 설립을 위해, 기존 예산 시스템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OECD측이 검토결과를 발표하였다. 네 번째 세션은 독립재정기관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이루어졌으며, 독립재정기관에 대한 공통된 성과평가틀을 도입하여 실용적인 측면을 검토하는 자리였다. 여기서 우리처의 예산분석실장은 OECD 발제 이후 후속발표로서 '예산분석 업무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날의 마지막 의제로는 소통의 질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언론,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여러 기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독립재정기관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 둘째 날

둘째 날 첫 세션의 의제는 국내·국가하부·초국가 독립재정기관 간 관계였다. 최근에는 온타리오주, 스코틀랜드 등 국가하부 독립재정기관과 유럽재정위원회 등 초국가적 독립재정기관이 설립되고 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중기재정관리체계(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를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다수의 OECD 회원국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중기예산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재정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위해 중기재정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방법과 효과적인 기여요소에 대하여 각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세 번째 세션은 기업 법인세 분석(Corporate Income Tax)에 대한 내용으로서 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세정보 접근방법, 타 기관들과의 협력 전략, 분석 방법론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마지막 세션은 독립재정기관 관점에서 재정 투명성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하며 이틀간의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7.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 및 「예산정책자문위원회내규」에 의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6년에는 총 2회의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제19대국회 예산정책처 업무개선 추진현황’을 시작으로, ‘2017년도 국회예산정책처 업무수행 방향 설정’에 대한 자문 등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요 연구분석 과제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자문이 이루어졌다.



[2016년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개최 현황]

회의 일자	회의 안건
제1차 회의 2016. 4. 29	제19대국회 예산정책처 업무개선 추진현황
제2차 회의 2016. 12. 16	2017년도 국회예산정책처 업무수행 방향 설정

[제6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명단]

(가나다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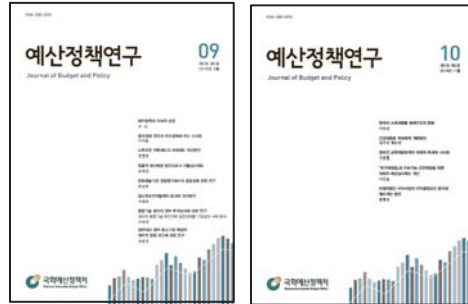
	성 명	현 직위 및 경력	비 고
1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장 (전)기획재정부장관	위원장
2	구희권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전)국회사무처 사무차장	위원
3	국경복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전)국회예산정책처장	"
4	김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 (전)한국재정학회장	"
5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 (전)감사원 감사위원	"
6	김태일	고려대 정경학부 교수 (전)좋은예산센터 소장	"
7	김호원	부산대 산학협력단 교수 (전)특허청장	"
8	남윤호	중앙일보 편집국장 (전)중앙일보 뉴스룸 국장	"
9	박 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전)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
10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전)한국연금학회장	"
11	오재일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전)한국지방자치학회장	"
12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 (전)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13	이대식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기술경영경제학회 부회장	"
14	이용걸	세명대 총장 (전)방위사업청장	"
15	장지인	한국회계기준원장 (전)한국회계학회장	"
16	전성빈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전)신한금융지주회사 이사회 의장	"
17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전)한국공기업학회장	"
18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전)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정책보좌관	"

※ 임기 : 2년(2015. 4. 29 ~ 2017. 4. 28)

8.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발간

「예산정책연구」는 예산·결산·기금 분석, 경제 및 조세·재정정책 분석,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과 관련된 이론 및 정책논문을 수록하는 재정전문 학술지로, 2012년 5월에 창간하여 연 2회(5월, 11월) 발간된다.

제5권 제1호에는 조순 명예교수(서울대)의 “복지정책과 지속적 성장”을 포함하여 노후보장 저축제도의 과세제도 개선방안, 효율적 예산배분 방안으로서 지출심사제도 등에 관한 논문 총 8편을, 제5권 제2호에는 이우진 교수의 “한국의 소득유형별 분배구조의 변화”를 포함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정부간 교육재정관계의 국제적 추세와 시사점 등 경제·재정정책의 주요 이슈에 대해 다양한 학술적·정책적 접근을 시도한 논문 총 5편을 수록하였다.



[제5권 제1호 수록논문]

수록 논문	저자	소속 및 직위
복지정책과 지속적 성장	조 순	서울대 명예교수
중국경제 진단과 우리경제에 주는 시사점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중국 팀장
노후보장 저축제도의 과세제도 개선방안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부교수
효율적 예산배분 방안으로서 지출심사제도	김대진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문화예술기관 경영평가에서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한승준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쌀소득보전직불제의 효과와 개선방안	서세욱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예산분석과 과장
융합기술 분야의 정부 투자성과에 대한 연구: 정부의 융합기술 추진전략 실천과제별 기업성과 사례 분석	이진석	(주)화승소재 기획원가팀 팀장
정부R&D 참여 중소기업 폐업의 재무적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강문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제5권 제2호 수록논문]

수록 논문	저자	소속 및 직위
한국의 소득유형별 분배구조의 변화	이우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김수진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정부간 교육재정관계의 국제적 추세와 시사점	구균철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국가재정법」과 지속가능 건전재정을 위한 국회의 예산심사제도 개선	이인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이익결정요인 분석과 제도 개선 방안	홍형선	국회사무처

9. 교육훈련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교육훈련 지침」을 2011년 6월 1일 자로 제정한 이후 예산정책처에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들이 국회공무원으로서 보다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2016년도에는 분석관 및 평가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통계교육 및 정책평가의 이론과 실제 교육을 마련하였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핵심역량강화특강 외에도 의원보좌직원을 대상으로 NABO 재정아카데미를 실시하였다.

[교육훈련 현황]

연번	교육훈련	교육기간	교육인원
1	2016년도 신규 임용자·전입자 기본교육	2016. 2. 1 ~ 2. 3 2016. 5. 10, 5. 12.~13 2016. 9. 7 ~ 9. 9 2016. 10. 6 ~ 10. 7	30
2	정책평가의 이론과 실제 교육	2016. 1. 19 ~ 3. 7 (1. 26.(화) 및 설연휴 주 제외)	58
3	기초통계교육	2016. 3. 14 ~ 25 (주 3회)	34
4	NABO 재정아카데미	2016. 9. 22 2016. 10. 20 ~ 21	70

[전문가 특강/핵심역량강화특강 현황]

연번	일시	강의주제	초빙강사
1	4. 15	행복한 삶의 조건	최인철 (서울대학교 교수)
2	9. 1	21세기 통섭형 인재	최재천 (국립생태원장)
3	12. 14	32년 세계정상을 지켜온 대한민국 양궁 으로부터 배우는 가치	문형철 (양궁국가대표 (前)총감독)

□ 제1회 핵심역량강화특강

4월 15일, 최인철 서울대학교 교수를 초빙하여 ‘행복한 삶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핵심역량강화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강에서 최인철 교수는 행복의 정의와 구성 요소를 소개하여, 행복은 즐거움과 의미 중 무엇을 추구할 때 더 높게 나타나는지, 행복은 유전과 환경 중 무엇에 더 영향을 받는지 등 행복에 대한 궁금증을 다뤘다. 또한, 행복한 개인, 나아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며, 행복은 개인적이지만 한 것인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해 사회가 행복할 방법을 모색하였다.



□ 제2회 핵심역량강화특강

9월 1일, 최재천 국립생태원장을 초빙하여 ‘21세기 통섭형 인재’라는 주제로 핵심역량강화특강을 실시하였다. 최 교수는 그의 저서를 통해 ‘통섭’이라는 학문 용어를 국내에 도입해 큰 반향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최 교수는 이날 특강에서 “우물을 깊게 파려면 넓게 파야 한다”면서 “전공분야 이외의 다양한 학문적 관심과 소통으로 업무에 임한다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 제3회 핵심역량강화특강

12월 14일, 문형철 (前)양궁 국가대표 총감독을 초빙하여 ‘32년간 세계정상을 지켜온 대한민국 양궁으로부터 배우는 가치’를 주제로 핵심역량강화특강을 실시하였다. 문 감독은 이번 특강에서 ‘올림픽 메달의 가치, 파벌 없는 공정한 경쟁, 리우올림픽 전 종목 석권의 의미’ 등의 내용을 소개하였으며, 국회에 산정책처 직원들은 양궁이라는 색다른 분야를 통해 보다 폭넓은 지식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10. 직원연구모임

국회예산정책처 직원연구모임은 「국회예산정책처 직원연구모임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연구모임 구성원들이 관심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의정지원조직으로서의 생산성 향상과 구성원간의 유대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연간 계획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에는 6개 모임이 등록하여 활동하였다.

[2016년 직원연구모임 현황]

연번	연구모임명	구성원수(현원)	대표자	구성시기(년)
1	독일경제연구모임	13인	박용주	2013
2	일본 경제·문화 연구회	13인	서세욱	2011
3	NABO LOHAS 연구회	10인	정문종	2008
4	계량경제연구회	14인	유승선	2004
5	예산정책현안연구회	13인	김경수	2013
6	조세 연구회	15인	심혜정	2012

11. 연구용역

2016년 중 발주한 연구용역은 아래와 같으며, 연구용역 결과는 예산안 및 결산 분석, 경제정책 및 경제 전망, 사업평가 등 주요 분석보고서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 등에 활용하였다.

[연구용역과제 현황]

	연번	주 제	수행자
예산 분석실	1	법안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	임동완 (한국정부회계학회)
	2	복지재정 장기전망 II	강인수 (㈜젠솔소프트)
	3	과징금 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일중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4	환경변화에 따른 우정사업 대응방안 연구	배귀희 (한국행정학회)
	5	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	장용근 (한국재정법학회)
경제 분석실	6	중국 경제구조 개혁의 추진내용과 시사점	김영한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7	경제·재정분야 전문가의 경제인식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박병일 (한국궤립조사연구소)
	8	소득 불평등의 심화 원인과 재분배 정책에 관한 연구	이우진 (한국재정학회)
	9	구조조정에 관한 국내외 사례연구	김재훈 (대구대 산학협력단)
	10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합리화 방안 연구	김우철 (한국재정학회)
	11	환경 관련 조세지출 효과성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홍인기 (한국재정학회)
	12	정성적 조세특례 항목에 대한 평가방법론 연구	류덕현 (한국재정학회)
	13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성순 (한국재정학회)
	14	최근 소비행태 변화 양상과 세정 개선 방안	정규언 (한국회계학회)

	연번	주 제	수행자
사업 평가국	15	공기업 효율성 측정을 위한 분석 모형 개발	고길곤 (한국정책학회)
	16	기금 사회책임투자 실행 및 성과평가 기준 연구	정승혜 (주)모닝스타코리아
	17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설정, 배출권거래제 운영 및 해외배출권 확보 정책 연구	임대웅 (주)에코애파트너스
	18	미래성장동력 분야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Spillover 효과 분석	이상용 (한국경영정보학회)
	19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 기후금융의 역할에 관한 연구	안윤기 (포스코 경영연구원)
	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적정성 분석	김종순 (한국정책학회)
	21	에너지산업에서의 공공부문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박형준 (한국행정학회)
	22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이혁우 (한국행정학회)
	2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수용도 제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박병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4	저출산 문제와 교육 실태: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마강래 (중앙대 산학협력단)

12. 2016년도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년에 수행된 의정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향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 전략을 수립하고자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하여 2016년도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6년 12월 7일부터 2015년 12월 20일까지, 조사대상은 제20대 국회의원 전원으로 회신율은 78.3%(300명 중 235명)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6년도 국회예산정책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만족도[점])

구 분	2015년	2016년	전년대비 (증감)
국회예산정책처 의정활동지원 전반적 서비스	65.4	66.6	+1.2
분석·평가 보고서	64.2	68.7	+4.5
법안비용추계	62.6	68.4	+5.8
조사·분석 회답	62.8	64.0	+1.2
토론회 및 세미나	61.0	64.9	+3.9
의원 대면보고	56.7	69.9	+13.2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57.4	67.2	+9.8
E-mailing 서비스	61.0	67.2	+6.2
보고서요약집 「NABO Briefing」	-	69.1	-
제20대국회 개원활동 지원	-	67.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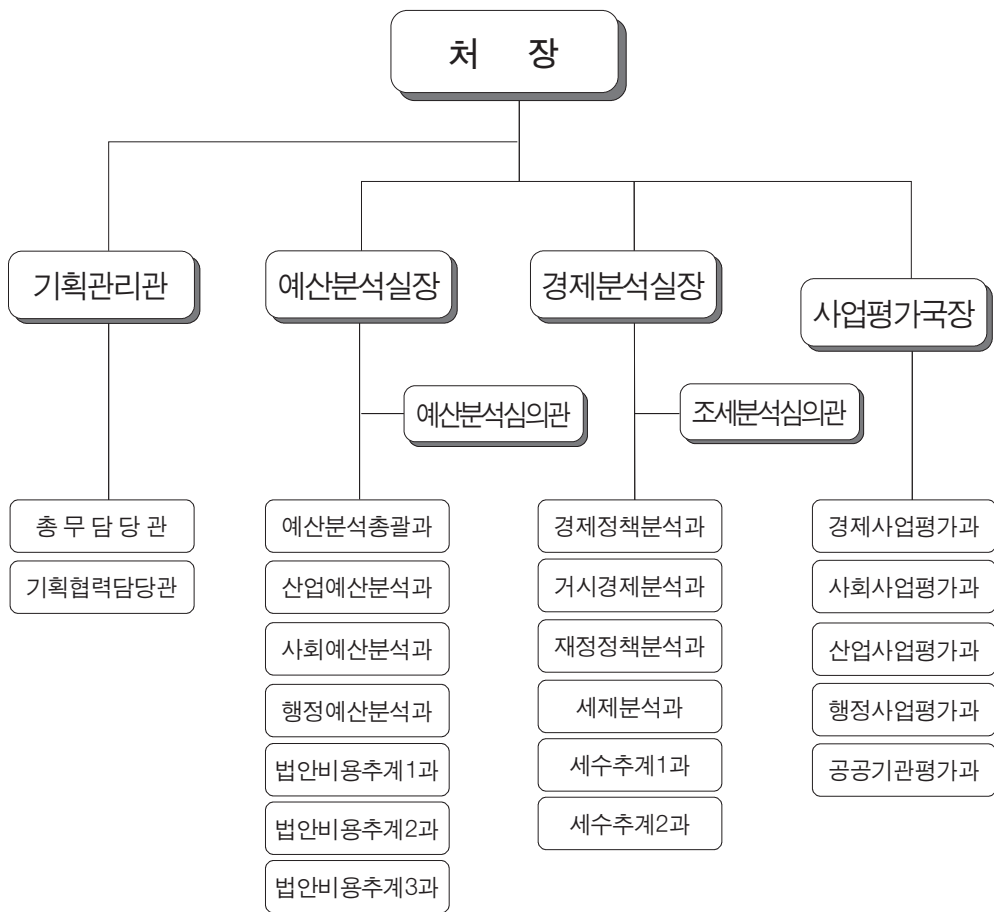
Annual Report of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V

부 록

1. 조직 및 예산

가. 조직



2실 1국 1관(18과 2담당관)

[별 표] <개정 2015. 7. 9>

국회에산정책처공무원정원표

총 계	138
정무직 계	1
국회에산정책처장	1
일반직 계	137
관리관 · 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2
이사관 · 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4
3급 · 4급 · 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11
4급 · 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9
4급 · 5급 · 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29
5급 · 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48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6급 또는 임기제공무원	25
7급 또는 임기제공무원	6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1
8급 또는 임기제공무원	1

나. 인력총원

(1) 인력 현황

국회예산정책처의 직제상 정원은 138인으로 분석·평가업무를 수행하는 2개 분석실·평가국이 115인,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획관리관실이 20인이다. 현원은 136인(2016. 12. 31. 기준)으로 충원율은 98.6%이다.

□ 인력 현황

(2016. 12. 31. 기준, 단위: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과부족	비 고
처 장 실	3	3	-	
기획관리관실	20	19	△1	
예산분석실	51	50	△1	
경제분석실	34	34	-	
사업평가국	30	30	-	
합 계	138	136	△2	

한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분석·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임기제, 자료분석지원요원(Research Assistant) 등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정원 외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다.

□ 정원 외 인력현황

(2016. 12. 31. 기준, 단위: 명)

구 분	인 원	내 용
전문임기제	4	경제분석관보 1, 예산정책처장 수행비서 1, 홍보·디자인 2
행정실무원	28	무기계약근로자 23, 기간제근로자 5
자료분석지원요원(RA)	16	2016. 12. 31. 계약만료
합 계	48	

(2) 인력충원 현황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공석 발생 시 채용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사업평가국장 1인, 과장 2인, 분석관·평가관 11인, 분석관보·평가관보 4인, 주무관 1인을 경력경쟁채용 하였다.

□ 일반임기제 채용 내역

(2016. 12. 31. 기준, 단위: 명)

구 분	채용 예정인원	응모인원	채용인원	경쟁률
사업평가국장	1	6	1	1 : 6.0
과 장	3	17	2	1 : 5.7
분석관·평가관	11	156	11	1 : 14.2
분석관보·평가관보	4	39	4	1 : 9.8
주무관	1	3	1	1 : 3.3
합 계	20	221	19	1 : 11.1

□ 전문임기제 채용 내역

(2016. 12. 31. 기준, 단위: 명)

구 분	채용 예정인원	응모인원	채용인원	경쟁률
전문임기제 다급 (주무관)	1	10	1	1 : 10.0
전문임기제 라급 (주무관)	1	12	1	1 : 12.0
전문임기제 마급 (주무관)	1	1	1	1 : 1.0
합 계	3	23	3	1 : 7.7

다. 인사 및 상훈

공석 발생 시 외부 전문가를 신속하게 채용하였고 적극적인 일반직공무원 인사교류를 통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였다. 또한 재정분석·평가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대통령·국회의장·국회에산정책처장 표창 등을 수여하였다.

유형별 인사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1) 인 사

(2016. 12. 31. 기준)

구 분	대 상
임명 (21)	일반임기제 2급: 고기석 일반임기제 4급: 이영숙 일반임기제 5급: 윤주철, 이현철, 유희수, 정혜윤, 김윤희, 김성은, 채은동, 박승호, 차병섭, 이진우 일반임기제 6급: 김태은, 이병철, 박지원, 김상미 일반임기제 7급(휴직대체): 최병청 한시임기제 5급: 이예슬 전문임기제 다급: 김민재 전문임기제 라급: 손영진 전문임기제 마급: 최경철
승진 (11)	○ 직위승진 국장승진: 정문종 ○ 직급승진 4→3급: 이은정, 윤동준, 이선주 5→4급: 민병찬, 조효정 6→5급: 김선영 7→6급: 오덕근, 양승민 8→7급: 김경연, 전대영

구 분	대 상
전보 (24인)	○ 1월(17인) - 이선주(예산분석총괄과장→법안비용추계3과장) - 이은정(법안비용추계3과장→법안비용추계1과장) - 양창석(예산분석총괄과→기획협력담당관실) - 김월래(사회예산분석과→법안비용추계1과) - 조남희(행정예산분석과→총무담당관실) - 현승철(행정예산분석과→법안비용추계3과) - 김안나(사회사업평가과→법안비용추계2과) - 심지현(경제사업평가과→예산분석총괄과) - 한노덕(경제사업평가과→법안비용추계1과) - 김성수(행정사업평가과→사회예산분석과) - 신동진(경제정책분석과→재정정책분석과) - 조은애(산업예산분석과→사회예산분석과) - 윤나나(사회예산분석과→예산분석총괄과) - 이은미(사회예산분석과→법안비용추계3과) - 정용제(법안비용추계2과→산업사업평가과) - 심예원(재정정책분석과→산업예산분석과) - 민병찬(공공기관평가과→처장실) - 김경연(사회사업평가과→경제사업평가과) ○ 3월(3인) - 조영석(총무담당관실→경제사업평가과) - 김혜진(법안비용추계1과→예산분석총괄과) - 김경연(경제사업평가과→총무담당관실) ○ 5월(1인) - 한상춘(법안비용추계2과→예산분석총괄과) ○ 8월(2인) - 민병찬(예산정책처장실→예산분석총괄과) - 조효정(예산분석총괄과→법안비용추계3과) ○ 11월(1인) - 이선주(법안비용추계3과장→사회예산분석과장)
전입 (27)	관리관: 조용복 이사관: 박장호 부이사관: 신종숙, 상지원, 김수옥, 김정신, 김성완, 박혜진 서기관: 최선웅, 김려진, 유항재, 이종민, 강건희, 유규영, 김재윤, 김진태, 정원철 행정사무관: 김미량, 한상춘, 황수환, 정수현, 조가영, 하정희, 김우주, 김정환 행정서기: 황아람, 송혜진

구 분	대 상
전출 (22)	관리관: 김광묵 이사관: 고상근, 홍형선 부이사관: 신항진, 김종화, 윤광식, 박동찬 서기관: 이동현, 배아형, 장태성, 조윤희, 김효진, 이상준, 현승철, 김성수, 임금, 한노덕, 유규영 행정사무관: 김병관, 김수진, 심예원 행정주사: 민준홍
파견 (1)	서기관: 김월래(국내교육훈련)
의원면직 (9)	일반임기제 5급: 한정수, 이영숙, 이상현 일반임기제 6급: 정유훈, 채은동 일반임기제 7급(휴직대체): 최병청 한시임기제 5급: 서태영 전문임기제 나급: 윤주철 전문임기제 마급: 박은애
당연퇴직 (10)	일반임기제 4급: 장인성, 문종열 일반임기제 5급: 김성은, 이진우 일반임기제 6급: 김태은, 김정미 한시임기제 5급: 최세중, 이예슬 별정직 7급: 변은수 전문임기제 마급: 최정철

(2) 상 훈

(2016. 12. 31. 기준)

구 분	대 상
대통령 표창	박장호(이사관)
국회의장 표창	박홍엽(일반임기제 4급), 연훈수(일반임기제 4급)
국회예산정책처장 표창	김수옥(부이사관), 조남희(서기관), 이홍석(서기관), 백경엽(일반임기제 5급)
모범공무원	정주완(행정주사)

(3) 포 상

□ 2016년도 상반기

(2016. 12. 31. 기준)

구 분			대 상
보고서 포상	공 동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8건
	개인	연구보고서 등	최우수 1건, 우수 4건, 장려 4건
		조사·분석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1건
		비용추계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1건
특별 포상			우수직원 4인, 우수부서 1개과, 우수TF 1개TF

□ 2016년도 하반기

(2016. 12. 31. 기준)

구 분			대 상
보고서 포상	공 동		최우수 1건, 우수 3건, 장려 6건
	개인	연구보고서 등	최우수 1건, 우수 3건, 장려 3건
		조사·분석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
		비용추계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
특별 포상			우수직원 4인, 우수부서 1개과, 협업증진기여공무원 14인, 예산절감 및 예산심사 지원 공로부서 1개과, 우수TF 1개TF

□ 2016년도 수시포상

(2016. 12. 31. 기준)

구 분	대 상	비 고
특별 포상	제5회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수상 기여부서 3개과	기획협력담당관, 법안비용추계3과, 세수추계1과

라. 예 산

2016년도 예산(현액기준)은 총 160억 2,200만원으로, 성질별로는 인건비 102억 9,100만원, 기본경비 20억 7,300만원, 주요사업비 36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다.

기본경비는 행정실무원 및 자료분석보조요원 운영, 교육훈련, 전산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가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사업비는 국가재정분석 및 법안비용추계, 경제분석 및 세수추계, 국가주요사업 및 공공기관 평가, 예산정책처 정보화 등에 필요한 경비가 편성되었다.

[2016년도 예산 집행 현황]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집 행 액	잔 액
인 건 비	10,291	10,293	9,952	341
기본경비	2,073	2,074	1,972	102
주요사업비	3,658	3,658	3,475	183
기획관리및운영지원	572	572	521	51
국가재정분석및법안비용추계	958	958	895	63
장기경제분석체제구축	789	789	752	37
국가주요사업및공공기관평가	639	639	627	12
예산정책처정보화	700	700	680	20
합 계	16,022	16,025	15,399	626

2. 연 혁

1994. 8. 23.	국회사무처에 법제예산실 신설
2000. 1. 1.	법제예산실을 법제실과 예산정책국으로 분리·개편
2003. 6. 12.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예산결산지원기구의 설립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2003. 7. 1.	「국회예산정책처법안」 본회의 의결
2003. 7. 3.	국회예산정책처설립준비기획단 구성
2003. 7. 18.	「국회예산정책처법」 공포
2003. 9. 15.	국회예산정책처실무준비팀 구성
2003. 9. 19.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구성
2003. 10. 19.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국회예산정책처법」 시행)
2003. 10. 20.	제1대 국회예산정책처장 최 광 임명 (~2004. 11. 18.)
2003. 10. 28.	「국회예산정책처직제」 제정
2003. 12. 23.	청사 입주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빌딩 17~19층)
2004. 3. 3.	국회예산정책처 개청식
2005. 6. 2.	제2대 국회예산정책처장 배철호 임명 (~2008. 7. 14.)
2005. 11. 4.	청사 이전 (여의도 서울증권 빌딩 10~12, 14층)
2006. 12. 7.	「국회예산정책처직제」 개정
2008. 1. 18.	청사 이전 (국회의정관 4~5층)
2008. 9. 1.	제3대 국회예산정책처장 신해룡 임명 (~2011. 1. 21.)
2009. 4. 27.	「국회예산정책처직제」 개정
2010. 4. 27.	「국회예산정책처직제」 개정
2011. 3. 4.	제4대 국회예산정책처장 주영진 임명 (~2013. 2. 27.)
2011. 8. 26.	「국회예산정책처직제」 개정
2013. 2. 28.	제5대 국회예산정책처장 국경복 임명
2013. 10. 19.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0주년
2013. 12. 13.	「국회예산정책처직제」 개정
2015. 2. 24.	제6대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준기 임명
2015. 7. 9.	「국회예산정책처직제」 개정

3. 관계 법규 및 제·개정 현황

가. 국회법

第22條의2(국회예산정책처) ①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를 둔다.

②국회예산정책처에 처장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④이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 국회예산정책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나. 국회예산정책처법

제정 2003. 7.18. 법률 제6931호
(타)일부개정 2006.10. 4. 법률 제8050호
(타)일부개정 2012.12.11. 법률 제11530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①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는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②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3조(직무)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2.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3.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4.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재정소요 분석
5.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제4조(처장) ①국회예산정책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

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②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예산정책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예산정책처 관련사무중 인사행정·예산회계·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공직자재산등록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①의장은 국회법 제22조의2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추천위원회는 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며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국회의원·국회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무원의 임용) 예산정책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조직) ①예산정책처의 보조기관은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처장·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처장 밑에 실 또는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③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2급상당 내지 4급상당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처장소속하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⑤예산정책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처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보고 등) ①처장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의 위법한 사항이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당해 업무의 소관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요청)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부 칙 〈2003. 7. 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회사무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國會圖書館長”을 “국회도서관장이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부 칙 (국가재정법) 〈제8050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3>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 (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 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일반직국가공무원·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⑭부터 ⑳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다.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정 2003.10.28. 국회규칙 제123호
일부개정 2006.12. 7. 국회규칙 제139호
일부개정 2009. 4.27. 국회규칙 제150호
일부개정 2010. 4.27. 국회규칙 제156호
일부개정 2011. 8.26. 국회규칙 제168호
개정 2013.12.13. 국회규칙 제184호
개정 2015.7.9. 국회규칙 제19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예산정책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①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에 예산분석실·경제분석실 및 사업평가국을 둔다.

②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③실·국 및 관 밑에 두는 과·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3조(공무원의 정원) 예산정책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획관리관) ① 기획관리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3.12.13>

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의 종합·총괄조정
2.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조사 및 분석사항의 접수·분류
3. 예산의 편성 및 예산집행의 조정
4. 조직 및 정원관리
5. 예산정책처 소관 규칙·규정·내규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예산정책처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회계 및 직무에 관한 감사업무
9.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0. 예산정책관련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12. 예산정책처 소속공무원의 임용·복무·상벌·연금·건강보험 기타 인사관리
13. 예산의 집행 및 결산
14. 물품관리·조달 및 검수
15. 예산정책처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6. 예산정책처 소관 기록물의 수집·관리·보존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17. 예산정책처 소관 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다른 실·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예산분석실) ① 예산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예산분석심의관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예산분석심의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3.12.13>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연구 및 분석
2.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3.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지원

④ 예산분석심의관은 제3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2009.4.27>

제6조(경제분석실) ① 경제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조세분석심의관 1인을 둔다.<개정 2010.4.27>

② 실장은 관리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조세분석심의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0.4.27, 2013.12.13>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거시경제동향의 분석·전망 및 경제예측
2. 경제정책의 연구·분석
3. 국가재정운용의 분석 및 전망
4. 통합재정수지의 분석
5. 국가채무의 분석
6. 국가세입의 추계
7.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의 분석
8. 국내외 재정관련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9. 제1호 내지 제8호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지원

④ 조세분석심의관은 제3항의 실장의 업무 중 조세관련 업무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신설 2010.4.27>

제7조(사업평가국) ①사업평가국에 국장 1인을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3.12.13>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4.27>

1. 국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 재정소요분석
2. 국가의 주요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평가
3. 정부의 성과관리업무에 대한 분석·평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지원

제8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개정 2013.12.13>) 처장은 국가의 예산분석·결산분석·경제분석·사업평가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3.12.13>

제9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 처장은 국가의 예산분석·결산분석·경제분석·사업평가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직공무원은 계급 구분이 적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어 그 범위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3>

[본조신설 2009.4.27.]

제10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①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 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6급·7급·8급·9급 공무원의 정원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12.13]

제11조(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12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부칙<제123호, 2003.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國會人事規則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國會事務處法 및國會圖書館法”을 “國會事務處法·國會圖書館法 및 국회예산정책처법”으로 한다.

제5조중 “國會事務處法 第3條第2項 및國會圖書館法 第3條第2項”을 “國會事務處法 第3條第2項,國會圖書館法 第3條第2項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로 하고,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도서관”을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단서중 “국회도서관장”을 “국회도서관장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제48조의3제2항중 “國會圖書館長”을 “國會圖書館長·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제55조 및 제62조중 “國會事務處와國會圖書館”을 각각 “國會事務處·國會圖書館 및 국회예산정책처”로 한다.

제6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중 “國會事務處法 第7條第4項 및國會圖書館法 第5條第3項의 규정에 의한 契約職公務員”을 “國會事務處法 第7條第4項 및國會圖書館法 第5條第3項의 규정에 의

한 契約職公務員과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6인”을 “8인”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채용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

제67조의2제1항제2호중 “法律學”을 “法律學·經濟學·財政學”으로 한다.

②國會事務總長權限의委任에관한規則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國會圖書館長(이하 “圖書館長”이라 한다)”을 “國會圖書館長(이하 “圖書館長”이라 한다)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2호중 “圖書館長”을 “圖書館長 또는 예산정책처장”으로 하고, 동호를 제3호로 하며,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國家公務員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예산정책처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예산정책처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 및 제4조중 “圖書館長”을 각각 “圖書館長 및 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③국회기록물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을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총무과”를 “총무과(국회예산정책처의 경우에는 기획관리관)”로 한다.

제12조중 “국회사무처직제 제2조 및 국회도서관직제 제2조”를 “국회사무처직제 제2조·국회도서관직제 제2조 및 국회예산정책처직제 제2조”로 한다.

④국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으로”를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로”로 한다.

⑤公職者倫理法의施行에관한國會規則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27조중 “國會事務總長 또는國會圖書館長”을 “國會事務總長·國會圖書館長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⑥국회정보공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도서관”을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국회도서관장”을 “국회도서관장 및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부칙 〈제139호,2006.12.7〉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호,2009.4.27〉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호,2010.4.27〉

이 규칙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호,2011.8.26〉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2013.12.13〉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호,2015.7.9〉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개정 2015. 7. 9>

국회의산정책처공무원정원표

총 계	138
정무직 계	1
국회의산정책처장	1
일반직 계	137
관리관 · 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2
이사관 · 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4
3급 · 4급 · 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11
4급 · 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9
4급 · 5급 · 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29
5급 · 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48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6급 또는 임기제공무원	25
7급 또는 임기제공무원	6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1
8급 또는 임기제공무원	1

라. 법규 제·개정 현황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년에 관련 규칙·내규·지침 등 모두 12건의 법규를 제·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시행규칙」 등 내규 개정 5건,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연구관 직위심사에 관한 지침」 7건을 제·개정 하였다.

[법규 제·개정 현황]

(기준 : 2016. 1. 1 ~ 2016. 12. 31)

연번	법규명	제·개정	법규번호	시행일자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시행규칙	개정	내규 제79호	1. 25	예·결산의 거시·총량적 분석 강화를 위하여 예산분석실에 예산 분석총괄과를 신설하고, 예산분석실 예산분석 담당과의 업무 분장을 분야별 편제로 규정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또한, 사업평가국내과 업무를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국회예산정책처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내규	개정	내규 제80호	1. 26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 개정(2015. 5. 22.)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 총 근무기간 7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요건과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자 함.
3	국회기록물관리내규	개정	내규 제81호	3. 8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생산한 이관 전 기록물에 대한 관리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상위 법규에 따라 국회도서관장은 필요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기록물 접근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함.

연번	법규명	제·개정	법규번호	시행일자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4	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 내규	개정	내규 제82호	8. 23	「국회 예산 정책 처 직 제」 개정 (2015. 7. 9.)으로 법안비용추계 3과 및 세수추계2과가 신설됨에 따라, 의안비용추계시스템의 회답 완료자료 직접 열람권자에 위 두 개과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5	국회예산정책처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내규	개정	내규 제83호	8.23	근무실적이 우수한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하여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한도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하려는 것임.
6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직공무원 경력 경쟁채용을 위한 연구관 직위심사에 관한 지침	제정	지침 제100호	1.11	국회예산정책처 직위 중 일부를 연구직공무원 채용직위로 선정 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요구 하기 위한 직위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7	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목표 관리 및 업무평가 지침	개정	지침 제101호	1.11	부서별 보고서 변경사항을 반영 하고, 배점을 조정하는 등 개인의 업무실적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실적평가 배점기준을 정비함.
8	국회예산정책처 채용심사위원회 등 운영지침	개정	지침 제102호	1.11	과장급 이하 채용직위에 대하여 보다 적합한 우수인재의 확보와 서류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표의 일부 심사요소를 조정하려는 것임.

연번	법규명	제·개정	법규번호	시행일자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9	국회예산정책처 실·국별 지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지침 제104호	8. 23	실국별 지문단원수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실국별 지문단원수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10	국회예산정책처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개정	지침 제105호	8. 23	해당 직급별 이수기준점수에서 사이버 교육점수 인정비율을 40%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함. 단, e-의정아카데미로 취득할 수 있는 점수는 해당 직급별 이수기준점수의 40% 이하에 한함.
11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 관리 지침	개정	지침 제106호	8. 2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의견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4. 언론보도 현황 및 보도자료 배포 통계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인사·토론회 등 소식 및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배포한 보도자료 건수는 7건이며, 발간 분석보고서 및 주요 행사 관련 언론보도 건수는 총 3,808건에 달했다.

(2016. 12. 31. 기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보도자료 배포(건)	12	13	11	45	96	82	78	100	80	11	7	10	545
언론보도 (건)	463	451	381	652	1,363	1,233	1,202	2,415	3,764	3708	4,594	3,808	24,034

5. 발간물 총 목록

가. 정기보고서

(2016. 12. 기준)

실·국	과	연번	제 목	발간일
예 산 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1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6	2.5
	예산분석실	2	대한민국 재정 2016	3.14
	예산분석실	3	2016 경제 재정수첩	3.31
	예산분석총괄과	4	[제20대 국회 개원]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6	6.3
	예산분석총괄과	5	[제20대 국회개원] 대한민국 재정 2016	6.3
	예산분석총괄과	6	[제20대 국회 개원]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법률 개선과제	6.3
	실 공동	7	[결산분석시리즈 I]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7.8
	실 공동	8	[결산분석시리즈 I]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소관]	7.8
	실 공동	9	[결산분석시리즈 I]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8
	실 공동	10	[결산분석시리즈 I]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7.8
	실 공동	11	[결산분석시리즈 I]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7.8
	실 공동	12	[결산분석시리즈 I]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7.8
	실 공동	13	[결산분석시리즈 I]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7.8
	실 공동	14	[결산분석시리즈 I]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7.8
	실 공동	15	[결산분석시리즈 I]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7.8
	실 공동	16	[결산분석시리즈 I]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분석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7.8
	실 공동	17	[결산분석시리즈 I]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7.8
	실 공동	18	[결산분석시리즈 I]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

실·국	과	연번	제 목	발간일
예 산 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19	[결산분석시리즈 II] 201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7.11
	예산분석총괄과	20	[결산분석시리즈 III] 2015회계연도 거시·총량 분석	7.11
	예산분석총괄과	21	[결산분석시리즈 V] 2015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7.11
	사회예산분석과	22	[결산분석시리즈 IV] 2015회계연도 결산 성인지 결산서 분석	7.14
	실 공동	2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7.29
	실 공동	24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10.17
	실 공동	25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10.17
	실 공동	26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10.17
	실 공동	27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0.17
	실 공동	28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17
	실 공동	29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10.17
	실 공동	30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10.17
	실 공동	31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0.17
	실 공동	32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0.17
	실 공동	33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10.17
	실 공동	34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10.17
	실 공동	35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10.17
	예산분석총괄과	36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17년도 예산안 거시·총량 분석	10.24
	사회예산분석과	37	[예산안분석시리즈 III] 2017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10.24
	예산분석총괄과	38	[예산안분석시리즈 IV] 2017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10.24
경 제 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39	NABO 경제동향 & 이슈(제39호)	1.29
	경제정책분석과	40	NABO 경제동향 & 이슈(제40호)	2.16
	경제정책분석과	41	NABO 경제동향 & 이슈(제41호)	3.7
	경제정책분석과	42	NABO 경제동향 & 이슈(제41호)	4.18
	경제정책분석과	43	NABO 경제동향 & 이슈(제43호)	5.23
	거시경제분석과	44	2016년 수정 경제전망	5.30
	재정정책분석과	45	[제20대 국회 개원] 주요국의 재정제도	6.3
	세제분석과	46	조세의이해와쟁점 1 [조세개요]	6.3
	세제분석과	47	조세의이해와쟁점 2 [소득세]	6.3
	세제분석과	48	조세의이해와쟁점 3 [법인세]	6.3
	세제분석과	49	조세의이해와쟁점 4 [부가가치세]	6.3
	세제분석과	50	조세의이해와쟁점 5 [상속세 및 증여세]	6.3
	세제분석과	51	조세의이해와쟁점 6 [국제조세]	6.3
	세제분석과	52	조세의이해와쟁점 7 [조세지출]	6.3
	세제분석과	53	조세의이해와쟁점 8 [통계편]	6.3
	경제정책분석과	54	NABO 경제동향 & 이슈(제44호)	6.24

실·국	과	연번	제 목	발간일
경 제 분석실	세수추계1과	55	2015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7.6
	세제분석과	56	제19대 국회 세법개정안 주요내용과 쟁점	7.15
	세제분석과	57	제19대 국회 세법개정안 목록 및 요약	7.15
	경제정책분석과	58	NABO 경제동향 & 이슈(제45호)	7.25
	재정정책분석과	59	2016~206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8.12
	경제정책분석과	60	NABO 경제동향 & 이슈(제46호)	8.30
	거시경제분석과	61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 2017년 및 중기 경제전망	9.19
	경제정책분석과	62	NABO 경제동향 & 이슈(제47호)	9.30
	세제분석과	63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I] 2016년 세법개정안 분석	10.12
	세수추계1과	64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II] 2016~2020년 국세수입 전망	10.13
	세수추계2과	65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V]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 분석	10.24
	재정정책분석과	66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V]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10.25
	경제정책분석과	67	NABO 경제동향 & 이슈(제48호)	10.31
	세제분석과	68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VI] 2017년 세입예산안 분석 종합	11.1
	경제정책분석과	69	NABO 경제동향 & 이슈(제49호)	11.30
	경제정책분석과	70	NABO 경제동향 & 이슈(제50호)	12.23
사 업 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71	2015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I [총괄·성과관리]	7.4
	사회사업평가과	72	2015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II [다부처/경제·산업/사회·행정]	7.4
	공공기관평가과	73	2015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7.5
	산업사업평가과	74	2016년도 국가주요사업 집행점검·평가	9.9
	공공기관평가과	75	2016 공공기관 이슈 브리프	9.19
	공공기관평가과	76	2017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사업 평가	10.28

나. 정책·현안 보고서

실·국	과	연번	제 목	발간일
경 제 분석실	거시경제분석과	77	[경제현안분석 제90호] 일본의 장기침체기 특성과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	4.28
	세제분석과	78	[경제현안분석 제91호] 아동 관련 복지분야의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지원 현황 및 시사점	6.24
	거시경제분석과	79	[경제현안분석 제92호] 주택가격 변화가 가계부채와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11.28
사 업 평가국	행정사업평가과	80	[사업평가현안분석 제58호]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현안과 개선과제	1.21
	공공기관평가과	81	[사업평가 16-01] 교통 SOC 공공기관 투자사업의 재무성 평가	1.20
	사회사업평가과	82	[사업평가 16-02] 기초연금제도 평가	4.29
	산업사업평가과	83	[사업평가 16-03] 지역산업경쟁력강화사업 평가	5.3
	공공기관평가과	84	[사업평가 16-04]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 평가	6.1
	산업사업평가과	85	[사업평가 16-06] 주택담보대출정책 평가	6.1
	산업사업평가과	86	[사업평가 16-07] 기초연구지원 R&D사업 평가	6.2
	공공기관평가과	87	[사업평가 16-05]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평가	6.7
	사회사업평가과	88	[사업평가 16-0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평가	6.14
	사회사업평가과	89	[사업평가 16-09] 아동복지사업 평가 - 요보호아동 보호·자립지원 및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7.15
	경제사업평가과	90	[사업평가 16-10]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제도 평가	7.15
	산업사업평가과	91	[사업평가 16-11] 농식품 수출지원 사업 평가	7.27
	행정사업평가과	92	[사업평가 16-12]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	7.28
	공공기관평가과	93	[사업평가 16-13] 공공기관 출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7.29
	경제사업평가과	94	[사업평가 16-14] 공적 연기금 책임투자 평가	8.31
	경제사업평가과	95	[사업평가 16-15] Post-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 및 해외배출권 확보 방안 분석	9.1
	사회사업평가과	96	[사업평가 16-16] 일학습병행제 성과 평가	9.5
	행정사업평가과	97	[사업평가 16-17] 경찰인력 증원 및 운용 평가	9.6
	행정사업평가과	98	[사업평가 16-18]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9.7
	공공기관평가과	99	[사업평가 16-19] 공공기관 요금체계 평가	9.8
	산업사업평가과	100	[사업평가 16-20] 사회기반시설 투자정책 평가	9.22
	사회사업평가과	101	[사업평가현안분석 제59호]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현황 및 개선과제 - 수송 및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10.6

실·국	과	연번	제 목	발간일
사 업 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102	[사업평가 16-21] 공공 기후금융 정책 평가	11.18
	행정사업평가과	103	[사업평가 16-22] 국방 전력지원체계 조달사업 평가	11.22
	산업사업평가과	104	[사업평가 16-23] 농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 평가	12.21
	산업사업평가과	105	[사업평가 16-24] 미래성장동력 정책 평가	12.22
	행정사업평가과	106	[사업평가 16-25] 시설물 안전관리 평가	12.27
	행정사업평가과	107	[사업평가현안분석 60] 지방교육재정 운용 분석	12.28
	경제사업평가과	108	[사업평가현안분석 제61호] 공공갈등 관리현황 분석 - 국회의 갈등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12.29
	사회사업평가과	109	[사업평가 16-26] 저출산 대책 평가 I [총괄]	12.30
	사회사업평가과	110	[사업평가 16-27] 저출산 대책 평가 II [정책 우선순위]	12.30
	사회사업평가과	111	[사업평가 16-28] 저출산대책평가III [정책환경]	12.30
	사회사업평가과	112	[사업평가 16-29] 저출산 대책 평가 IV [일자리]	12.30
	사회사업평가과	113	[사업평가 16-30] 저출산 대책 평가 V [가족·양육]	12.30
	사회사업평가과	114	[사업평가 16-31] 저출산 대책 평가 VI [교육]	12.30

다. 특별·연구·기획 보고서

실·국	과	연번	제 목	발간일
예 산 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115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 결과보고서	11.7
경 제 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116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 결과보고서	8.16
	세제분석과	117	201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결과보고서	11.10
	세수추계2과	118	[연구보고서 제20호] 조세특례평가 방법 연구	11.21
	재정정책분석과	119	[연구보고서 제21호] 재정지출의 분야별 경제적 효과분석 모형 연구	11.30
사 업 평가국	행정사업평가과	120	[제20대 국회 개원] 재정사업평가와 사례	6.3
	사회사업평가과	121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 인구·복지·재정: 넥스트 챌린지 결과보고서	8.26
	경제사업평가과	122	[NABO-UNEP FI 국제공동세미나] ‘기후환경규제와 산업·금 융의 변화’ 결과 보고서	12.21

라. 정기간행물

실·국	과	연번	제 목	발간일
기 획 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	123	예산준추 2015년 겨울호 (통권 제41호)	2.4
	기획협력담당관	124	NABO 2015 연차보고서	3.4
	기획협력담당관	125	예산준추 2016년 봄호 (통권 제42호)	5.27
	기획협력담당관	126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제5권 1호	5.31
	기획협력담당관	127	예산준추 2016년 여름호 (통권 제43호)	7.29
	기획협력담당관	128	예산준추 2016년 가을호 (통권 제44호)	11.4
	기획협력담당관	129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제5권 2호	11.30

□ 기획·조정

박장호 기획관리관

윤동준 기획협력담당관

□ 자료 수집

이종민 기획협력 1담당

이상오 기획협력 2담당

고준혁 예산·서무 담당

황용준 기획 담당

오지은 감사·대외협력 담당

송혜진 교육·법무·연구용역 담당

박승지 의원요구자료·홈페이지 담당

정명호 정보화 담당

정상식 홍보·편집 담당

김민재 홍보·편집 담당

손영진 홍보·편집 담당

□ 편 집

정상식 김정선

NABO 2016 연차보고서

발 간 일 2017년 6월 5일

발 행 인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인 박장호 기획관리관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 쇄 성지문화사 (TEL 02·2273·5090)

ISBN 978-89-6073-986-4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7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

Annual Report of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